

2022 년

ESG 동향 및 주요 내용



투스론티터 로앤비

2022 년 ESG 동향 및 주요 내용 LAWnB IP Exclusive Report 는 로앤비의 [로펌 리포트] 자료를 엮어 발행하였습니다. 로펌리포트는 각 로펌의 동의 하에 본문을 게재하였습니다. 본 자료의 무단전제 및 상업적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LAWnB IP Exclusive Report:

2022 년 ESG 동향 및 주요 내용

2022 년 ESG 동향 및 주요 내용 LAWnB IP Exclusive Report 는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ESG, 즉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에 대한 국내외 동향과 주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ESG 에 대해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ESG 경영활동 보고서 공시 의무화 등을 통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정부차원에서 기업규모와 업종별로 차별화된 내용을 담은 K-ESG 가이드라인 발간과 각 행정부마다 각종 정책 및 규제개선 방안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5 년부터는 2 조원 이상 자산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ESG 정보공시 의무화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ESG 지표 반영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2030 년부터는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ESG 추진 전담조직은 물론 관련 정책과 목표를 선언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융, 헬스케어, 화학 및 소재,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 전기, 전자 및 반도체, ICT 서비스, 식품 및 음료 등 각 산업 분야별로의 ESG 최신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규제 및 정책을 고려해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ESG 관련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국가간 정책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이를 살펴보고, 관련 기업들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춰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LAWnB IP Exclusive Report 에 포함된 로펌 리포트는 로앤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리포트를 많은 분과 공유할 수 있도록 게재를 동의해 주신 각 로펌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투스너로이터 로앤비

정보제공 동의 로펌 (가나다순)

법무법인(유한) 광장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한) 바른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올촌	법무법인(유) 지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인(유) 화우	

Table of Contents

LAWnB IP Exclusive Report: 2022 년 ESG 동향 및 주요 내용

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	3
ESG 본부 이슈리포트	9
한국거래소의 ESG 지수 발표와 ESG 관련 상장지수펀드 동향	28
ESG 경영과 취업규칙	31
Focus sector	34
금융 산업	34
헬스케어 산업	41
화학 및 소재 산업	49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57
전기, 전자 및 반도체 산업(ICT 하드웨어)	64
식품 및 음료(F&B)	76
🌐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	83
🌐 글로벌 ESG 공시 동향 -美 SEC 기후공시안의 주요내용	107

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

법무법인(유) 지평

임성택, 정영일, 지현영

JIPYONG 법무법인 지평

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

"ESG 관련 규제개선 방안, 입법 및 개정안 등 국내 ESG 소식 및 주요 뉴스를 최신순으로 엮은 리포트입니다."

- 2022 년 10 월 3 주 -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제 1 차 중소기업 분야 규제개선 방안'과 금융위원회의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방안'을 소개해 드립니다.

01. 중소기업부는 지난 10 월 17 일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숨은 규제'를 개선하고 창업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저해하는 '허들 규제'를 타파하는 내용을 담은 '제 1 차 중소기업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함

- 정부는 '숨은 규제' 타파 방안으로 인증·검사 제도를 개선함. 유사 인증평가나 경미한 사항 변경의 경우 평가 절차 면제, 민간 시험·검사기관 확대 등을 통해 평가비용 절감 및 시간 단축을 유도할 예정임. 구체적으로 환경표지 인증의 경우 동일 상품에서 단순한 디자인이나 포장 단위 등을 변경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함.
- 허들 규제를 개선하여 창업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확대함. 예컨대,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기 위한 안전성 확인 실증을 거쳐 성능 기준을 마련할 방침임. 또한 이륜 전기자전거의 모터 정격출력 기준을 350W 에서 500W 로 완화함.
- 또한 공공조달에 있어 직접생산 확인기준 등 절차개선을 하고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와 관련한 제도도 개선할 예정임.

02. 금융위원회는 지난 10 월 6 일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던 회계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회계투명성은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방안'을 공개함

- 외부감사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산 1 천억 미만의 소규모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를 추진하고, 상장사 수준의 회계규제를 적용받는 대형 비상장사 범위를 축소하며, 소규모 비상장회사에는 간소화된 별도 감사기준을 적용함.
- 거래소에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회계기준 질의회신 작성 지원, 재무제표 작성 컨설팅, 감사계약 애로사항을 지원함.
- 한편, 규제개선에 상응하여 경영진 등의 회계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시를 내실화하고, 회계부정 신고포상금을 확대함.

- 2022 년 9 월 3 주 -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 재활용 규제 개선 동향과 금융감독원의 금융권 기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스트레스테스트 추진 소식에 대해 소개 드립니다.

01. 지난 8 월 31 일부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 규제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및 이산화탄소 포집물의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행정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임

- '순환자원 인정제도'란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로 그 인정기준이 까다로워 제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기존에는 법률에 정해진 환경성·유가성(有價性) 기준뿐만 아니라 시행령에 따른 9 개 기준까지, 모두 11 개 기준을 충족해야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었는데, 9 개 기준을 △소각·매립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되지 않을 것, △신청 당시 인정받은 용도로만 사용할 것 등 2 개 기준으로 대폭 축소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8 월 31 일부터 그간 재활용 가능 유형이 연료(보일러 보조연료) 제조로만 규정되어 있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 기술'로 포집된 이산화탄소로 골재, 시멘트, 콘크리트 등 건설용 소재를 만들거나 고무, 섬유 또는 합성수지 제품을 제조하는 것도 재활용 가능 유형에 추가 확대됨.

02. 금융감독원은 내년 금융권에 기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추진한다고 밝힘

- 기후 시나리오 분석 및 스트레스테스트가 금융부문 기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 감독당국은 각국의 자연환경 및 탄소배출정책 등에 기반한 기후 시나리오 분석 및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중임.
- 금융감독원은 국내 10 개 은행 및 보험사가 참여하는 '기후 시나리오 공동작업반'을 구성함. 내년 상반기 기후변화 리스크관리 협업을 위하여 설립된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 협의체(NGFS, Network of Central Banks and Supervision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에서 제공하는 6 가지 표준 기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국내 사정을 반영한 기후경제 시나리오 개발을 토대로 하반기부터 금융권에 기후 스트레스테스트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2022 년 9 월 1 주 -

공개된 제 10 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과 9 월 1 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 전력 거래 등에 관한 고시」를 소개합니다. 또한 제정될 예정인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대해서도 전해 드립니다.

01. 지난 8 월 30 일 '제 10 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하 '실무안')이 공개됨. 실무안은 2030 년 국내 전력공급비중과 관련해 원전은 계속운전, 신규 원전 반영으로 발전량 비중 32.8%(제 9 차 25%)로 상향하고, 신재생은 주민 수용성,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21.5%(제 9 차 30.2%)로 조정하는 것으로 전망함

-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 년 단위로 15 년 동안의 전력수급 계획을 정하는 법정 계획임. '36 년 최대전력수요는 117.3GW 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2022 년부터 연평균 1.4% 증가를 전제로 함. 지난 9 차 계획에서는 전력시장 내 수요만을 전망했다면, 금번 10 차 계획에서는 총수요 전망체계로 전환하여 전력시장 내 수요뿐만 아니라, 한전 PPA, 자가용 태양광을 포함한 총수요를 전망한 뒤 자가용 발전량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기준수요를 산정함으로써 태양광발전의 증가에 따른 변동성에 대응하고자 하였음.
- 실무안 내용 및 수치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산업부는 총괄분과위원회의 위 실무안을 바탕으로 (i) 전략환경영향평가, (ii) 관계부처 협의, (iii) 정부초안 마련, (iv) 국회 상임위 보고, (v) 공청회, (vi) 전략정책심의회로 구성된 후속절차들을 거쳐 제 10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연내에 확정할 예정임.

02.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사업자의 직접 전력 거래 등에 관한 고시」를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직접거래가 허용되는 발전원은 글로벌 RE100 캠페인과 동일하게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로 한정하였으며, 전기사용자의 규모는 당초 1MW 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300kW 이상으로 확대함.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많아 남는 전기는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반대로 부족한 전기는 전력시장 또는 한전을 통해 구입할 수 있게 함.
- 일정규모 이상(20MW)의 설비는 발전량 중 일부를 직접 PPA 로, 나머지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분할거래'를 허용함. 또한 직접 PPA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력거래소가 부과하는 거래수수료를 3 년간 면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은 녹색프리미엄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망 이용요금을 1 년간 지원할 계획임.

03. 정부가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 기본법')을 제정해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에 대응할 예정임. 해당 법안을 근거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에 재정·세제·금융지원도 추진할 방침임

- 기획재정부 1 차관은 8 월 19 일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 단체를 대상으로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함. 정부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양분화되고, 미국이 인플레이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등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 위기에 대한 지원·대응 방안을 부처별 법률에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함.
- 이러한 기본법 제정은 국정과제('22.5) 및 경제정책방향('22.6) 등을 통해서도 발표된 바 있으며, 향후 정부는 경제 단체와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 애로나 건의 사항 등을 최대한 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임.

- 2022 년 6 월 4 주 -

입법예고 중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근로제도 변경에 관한 내용을 전해 드립니다.

01. 지난 6 월 13 일 국토부가 공공기관에만 제공해왔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전산자료를 민간기관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함. 이를 통해 민간의 건물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참여 활성화는 물론, 건축에너지분야의 새로운 시장 개척을 선도할 예정임

-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정보체계로, 그간 구축된 전산자료는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제공되어 왔음. 최근 에너지절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및 기업투자 가치평가에 있어 ESG 지표의 중요성 부각 등으로 민간에서의 전산자료 활용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필요 시 민간기관에도 전산자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세부절차를 마련함.
- 기존의 공공기관의 전산자료 이용신청 시 효율성이 떨어지는 관련 행정기관의 사전심사 과정을 생략하도록 개선하여 전산자료 이용신청이 용이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며, 오는 7 월 18 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02. 지난 6 월 10 일 기획재정부는 노동이사제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담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이에 따라 8 월부터 공공기관에서는 '노동이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 이번 개정안은 2 월 3 일 공표된 공운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당초 목적대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도입·운용될 수 있도록 마련함. 공운법 시행령은 노동이사 선임절차와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였음.
- 8 월 4 일부터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공공기관부터 차례로 시행될 예정이며, 해당 기관에 3 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1 명을 선발해 비상임이사로 임명해야 함.

03. 지난 6 월 16 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중 하나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 발표됨. 주 52 시간제와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개편할 예정임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52 시간제'를 개편하여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일주일보다 길게 잡아 평균 주 52 시간을 맞추는 것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예정임. 더불어, 유연근로제 등과 같이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임.
- 현재 연공급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확산할 예정임.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신설하여 직무별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수요에 걸맞은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을 보급하며, 각 사업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평가체계를 도입할 계획임.

- 2022 년 6 월 2 주 -

최근 공포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과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하 '기후기술법')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 배상이 결정된 환경분쟁사건도 소개드립니다.

01. 지난 6 월 10 일 개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 공포되었음. 개정

수소법은 청정수소 정의 및 인증제도,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화,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도입 등의 제도 구축을 통해 청정수소 사용을 촉진하고 탄소 중립 실천에 기여하고자 함

- 청정수소, 수소발전, 수소발전사업자 및 수소가스터빈의 정의규정을 신설(제 2 조제 7 호의 2 부터 제 7 호의 4 까지 및 제 10 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청정수소의 개발·생산·보급을 명시함(제 3 조제 1 항).
- 온실가스 배출 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청정수소를 인증하고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제 25 조의 2), 향후 청정수소 인증·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도 이루어질 예정임(제 25 조의 4).
-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수소판매·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도록 하고(제 25 조의 5),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개설하는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해 수소발전량을 구매 또는 공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 25 조의 6).

02. 지난 6 월 10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후변화대응 여건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하 '기후기술법')이 공포되었음

- 현행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5 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후변화대응은 기술개발 수요의 변동성이 큰 영역으로 한번 수립한 기본계획을 5 년 동안 변경 없이 유지하도록 할 경우 당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기후변화대응 여건의 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는 취지임.

03. 풍력발전기가 가동될 때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 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결정을 내린 첫 번째 사례가 나왔음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22 년 5 월 전남 영광군 마을 주민 163 명이 풍력발전사업자 영광풍력발전을 상대로 제기한 저주파 소음 피해 사건에 대해 사업자에게 1 억 3800 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음.
- 사안의 경우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도가 환경피해 인정 기준보다 상당부분 초과했으며, 환경영향평가 권고 기준 또한 따르지 않은 정황도 발견됨. 향후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이 추가로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SG 본부 이슈리포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이상봉, 기소현, 노현철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ESG 본부 이슈리포트

"ESG 관련 각 행정부 동향 소개 등을 포함한 국내 ESG 이슈들을 최신순으로 엮은 리포트입니다."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 2022 년 VOL.38 -

고용노동부 - 소규모(50 인 미만) 기업에서 쉽게 따라 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안내서 제작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50 인 미만 고위험 4 개 업종에 속하는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이하 '가이드')」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가이드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C. 2511),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C. 134), 육상화물취급업(H. 529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N. 74100)이며, 4 종의 가이드에서는 각 업종에서 발생한 주요한 중대재해(사망사고)의 발생 원인을 전체 공정 흐름도에서 명확하게 제시하여 재해발생 원인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각 업종별로 중대재해(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특별안전보건 교육의 내용, 비상시 조치매뉴얼 등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서식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현장의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은 철강재 또는 비철금속재로 건물, 교량, 철탑 및 기타 금속 공작물과 같이 조립·설치·축조될 수 있는 금속 구조재를 제조하는 사업이며, 1 만 3 천여 개 사업장에서 6 만 3 천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주요 작업공정은 절단, 용접·가공, 도장 및 출고로 이루어지는데, 철강재 등 원자재의 운반, 인양 작업시 끼임과 떨어짐 등에 의한 사망사고 위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가이드에서는 공학적 방법(방호덮개, 수리 등 비정형 작업 시 전원자동 차단장치 설치 등)부터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마련 등 관리적 방법까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은 각종 섬유제품을 정련, 표백 염색, 수축, 보풀 내기 및 기타 정리 가공하는 사업으로 2 천여개 사업장에 1 만 4 천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며 통상 원단의 입고 및 전처리, 염색 등 가공, 검사·포장 및 출고의 공정을 거칩니다. 재해분석 결과, 위 업종에서는 섬유가공 기계, 보일러 등 설비기계에 의한 끼임과 폭발, 섬유 운반기계 수리 중 떨어짐에 의한 사망사고 위험이 높아 가이드에서는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주요 공정별 끼임과 폭발, 떨어짐에 대한 예방대책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상화물취급업은 화물을 운송장비로 적재 및 하역하는 사업으로 1 만 4 천여 개 사업장에서 6 만 2 천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작업은 통상적으로 화물의 분류와 적재(상하차), 포장·체결 및 운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육상화물취급업은 화물차 상부에서 포장 및 체결 시 추락위험, 화물의 상하차 작업 시 로프파단 등 화물결속 불량으로 화물 무너짐에 의한 사망사고 위험이 높다. 이러한 위험요인의 개선을 위해 전용 승강 설비의 설치·이용, 로프 등 결속기구의 손상, 부식, 변형점검이 필수적이며, 로프 풀기, 포장 덮개 벗기기 작업 시 적재함 등의 낙하위험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하고 작업해야 합니다.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은 대도시 지역의 고층건물, 고층아파트 등의 내외부 청소작업, 경비업무,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13 만여개 사업장에서 73 만 4 천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업종에서는 보수작업 및 청소작업 중 사다리, 계단, 개구부 등에서 추락이나 넘어짐에 의한 사망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이드에서는 이러한 위험요인 예방에 초점을 두고 고소작업, 사다리 작업 및 달비계 작업 시 추락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기사 소개

1. 공급망 실사법으로 부르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이 올 연말쯤 유럽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기관들의 대응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급망 실사법이 올 연말 유럽의회를 통과한다면 이 법은 2024 년 공식 발효될 예정이고, 2024 년 대기업, 2026 년 중견기업이 법 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또 EU 27 개 회원국은 당장 내년부터 각 국가의 실정에 맞는 관련법을 의무적으로 제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EU 의 공급망 실사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며, 특히 중소기업은 이 법의 직접적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대기업 납품 등 공급망을 통한 간접적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산업부와 무역보험공사·KOTRA(코트라) 등은 '수출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협의회'를 발족하였으며, 산업부는 2022 년 50~100 개 업체를 선정하고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23 년 정식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KOTRA 는 50~100 개가 선정되면 수출사업 관련 비용할인, 사업선정 우대 정책을 하기로 계획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산업부의 시범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KOTRA 역시 공급망 실사법에 대응할 중소·중견기업 지원 사업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라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산업부의 2023 년 관련 예산은 13 억여원에 불과하고 KOTRA 는 내년에 자체 편성한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정부가 국내 탄소배출 검증 결과를 국외에서도 통용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30 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방안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탄소발자국 검·인증제도 등이 포함됩니다. 탄소발자국은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합니다. 정부는 우선,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면 유럽연합과 협상해 국내 배출권거래제 검증 결과를 인정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며, 국내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과 국내 배출권 가격을 고려한 감면협약 체결 등도 협상할 계획입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 내 생산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이 제도가 시범 실시되는 2023 년부터 기업들은 철강·알루미늄 등 수출품의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2027 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인증서' 구매 의무가 시행돼 비용이 부과됩니다. 현재 기업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분야에 대해서만 국제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어 있지만, 정부는 국내 탄소발자국 검·인증 결과가 국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유럽연합(EU)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수정안의 규제품목 확대를 신중히 고려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 서한을 전달하였습니다. CBAM은 EU가 제품을 수입할 때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로 수출기업에는 일종의 추가 관세로 작용하는데, EU는 내년 1월부터 CBAM 시범운동을 개시해 2025년 전면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 EU 의회를 통과한 CBAM 수정안이 초안보다 규제품목이나 범위가 확대되면서 한국 등 수출 비중이 큰 국가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경련에 따르면 CBAM의 규제품목은 초안에서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등 5개였지만 수정안에서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등 4개가 추가돼 총 9개로 늘었습니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연료를 정제하거나 생물원료에 기반한 유기 화학품까지 일률적으로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은 탄소중립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예외 조항 적용 등 규제품목 선정기준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습니다.

- 2022 년 VOL.37 -

환경부 - 탄소중립의 길잡이,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9월 25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 중 하나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하였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입니다. 평가대상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 및 사업입니다. 10개 분야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으로, 이 중에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 3개 분야는 내년 9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부칙의 적용례(제4조)에 따라, 제도 시행일 이후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평가 대상이 됩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되, 기후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는 환경부(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검토도 함께 요청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기후분야 전문기관과 함께 평가서에 제시된 감축목표, 저감방안 및 적응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부문별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힘을 쏟을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환경부 - 사업장폐기물 전과정 관리 강화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사업장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10월 1일부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전송제도'와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건설폐기물 등의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량 과다 입력, 허용보관장소 외 불법 방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올해 10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내년 10월 1일에는 지정폐기물, 2년 후인 이듬해 10월 1일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적용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9 년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고, 올해 6 월에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습니다. 같은 날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는 의료폐기물의 인계내역을 임의로 등록하는 행위 등을 근절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은 병·의원, 한의원, 연구소 등 약 9 만 개의 의료폐기물 배출업체들입니다.

아울러 사업장폐기물 처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10 월 1 일부터 1 년 동안,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는 같은 날부터 6 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 소규모(50 인 미만) 기업에서 쉽게 따라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안내서 제작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9 월 29 일(목) 50 인 미만 고위험 4 개 업종에 속하는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이하, '가이드')」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가이드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C. 2511),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C. 134), 육상화물취급업(H. 529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N. 74100)입니다. 4 종의 가이드에서는 각 업종에서 발생한 주요한 중대재해(사망사고)의 발생 원인을 전체 공정 흐름도에서 명확하게 제시하여 재해발생 원인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또한, 각 업종별로 중대재해(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내용, 비상시 조치매뉴얼 등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서식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현장의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기사 소개

1. 환경부는 원전을 포함하는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개정안을 20 일 공개하면서 원전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원전은 현시점에서 가장 싸고 탄소배출량이 제일 적은 발전원으로 평가되지만, 안전과 폐기물이라는 문제를 가진 발전원입니다. 이에, 원전이 포함되면 그린워싱을 방지한다는 녹색분류체계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개정안은 EU 와 비슷하게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영은 '2031 년 이후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 존재와 그 실행을 담보할 법률 제정' 등을 만족해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인정한다는 조건을 달았는데, ATF 상용화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난관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편, 녹색분류체계는 투자자 등이 녹색경제활동을 구분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강제되는 규정이 아니며, 원전 건설과 운영은 '국가프로젝트' 성격이 강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다고 추진되거나 포함되지 않는다고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상징적 의미만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 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기준 초안에 대한 각국의 의견 청취 결과 대부분 국가들이 지속가능성 공시를 일반목적 재무보고(사업보고서)에 포함하는 안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사업보고서와 지속가능성 공시를 따로 하자는 한국과는 다른 의견이라 향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핵심사항만 사업보고서에 기재하고 공시사항 전반은 지속가능성경영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우 통상 3 월에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뒤 지속가능보고서는 3 분기에 발간하고 있어 향후 기간 조정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오세훈 서울시장의 28 일 발표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더 맑은 서울 2030'을 통해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차, 수소차 전환을 목표로 명시했습니다. 2035 년까지 우선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녹색교통지역 운영을 제한하고 신규등록도 금지하며, 2050 년에는 이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택배용 화물차, 배달용 이륜차, 마을버스, 청소차 등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고, 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운행제한과 조기폐차 대상 경유 공해차량 기준을 현행 5 등급 차량에서 4 등급 차량까지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 2022 년 VOL.36 -

환경부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 초안 공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 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공개하였습니다.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 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며, 환경부는 지난해 69 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① 온실가스 감축, ② 기후변화 적응, ③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 자원순환, ⑤ 오염방지 및 관리, ⑥ 생물다양성 보전

69 개 경제활동 중에서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64 개 경제활동은 '녹색부문'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5 개 경제활동은 '전환부문'에 각각 포함되었으며,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발표 당시 원전의 경우 유럽연합(EU) 등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원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이라는 측면을 반영하여 최근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에 원전을 포함*시켰습니다.

*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 보완 기후위임법률(유럽연합 2022/1214) 발의('22.2.2), 최종통과('22.7.11)

이러한 국제 기조를 반영해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22.7.5.)'을 수립하였으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도 원전 포함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커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3 개의 원전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이번 초안은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를 참고하되, 국내여건을 감안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세부 협의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으며 그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원자력 연구개발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건설 및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
- 사고저항성핵연료 적용 및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세부계획·법률제정 조건을 달성해야 녹색에 해당
- 원전의 안전성·환경성 향상 촉진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 기대

환경부는 이번 초안 공개 이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주요기사 소개

1.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국내 30 대 그룹 중 ESG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한 15 개 그룹의 ESG 활동을 분석한 'ESG 위원회 안건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주요그룹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위원회는 주로 지배구조 관련 이슈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 월부터 지난 6 월까지 15 개 그룹의 48 개 위원회는 평균 5.4 번씩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이사 수는 평균 5.5 명으로, 이들의 위원회 참석률은 대단히 높은 편(98.1%)이었습니다. 전체 안건을 분류해 보면 ESG 전체 방향에 관한 관리안건(34.9%)과 지배구조 안건(32.3%)의 비중이 컸고 이어 일반 경영 및 투자 안건(17.4%), 사회(S) 분야(10.2%), 환경(E) 분야(4.4%) 순이었습니다. ESG 회의에서 환경 등에 관한 논의가 중심을 이룰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회의에서 주로 논의되는 내용은 지배구조(G) 관련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내부거래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검토하고 이를 승인(총 137 건, 전체 안건의 20.9%)하는 게 ESG 위원회의 주요 역할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열 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승인한다거나, 내부 거래 실적을 보고하고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 용역거래를 승인하는 일 등이었습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사회공헌(46 건) 관련 내용이 주로 논의됐고 이어 안전 및 보건(12 건) 인권(4 건) 등의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환경 분야의 논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는데, 환경 분야에서는 탄소전략안건(17 건), 친환경 사업 관련 안건(12 건) 등이 다뤄졌습니다.
2. 국내 상장사들의 ESG 공시 의무화가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허위 ESG 공시인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ESG 포털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한 기업 중 포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기업은 총 120 곳으로 이는 지난해(80 건) 대비 40 건 증가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358 곳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한 해(236 건)보다도 50% 넘게 증가한 수준입니다. 현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는 시가총액 1 조원 이상 기업들에만 의무가 부과되고, 지속가능보고서는 모든 상장사에 대해 자율공시가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2024 년에 시총 5000 억원 이상 기업에까지 의무 공시 범위가 확대되고, 2026 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에 범위가 늘어나는 만큼, 허위 공시를 통한 그린워싱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ESG 공시제도가 확립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월마트나 HSBC, DWS 운용 등 우수 기업들이 허위 ESG 공시에 따른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국내 금융당국도 ESG 공시 의무 확대를 앞두고 허위 공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8 월 국제 컨퍼런스에서 "ESG 펀드 등의 상품 설명이 충분한지, 실제 운영이 공시내용과 일치하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며 "기업의 ESG 공시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체계적인 공시가 가능하도록 ESG 공시방안을 지속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공시 제도가 확립된 이후에도 ESG 공시에 대한 이해와 리스크 관리가 체계화되지 않는다면 과징금이나 소송과 같은 위험에도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3.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6 일 '제 4 차 K-ESG(환경·사회·지배구조) 얼라이언스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ESG 공시 정책 현황 및 향후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30 여개 위원사의 임원이 참석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ESG 라는 시대적 흐름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시-평가-투자에 이르는 ESG 생태계 전반에 걸쳐 제도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정책과제로 ▲ ESG 공시 관련 글로벌 논의 대응 ▲ 국내 ESG 공시제도 전반 정비 ▲ ESG 평가 투명·전문성 제고 ▲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 전환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2022 년 VOL.35 -**환경부 – 환경은 살리고 부담은 줄이는 환경규제로 바꾼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8 월 26 일 제 1 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습니다. 환경규제 혁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① 폐지, 고철, 폐유리 등 유해성이 적고 재활용이 잘 되는 품목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받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도록 개선합니다. 또한, 폐기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도입, 재활용환경성 평가 활성화 등을 통해 재활용 가능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열린(negative) 규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 ② 화학물질의 유·위해성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 영업허가 등의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화학사고 위험이 크며 인체 접촉 시 바로 위험할 수 있는 급성독성 물질(고농도 황산 등)은 취급·보관시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사고위험은 낮지만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 인체에 영향을 주는 만성독성 물질(저농도 납 등)은 사고위험보다는 인체 노출 저감에 집중하여 관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③ 그간 개선 요구가 컸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소통형 규제로 개선합니다.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스크리닝(screening)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여 평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사업자와 협의기관이 함께 수십 년간 누적된 평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사의 범위·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사업자가 필수적인 조사에 집중할 수 있게 개선할 계획이고, 모바일 앱을 통해 평가 진행상황을 지역주민과 사업자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 ④ 탄소중립·순환경제 등 핵심 환경정책 목표와 직결된 규제는 우선 혁신하고 필요한 지원도 병행하여 녹색사회 전환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활동 촉진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정비합니다. 신설·합병기업에 불리한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할당 조건을 합리화하고, 해외 감축실적의 국내실적 전환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포집 이산화탄소에 대한 폐기물 규제 면제 및 재활용 유형 신설 등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도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열분해유, 바이오가스 이용을 확대하고 폐배터리 재활용을 활성화하며, 환경인증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규제준수 지원 등으로 녹색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환경부 – 규제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방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 9. 5. 정부서울청사에서 두 번째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환경부(장관 한화진)의 규제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 ① 플라스틱 열분해 산업 활성화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합성수지와 합성섬유 등 석유화학제품 원료인 '나프타'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에 추가하고 열분해유 제조시설과 열분해 소각시설을 분리해 제조시설은 재활용시설로 설치·검사기준을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열분해와 같이 화학적으로 재활용된 플라스틱 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도 내년부터 폐기물 분담금을 감면할 계획이며, 기타 인센티브 확충, 재정지원 확대 및 산업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 ②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우선,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개선 및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을 통해 순환자원 선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순환자원 선인정 대상으로 고시해 각종 폐기물규제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차 등록 시 배터리를 별도로 등록하게 하여 배터리가 전기차와 독자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배터리 제작-등록-운행, 탈거, 재활용 등 전 주기 이력을 공공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보공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나 폐배터리 재활용-재사용 제품이 공공조달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대상 포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수소차 셀프 충전 등 수소산업분야 19 개 규제 개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그 동안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소안전 규제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과제(19 건)를 선정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인 나머지 과제들도 관련부처 검토를 거쳐 올 4 분기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수소 전주기별 규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제 지도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번에 개선되는 수소안전 분야 주요 규제혁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충전소 밖의 보호시설(주택 등) 보호를 위한 방호벽의 경우 특정 유형(철근콘크리트제)의 방호벽만 허용되고 있는데, 방호벽 강도가 동등한 경우, 다양한 유형의 방호벽도 설치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 ② 수전해 설비 내 핵심부품인 스택(Stack)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내구성 검증을 위해 파열시험 실시대상인데, 파열시험 대신 컴퓨터시뮬레이션(전산구조응력해석) 등을 통해 스택의 내구성 검증하는 검사 기술 및 기준 개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③ 펄플라스틱 등 연료의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는 현행 「수소법」하위 가스기술기준 상 '수소추출설비'범위에 미포함되어 있는데, 다양한 수소생산설비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도 수소추출설비 범위에 포함하고 안전기준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④ 기체천연가스(NG) 배관과 달리 액화천연가스(LNG, -162 도) 배관을 사업소밖에 설치하기 위한 안전기준부재하므로, 액화수소 생산 및 LNG 냉열 활용 등 신사업 지원을 위해 LNG 배관 설치 및 안전기준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직접 PPA 제도 도입으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 폭이 넓어진다.

이번 달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 PPA 제도'가 시행됩니다. 직접 PPA 제도가 시행되면,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로부터 직접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직접거래가 허용되는 발전원은 글로벌 RE100 캠페인과 동일하게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로 한정하였으며, 전기사용자의 규모는 당초 1MW 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300kW 이상으로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많아 남는 전기는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반대로 부족한 전기는 전력시장 또는 한전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 PPA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력거래소가 부과하는 거래수수료를 3년 간 면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은 녹색프리미엄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망 이용요금을 1년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20MW)의 설비는 발전량 중 일부를 직접 PPA 로, 나머지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분할거래'도 허용됩니다.

주요기사 소개

1.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과 수소연료전지까지 포함한 CF100(무탄소 전원 100% 사용)이 기업 탄소중립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RE100 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 년까지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로 바꾸자는 글로벌 기업들의 캠페인입니다. 그러나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은 부담이 크고 현실성도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RE100 을 포괄하는 CF100 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CF100 은 원전과 연료전지까지 포함한 무탄소 전원을 사용하는 캠페인으로 구글과 UN 에너지, UN 산하 지속가능에너지 기구(SE4ALL) 등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업계에선 CF100 에 대한 인증제도가 구체화되면 RE100 보다 가입 수요가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정부도 무탄소 전원 사용을 인증해줘서 기업이 제품을 해외 수출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에너지공단 같은 정부 기관에서 CF100 을 인증해주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 탄소감축을 위한 핵심 제도인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4 일 미국 파생상품 거래소 ICE 에 따르면 유럽탄소배출권(EUA)의 t 당 선물 가격은 이달 2 일 기준 77 유로를 기록했는데, 열흘 전 100 유로 근처까지 폭등한 배출권 가격은 다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탄소배출권의 변동성이 커진 건 러시아의 천연가스 무기화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에 대해 변칙적으로 가스 공급 제한을 발표하고 있고, 가스 공급 제한 이슈가 터질 때마다 배출권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출권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가나 기업의 불확실성이 과도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일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올 들어 탄소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향후 배출권 가격의 급등락이 이어진다면 한국에서도 배출권 제도에 대한 위기론이 제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 동반성장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 일 공동으로 '2022 년 동반성장 심포지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EU 등 주요 국가들의 공급망 실사법 제정에 대비한 동반성장과 ESG 의 효과적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동반성장과 ESG 의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논의하였습니다. 공급망 실사법은 대기업 등이 공급망에 포함된 협력사의 인권과 환경 문제 등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하도록 하고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주제발표에서 문두철 연세대 교수는 "공급망 실사가 글로벌 ESG 의 쟁점이 되면서 대·중소기업 간 수평적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기업 간 협력의 전제인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자원과 성과의 공정한 공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력사와 대기업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은 ESG 경영 성공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1 일 ECC 에서 ESG 및 녹색금융을 주제로 열린 국제 콘퍼런스 개최사에서 "ESG 위상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금융회사들이 ESG 펀드를 공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독일 등 해외 주요 금융감독당국은 고객에게 설명한 대로 ESG 금융상품을 운용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 강력한 감독 조치를 취한 바 있고 금감원도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최근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기후리스크 대응을 위한 감독원칙을 발표했다"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제적 논의와 업권별 특성 등을 감안한 감독정책을 정립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 2022 년 VOL.34 -**환경부 - 탄소중립 촉진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 착수**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결성하고 8월 16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 도입 등 국제 사회의 탄소 무역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 등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할당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협의체는 관계부처,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종별 대표기업 및 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3개 분과(제도개선, 유상할당, 배출효율기준할당)로 구분해 운영하면서,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온실가스 감축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의 의견을 듣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혜택 확대, 배출권시장 활성화, 불합리한 행정 부담 완화 등의 과제를 찾아낼 계획이며,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기업 지원 확대 방안과 탄소차액계약제도* 등 감축 신기술/신공정 도입을 위한 지원사업 다변화 방안도 고민할 예정입니다.

* 정부-기업 간 탄소가격 보장 계약을 통해 혁신적 감축기술의 조기 적용 등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투자 촉진

논의된 과제 중에 지침 개정으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연내 추진을 완료하고, 중장기 검토 과제는 차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주요기사 소개

1.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지난 4월 합의에 따라 8월 10일부터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를 시작했습니다. EU는 지난 4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석탄 수입 금지 결정으로 러시아산 석탄 수입의 80%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연간 매출로 환산하면 80억 유로(약 10조 7172억원) 규모입니다.
2. 글로벌 ESG 컨설팅 회사 ERM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 자발적 기후 공시에 사용하는 평균 비용은 기업당 67만 7000달러(약 9억원)로 나타났으며, 항목별로 살펴보면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공시 23만 7000달러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공시 15만 4000달러 △기타 기후 관련 분석·공시 13만달러 △내부 기후 리스크 관리 체계 14만 8000달러 △기후 관련 주주제안 대응 8만달러 △기후 관련 검증·감사 비용 8만 2000달러 수준입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규제 초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SEC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제품 생산 등 기업의 직접적인 활동으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스코프 1)과 전기, 스팀, 냉방 등 에너지를 통해 발생한 간접 탄소배출량(스코프 2)을 공시해야 합니다. 소비자와 협력사 등 기업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모든 탄소배출량인 스코프 3 공시 의무도 제한적으로 부과하였습니다. 실제로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의 지속가능성 공시 초안도 스코프 3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ESG 공시 압박과 높은 탄소배출 감축 목표는 기업들에 부담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국내 기업들이 'RE100' 가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RE100은 글로벌 기업들의 동참 요구가 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의 특성상 살아남기 위한 필수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RE100은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캠페인으로, 영국 비영리단체 더 클라이밋 그룹과 글로벌 탄소정보공개 이니셔티브인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가 협력해 지난 2014년 발족했습니다. 기업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더 클라이밋 그룹의 승인을 거쳐 가입이 확정됩니다.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는 더 이상 환경 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떠오른 것은 물론 생존을 좌우하는 사안으로 확산된지 오래입니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및 투자기관은 기업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어느 정도 노력하는지 평가할 때 RE100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투자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해외 고객사들의 동참 압박도 거센데, 폭염과 가뭄 등 기후 변화에 노출되면서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는 유럽·북미 시장의 요구가 강한 편입니다. BMW 나 애플 등은 국내 납품업체에 계약 의무를 부과하고 나섰으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기후 리스크 공시 의무화 등은 사실상 동참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를 비롯해 한국의 전력 사용량 상위 30 개 기업에서 지난해 사용한 산업용 전력은 102.92TWh 였습니다. 이에 한국의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43.09TWh 였으니, 이들 기업이 RE100 을 달성하려면 태양광·풍력 발전설비를 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즉 한국에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재생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기업들은 RE100 을 달성하고 싶어도 "재생에너지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4.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유럽의회는 2026 년 6 월까지 상장기업 이사회 구성원의 최소 40%는 여성을 비롯한 '과소 대표된 성'으로 채우기로 지난 6 월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기업들은 사외이사 중 40%, 전체 이사 가운데 33%를 여성으로 채워야 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EU 주요 상장사의 이사회에서 여성 비율은 30%를 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법은 자산 2 조원 이상 기업의 이사회를 특정 성별로만 구성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기업이 여성이사를 선임하고 있는데, 여성인력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른바 '중후장대 산업'에서 여성이사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대기업의 여성이사 확보는 아직 걸음마 수준인데, CEO 스코어에 따르면 지난 4 월 기준으로 자산 총액 2 조원 이상 상장사 172 곳 가운데 30 곳(17.4%)의 사외이사 전원은 남성이었습니다. 자산 2 조원 미만 기업 중 여성 사외이사가 1 명이라도 있는 기업은 8.2%(168 곳)에 불과했습니다. 재계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여성인력을 찾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법을 어겨도 처벌 조항이 없어 사실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은 기업들 발걸음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5. 유럽연합(EU)이 배터리 등 역내에서 거래되는 제품의 생산·이용·재활용 이력과 환경 규제 이행 여부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제품에 대한 디지털 이력 추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습니다. EU 는 배터리의 생산·이용·폐기·재사용·재활용 등 전(全)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 제도를 2026 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EU 는 배터리 재활용을 촉진해 안정적인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EU 의 환경 규제에 부합하는 배터리가 역내에서 거래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EU 는 더 나아가 역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디지털 상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도입 계획을 발표하는 등 디지털 이력 추적 시스템의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EU 의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단계별 제품 이력 데이터 축적을 통한 디지털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으며 독일은 EU 회원국 중 가장 먼저 배터리 여권 플랫폼 개발에 나섰습니다. BMW, 유미코어, 바스프 등 11 개 기업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배터리 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배터리 패스'(Battery Pass) 프로젝트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일본과 중국도 이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인 바, 우리나라도 EU 의 배터리 여권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정책을 벤치마킹한 '한국식 배터리 이력 추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2022 년 VOL.33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8 월 9 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1 년 8 월 17 일 공포, 2022 년 8 월 18 일 시행)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22 년 8 월 18 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그동안 휴게시설 미설치에 대한 제재 규정 없이 운영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20 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 억원 이상 공사현장) 사업장과 7 개 직종 근로자를 2 인 이상 사용하는 10 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②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 및 선임 자격 확대
사고재해율·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섬유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운수 및 창고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 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강화하여 기존 1 명에서 2 명을 선임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기준 변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22 년 8 월 18 일부터 총 공사금액 1 억원 이상 120 억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계약 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④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요건 강화
새로 등록하는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를 반드시 두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기존에는 건축·토목 분야 자격자가 있으면 석면해체·제거업자등록이 가능하였으나 보다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과 작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 보유가 의무화된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에 ESG·소부장 기술나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022 년도 산업통상자원부-포스코 기술나눔'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8 월 3 일부터 9 월 2 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술나눔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사업으로, 2013 년부터 현재까지 25 개 대기업·공기업 등이 기술제공 기관으로 참여하여 1,154 개 기업에 2,577 건의 기술을 이전하였습니다. 올해 포스코 그룹은 포스코,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케미칼,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등 5 개사가 기술나눔에 참여하여 환경, 에너지, 소재, 부품, 장비 등 5 개 분야에서 561 건의 기술을 공개합니다. 이번에 포스코로부터 기술나눔을 받고자하는 중소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에 게시된 공고에 따라 9 월 2 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0 월 중 기술이전 대상기업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주요기사 소개

1. 27 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주요기업·전문가 논의를 거쳐 CDP 위원회와 재생에너지 조달·인정 기준 변경을 검토·협약하기로 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단체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The Carbon Disclosure Project)위원회는 지난 2014 년 각 기업이 2050 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RE100 캠페인을 시작했고, 국내 21 개 기업도 여기에 동참하는 등 최근 관심이 부쩍 커졌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7%에 불과한데다 타

에너지원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기업이 부담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에 대한 세제 등 인센티브 지원과 함께 해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CDP 위원회와 협의해 구체적인 관련 정책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미국 상원이 7 일(현지시간)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가결 처리하면서 기후 단체들이 환영하고 있다고 CNBC 가 보도했습니다. 4300 억달러(약 558 조 3550 억원)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의료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이며, 특히 미국의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3690 억달러(약 481 조원)를 투입하게 됩니다. 또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농부와 목장주에 대한 인센티브, 전기차 세액 공제 연장, 청정 에너지 기술 및 에너지 효율에 투자할 국가기후은행 출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오는 12 일께 민주당이 장악 중인 하원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안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3. 국내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참여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캠페인의 이행 수단인 '전력거래계약(PPA:Power Purchase Agreement)' 계약 건수가 미미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RE100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지난해 10 월 21 일부터 PPA 제도를 시행했으나, 3 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제도가 시행된 이후 5 월 1 일 기준으로 PPA 계약은 단 2 건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처는 PPA 제도를 통한 전력 구매 계약이 저조한 이유로는 망 이용료 부과, 수수료 지불 등으로 인한 높은 전력 이용요금을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제도 정비, 투자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현행 경제발전 중심의 전력 거래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4. 증권사들이 ESG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해 '자발적 탄소배출권' 사업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정부가 2015 년에 도입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탄소배출권 과부족 할당 업체가 잉여 또는 부족한 탄소배출권을 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탄소배출량을 업체들이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거래할 수 있는 곳입니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탄소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이 배출권을 사고파는 장내시장과 규제 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거래하는 장외시장(자발적 시장)으로 나뉩니다. 그동안 배출권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650 개 기업과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SK 증권, 하나증권 등 5 곳만 거래가 가능했으나, 지난해 12 월 배출권 시장 확대를 위해 20 개 증권사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장내시장뿐 아니라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권가는 최근 확산하고 있는 ESG 경영 강화 기조와 배출권 수요 증가에 따라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으나, 투자 주체가 검증되지 않아 새로운 먹거리 부상은 미지수란 지적도 있는 상황입니다.

- 2022 년 VOL.32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원자력 포함 관련 원전산업계 의견청취

산업통상자원부는 22.7.2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관련 원전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내 원자력 포함 필요성과 관련 인정기준 등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22.7. 유럽의회는 원자력을 EU Taxonomy 에 포함하는 것을 의결하여

2050 년 Net Zero 등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해외 원전정책 동향 등을 고려할 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도 원자력의 포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금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원전업계의 의견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논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공시기준에 대한 한국측 의견서 제출

22.3.31.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IFRS S1 일반 요구사항 및 IFRS S2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 21.11. IFRS(국제재무보고기준) 재단 설립,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 중

ISSB 는 공개초안에 대해 22.7.29.까지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올해 말까지 위 2 개 기준에 대한 최종 기준을 공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은 ISSB 공개초안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한국측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위 의견서를 통해, 금융위원회는 정보제공의 시기·위치(채널)·범위 및 기준 시행시기 등 측면에서 기업 부담요인을 설명하였으며, 구체적인 지침·예시 제공, 공시 요구사항의 완화,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등 기준 적용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은 22.7.29. 공개초안에 대한 한국측 의견서를 ISSB 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ISSB 는 전 세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잠정) 올해 말에 S1(일반) 및 S2(기후 분야)에 대한 최종 기준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핵심주제별 한국의견 요약 >

공개초안 주요 내용	한국측 검토의견
<IFRS S1 일반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 등에 미치는 현재 예상효과)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양적 정보로 공시하고, 사업모델에 미치는 단기·중기·장기의 영향 정보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현가능성, 기업 부담, 정보의 신뢰성 측면에서 양적 정보 산출의 우려 존재 → 기업에 충분한 준비시간 부여 및 구체적인 지침·사례 제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기업) 재무제표와 동일하게 연결실체 기준으로 보고 - 가치사슬 전반과 관련한 중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중속기업·사업장까지 통합 관리하여 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 탄력적 적용 필요 - 가치사슬의 범위를 일정한 수준으로 축소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빈도) 재무제표와 동시에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경우 재무제표(3 월말)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통상 7 월 이후)의 공시시기가 다른 상황임을 설명하고, 충분한 준비시간이 필요함을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의 위치) 재무제표와 동일한 체계 (일반 목적재무보고*)하에 보고 * 한국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를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경우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공시 추가 시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기업의 법적 부담(예:소송 위험)도 증가할 우려 → 기업이 일반목적재무보고 또는 별도 서식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안 제안

공개초안 주요 내용	한국측 검토의견
<IFRS S2 기후관련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전반 지표) 산업을 불문하고 모든 기업은 Scope 3* 배출량을 공시 *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간접적인 배출량 (예: 협력사의 배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효익간 균형을 고려, Scope 3 공시는 해당 정보가 중요한 특정 산업에서만 요구하는 방안 제안 - 중소기업의 경우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 또한 고려할 필요
<IFRS S1 & S2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일) 미정 * 추후 최종 기준 발표 시 결정할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공시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국가별 공시환경 정비 등 충분한 준비기간 필요

주요기사 소개

1. 유럽연합(EU)은 지난 2 월 공급망 실사 기준 초안을 발표하였는데, 이에는 인권, 환경, 기업 이사회의 의무, 인센티브 항목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규정하는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내년 1 월 독일을 시작으로 '공급망 실사법'을 시행 본격화를 앞두고 있어 기업들도 기업 내부는 물론 협력사 공급망 강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EU 에서 활동하는 대기업뿐 아니라 해당 기업에 중간재를 납품하는 협력사까지 ESG 경영에 대한 실사를 받아야 하고, 미흡하면 시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ESG 실사법 시행으로 EU 내 약 1 만 2800 개사, 역외 4000 개사가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비교적 ESG 경영을 잘 수행하며 관리하고 있으나 협력사까지 기준 대상이 확대하면서 대기업들이 협력사 ESG 경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특히 중소 협력사의 경우 탄소배출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안전 문제관련 내부 전문가가 없어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2.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기업 선정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하반기 코스닥시장을 대표하는 30 여 곳의 기업을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로 선정해 별도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미국, 유럽 등은 국내보다 훨씬 엄격한 ESG 공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며 "코스닥 업체들에 모범이 될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ESG 기준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세그먼트 편입뿐 아니라 퇴출,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할 때도 ESG 기준을 감안하기로 하였으며, 기업지배구조보고서·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의 ESG 공시를 활용하고 ESG 평가기관이 매긴 평가 등급도 참고할 계획입니다.
3.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29 일)까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에 ESG 공시의 국제 표준인 '국제회계기준(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한국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며, ISSB 는 각국의 의견을 검토·반영한 뒤 올해 말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최종안을 공표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2025 년 코스피 상장사 중 자산 2 조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 년에는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배구조(Governance) 항목은 2019 년 자산 2 조원 이상 상장사에 적용한 이후 2026 년 전체 상장사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한편 이처럼 ESG 공시 시점은 결정됐지만, 그 기준 및 방식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계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말 공표될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전면 도입해 기준으로 삼을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현실화하면 선진국들이 수십년간 도출한 '신기후체제 룰'을 바탕으로 탄생한 기준을 그 어느 나라보다 빨리, 100% 도입하는 셈인 바, 학계와 산업현장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거 회계 분야에서 산업계와 심도 있는 논의 없이 국제 표준을 도입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봤는데 현 상황이 그때와 비슷하다는 의견입니다.

4. 환경부는 7. 18.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를 개편해 원자력발전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색분류체계는 정부가 제시하는 일종의 '녹색 투자 가이드북'으로, 원전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면 친환경·저탄소 투자로 인정받아 낮은 금리로 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강점을 지닌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켜 녹색 투자를 유인하겠다"고 하면서,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늦어도 8 월 초까지 수정된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발표한 뒤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9 월까지 체계를 확정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5.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가 포함된 유럽연합(EU) 친환경 투자 기준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가 내년 1 월 1 일 시행됩니다. 유럽의회가 7.6. 택소노미에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하는 EU 집행위원회 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는데도 원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한 것은 원전 없이는 화석연료에 더욱 의존해 탄소중립(탄소배출 제로·0) 달성이 어렵다는 현실론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택소노미는 특정 산업이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는지 규정한 목록입니다. '2050 년 탄소중립달성'이 목표인 EU 의 기후변화 목표에 적합한 투자 가이드라인인 셈인데, 여기에 포함돼야 친환경 관련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6. 처음 발표됐을 때 택소노미에는 원전과 천연가스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탄소배출이 많은 석유 석탄에서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곧바로 전환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급격히 높이고 화석연료 비중을 줄인 스페인 영국 등은 지난해 전기료 급등 같은 부작용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유럽의회는 택소노미 포함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서, 원전과 천연가스를 이에 포함시킨 것인데, 구체적으로 원전과 천연가스에 투자하려면 반감기가 수십만 년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마련 및 안전한 처분, 기존 원전 시설 개선 및 수명 연장, 사고 확률이 낮은 사고저항성 핵연료(ATF) 사용 등을 지켜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유럽 주요국은 원전 폐기에서 원전 유지 및 확대로 에너지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6 월 "정부가 보유한 전력공사(EDF) 지분을 기존 84%에서 100%로 확대하겠다"며 전력 생산 국유화를 선언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10 월 "2028 년부터 신규 원자로 6 기 건설을 시작해 2035 년에 새 원전을 가동시키겠다"며 원전에 10 억 유로(약 1 조 3300 억 원)를 투입하는 '프랑스 2030'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2022 년 VOL.31 -

환경부 -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마련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스열펌프(GHP)를 대기배출시설로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매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의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한 '대기환경보 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 월 30 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스열펌프 대기배출시설로 단계적 관리

2023 년 1 월 1 일부터 가스열펌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되며,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됩니다.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가스열펌프는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준비 기간을 고려, 법령 시행 시기를 2 년 유예한 202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줄이거나,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운영 중인 가스열펌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및 지원방안을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2023 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 합니다.

② 저공해자동차(전기 수소차) 의무운행기간 연장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의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를 2 년에서 5 년으로 늘렸습니다. 특히, 수출되는 경우에는 5 년을 기준으로 하여 신설된 보조금 회수 요율이 적용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가 국내에서 운행되는 기간이 늘어나고 사용 후 전기차를 재활용하는 신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내용은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2 년 6 월 30 일 보조금 접수건부터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2 년 2 월부터 5 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6 월 30 일 공표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사전에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 등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74 종이며, 이 중 39 종에서 발암성(2 종), 급성 독성 2~3(9 종), 피부 부식성·자극성(5 종)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신규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 및 양도·제공받아 취급하는 사업장에 유해성·위험성 예방 조치사항을 담은 통지서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통지서를 제공받은 사업장은 그에 따라 적절한 개인보호장구 비치 및 작업장 내 환기시설 설치·운영 등 철저한 근로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 민간발주 건설현장 집중 점검·감독 예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대규모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7~8 월에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재까지('22.1.27.~'22.6.24.), 공사금액 50 억 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 사고 사망자는 35 명(34 건)으로 전년 동기 54 명(54 건) 대비 35.2%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공발주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사망자가 7 명(7 건)으로 전년 동기 17 명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데 비하여,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사망자는 28 명(27 건)으로 전년 동기 37 명에 비해 24.3% 감소에 그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설공사 점검·감독 시 발주자와 건설사의 산재예방 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7~8 월에 1,500 개소 이상의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안전보건공단)하고, 사망사고를 초래하는 중대한 위험요인이나 경미한 위험요인을 시정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법·절차에 따라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50 억 원 이상 건설공사 불시 감독도 당분간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우선 선정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전환정책과,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7.5(화) 오전 10 시 대통령 주재 제 30 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하여 새로운 에너지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원전 비중 확대 등의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새로운 에너지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그 배경입니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17.10 월)」, 「제 3 차 에너지기본계획(‘19.6 월)」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합니다. 특히, ‘30 년 원전 비중 30% 이상 확대를 제시하여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 활용도 제고를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했습니다. 또한, 신한울 3, 4 호기 건설재개를 행정부의 최고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확정하여 ‘22 년 신한울 3, 4 호기 설계분야 일감 120 억원의 조기 집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전력시장 구조 확립을 위한 정책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할 경우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21 년 81.8%에서 ‘30 년 60%대로 감소하여 ‘30 년 화석연료 수입이 ‘21 년 대비 약 4 천만 석유환산톤(TOE)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이 ‘20 년 2,500 개에서 ‘30 년 5,000 개로 성장하여 일자리 약 10 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신한울 3, 4 호기 건설 재개절차의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제 10 차 전력수급기본계획(‘22.4 분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3.3 월) 등 관련 법정계획을 통해 금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요기사 소개

1. 철강 전자 정유 등 국내 제조업체의 지난해 온실가스(탄소) 배출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일 환경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탄소 배출량이 많은 상위 30 대 민간기업(발전 공기업 제외)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탄소 환산총량(tCO₂-eq) 기준 2 억 6080 만 t 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2 억 5019 만 t) 대비 4.2% 증가한 수치로, 배출량 집계 시작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코로나 19 가 진정되는 가운데 수요 확대에 따른 생산활동 증가로 자연스럽게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이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2030 년 탄소 배출량을 2018 년 대비 40% 줄이기 위해서는 매년 4.2%씩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장 가동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미국 대법원이 환경보호청(EPA)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권한을 제한했습니다. 30 일(현지시간) 미 대법원은 찬성 6, 반대 3 으로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이 EPA 에게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시킬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석탄 사용을 중단하도록 전국적인 제한을 하는 것은 현재 위기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일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의회는 청정대기법 111 조 d 항에서 EPA 에 청정전력 계획상 온실가스 배출량 상한선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고, 이런 규모의 결정은 의회 자체 또는 의회가 명확히 위임한 기관이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바이든 정부의 지구온난화 대책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3. 유럽연합(EU) 의회가 5 일(현지시간)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그린 택소노미)에 천연가스와 원전을 포함시키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EU 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환경보건식품안전위원회가 원전과 천연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며 채택한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였으나 부결되어, 원전과 천연가스가 포함된 초안대로 EU 택소노미가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녹색 에너지로 분류된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모든 상황에 포함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아닙니다. 천연가스 발전의 경우, 전기를 생산하거나 많은 집을 동시에 난방 또는 냉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다른 용도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원자력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과 핵 폐기물 매립장 확보라는 단서 조항이 붙었습니다.

한편, 이번 EU 탄소노미의 결과는 우리 정부의 탄소노미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2021 년 국내 발전량의 27.4%를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더 높이려고 한다면 EU 그린 탄소노미 기준에서 제시된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과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확보 등 안전 기준을 먼저 강화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손병두 한국거래소(KRX) 이사장은 7 일 'KRX ESG 포럼 2022'에서 ESG 정보공개 확충을 위해 ESG 포털을 개편하고, 현재 발표되고 있는 글로벌 공시표준들을 참고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가이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주제발표에서 KSSB(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공시기준 제정 추진과 관련해 "요구하는 공시 내용이 방대해 기업 부담이 매우 큰 만큼 적용 의무화 전까지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아무리 빨라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시기(2025 년 예정) 이후에(공시 내용에 대한) 기준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하였습니다.
5. 중소벤처기업부는 ESG 경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투자시 참고할 수 있는 'ESG 벤처투자 표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운영한다고 13 일 밝혔습니다. 국내 최초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마련된 'ESG 벤처투자 표준가이드 라인'은 하반기에 조성되는 167 억원 규모 ESG 전용펀드를 통해 시범 적용하게 됩니다. ESG 펀드(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을 시범운영한 후 운용성과를 토대로 국내 VC 업계와 벤처·스타트업계의 수용성 수준을 검토하고 표준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하여 자연스러운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거래소의 ESG 지수 발표와 ESG 관련 상장지수펀드 동향

법무법인(유) 세종

이경돈, 송수영, 장윤제, 이용국, 강지호

2022. 10. 12

SHIN & KIM
법무법인(유)세종

한국거래소의 ESG 지수 발표와 ESG 관련 상장지수펀드 동향

“한국거래소는 ESG 관련 지수를 점점
고도화하고 있으며, 향후 책임투자의
일환으로 ESG 관련 지수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 예상됩니다.

상장기업에서는 향후 ESG 지수의
종류가 확대되고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ESG 전략을
이행하고 ESG 관련 리스크 관리, ESG
평가기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 KRX/S&P ESG 고배당지수 등 발표

10.4.(화) 한국거래소는 KRX/S&P ESG 고배당지수를 포함한 5 종의 지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 KRX/S&P ESG 고배당 지수는 S&P 다우존스지수 (S&P DJI)와 공동개발한 지수로, ESG 및 고배당 우량주에 대한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KRX/S&P ESG 고배당지수는 코스피 200 지수 구성종목 중에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배당수익률 상위 50 개 종목으로 구성됩니다.

- ❶ 유동시가총액 3,000 억원 이상, 일별거래대금 10 억원 이상
- ❷ EPS(주당순이익) > 0, 3 년 전 시점 대비 주당배당금 증가 (상승률 > 0)
- ❸ S&P DJI ESG 평가점수 하위 25% 제외
- ❹ ESG 관련 「S&P 사업활동 기준」 또는 「UN Global Compact 원칙」 위배 종목 제외
- ❺ 미디어 분석 등을 통해 기업 및 대주주에 ESG 관련 부정적 이슈 발생 종목 제외

현재는 지수 발표 초기이기에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가 없으나, 향후 기업의 재무적 성과가 우수하여 ❶, ❷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스크리닝 기준인 ❸-❺ 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이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에서 제외되어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의 투자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해당 지수의 구성 종목에 포함되었더라도 나중에 ESG 관련 부정적 이슈가 발생할 경우에는 ESG 평가결과가 하락하여 지수 정기 변경시 해당 지수의 구성 종목에서 제외되고 이에 따라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의 투자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SG 관련 부정적 이슈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될 경우, ESG 평가기관 및 투자자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ESG 지수와 관련 상장지수펀드, ESG 평가

기존에 한국거래소는 ESG 투자수요 충족과 기초지수 개발을 위해 10 개의 지수를 운영하고 있으며,¹ 특히 상장지수펀드(ETF)는 이중에서도 기후변화 관련 지수와 대형주 중심의 ESG 지수, 사회책임경영지수를 기초지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수 특징 및 추종 ETF (2022. 10. 11.자 기준)>

지수	주요 특징 개관	추종 ETF 수	시가총액 합계
KRX 기후변화 솔루션 지수	MSCI Climate Change Metrics 의 저탄소 전환점수 상위종목(20 개)과 저탄소 특허점수 상위종목(20 개), 총 40 종목으로 구성	6	약 918 억 원
KRX/S&P 탄소효율 그린뉴딜지수	탄소배출량 공시 기업 지수 편입, 탄소효율(매출액 대비 탄소배출량)로 편입비중 결정	4	약 621 억 원
코스피 200 ESG 지수	코스피 200 구성종목 중 KCGS ESG 평가가 우수한 종목을 구성종목으로 하여 유동시가총액으로 가중	1	약 698 억 원
KRX ESG Leaders 150	KCGS ESG 평가 우수 150 종목으로 구성, 개별 종목의 ESG 통합점수 비중으로 가중	1	약 123 억 원
KRX ESG 사회책임 경영지수(S)	KCGS ESG 평가대상 기업 중 사회책임부문 평가점수 상위기업으로 구성	1	약 2,184 억 원

이 외에도 ESG 투자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에는 MSCI Korea ESG Universal Index, MSCI Korea Country ESG Leaders 등 4 종의 MSCI ESG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가 각각 1 개씩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ESG 지수들은 다음과 같은 ESG 평가를 기초로 구성됩니다.

<주요 지수가 사용하는 ESG 평가>

명칭	주요 평가 항목	평가 절차
S&P DJI ESG 평가	(경제) 기업지배구조, 중요성, 위험 및 위기관리, 비즈니스 윤리, 정책 영향, 공급망 관리, 세금 전략, 사이버보안 (환경) 정보공개, 정책 및 관리시스템, 운영, 기후전략 (사회) 정보공개, 노동관행, 인권, 인적자본개발, 인재 유인 및 유지, 기업시민의식 및 자선, 고객관계관리, 산업안전보건	(1) 산업별 설문 또는 (설문 미응답 시) 지속가능성 평가 (2) 부정적 논란에 대한 미디어/이해관계자 분석 (3) 점수 계산 및 정규화
MSCI Climate Change Metrics	(위험) 영위산업, 상품 및 서비스, 운영 (관리) 지배구조, 정책, 위험관리, 목표와 성과지표	(1 단계) 저탄소전환 위험 노출도 측정 (2 단계) 저탄소전환 위험관리 측정 (3 단계) 저탄소전환 분류 및 점수 계산
MSCI ESG 평가	(환경) 기후변화, 자연자본, 오염&폐기물, 환경 기회 (사회) 인적자본, 제품책임, 이해관계자 대립, 사회적 기회 (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 기업행동	(1) 점수 취합 및 영역별 가중평균 (2) 업종 비교, 정규화 (3) 위원회 검토
KCGS ESG 평가	(환경) 리더십과 거버넌스, 위험관리, 운영 및 성과, 이해관계자 소통 (사회) 리더십과 거버넌스, 노동관행, 직장내 안전보건, 인권, 공정한 영관행, 지속가능한 소비, 정보보호,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이해관계자 소통 (지배구조) 이사회 리더십, 주주권 보호, 감사, 이해관계자 소통	(1) 기본평가(가점) (2) 심화평가(부정적 이슈에 따른 감점) (3) 분기별 등급조정

¹ 코스피 200 ESG 지수, 코스피 200 기후변화지수, 코스피 150 거버넌스 지수, KRX ESG Leaders 150, KRX Governance Leaders 100, KRX Eco Leaders 100, KRS ESG 사회책임경영지수(S), KRX 300 기후변화지수, KRX 기후변화 솔루션지수, KRX/S&P 탄소효율 그린뉴딜지수

3. 결론

한국거래소는 ESG 관련 지수를 점점 고도화하고 있으며, 향후 책임투자의 일환으로 ESG 관련 지수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 예상됩니다. 상장기업에서는 향후 ESG 지수의 종류가 확대되고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ESG 전략을 이행하고 ESG 관련 리스크 관리, ESG 평가기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ESG 관련 지수에 편입되었으나 이후 ESG 평가 결과의 하락으로 정기변경 시 해당 지수 구성 종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에서 배제되고 해당 기업의 주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평가결과 하락 사유 등의 지수 구성 종목 제외 사유를 분석하여 관리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SG 경영과 취업규칙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오길성, 이승택, 김보훈, 최현준, 김아름, 최낙현, 원용일, 박찬욱, 송한봄, 윤성원

2022. 9. 13

DR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ESG 경영과 취업규칙

“중소기업에서 “공급망 ESG 관리”에 대응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취업규칙 관리 방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ESG 경영과 “공급망 ESG 관리”의 대두

최근 경영계의 화두는 단연 ESG 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SG 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기업의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 그리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두고 경영 활동을 영위할 것을 요구하는 패러다임으로, 전 세계적 트렌드로 확산된 이래 ESG 경영활동 보고서 공시 의무화 등을 통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정부합동 K-ESG 가이드라인’이 발간되는가 하면,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ESG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 이를테면 2 조원 이상 자산규모 기업의 ESG 정보공시 의무화(2025~)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ESG 지표 반영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대기업 및 계열사의 경우 ESG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관련 정책과 목표를 선언하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피 상장사의 ESG 정보공시 의무화는 2030 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ESG 경영의 직접적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여겨 지기도 하였으나, 최근 주요 대기업들이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급망 ESG 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30 대 그룹사 소속기업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75 개사의 76%에 해당하는 57 개사에서 협력사의 ESG 경영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47 개사는 정기적인 ESG 평가를 시행하고 ESG 리스크 발견 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위와 같은 “공급망 ESG 관리”에 대응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취업규칙 관리 방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공급망 ESG 관리” 요구에 부합하는 취업규칙 관리 방향

(1) 취업규칙의 의미

취업규칙이란 근무시간, 임금, 복무, 안전보건 관련 사항 등 성질상 사업장의 전 근로자들에게 통일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업주가 작성하는 일종의 사내 규범으로, 각 기업의 <인사규정>, <징계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규율이 담겨 있다면 이는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상시 10 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93 조).

“공급망 ESG 관리”에서 요구하는 각종 인권, 안전, 보건과 같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통일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될 사항 역시 취업규칙에 반영되어야 하며, 특히 「근로기준법」 제 93 조에서는 근로시간, 모성 보호, 일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기업에서는 이러한 근로기준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ESG 관련 사항이 취업규칙의 적소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표현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2) 취업규칙 관리 방향: 노동·인권 분야

국내 주요 대기업에서 “ESG 공급망 행동규범”을 통해 협력사에 요구하는 <노동·인권 분야> 대표적인 항목과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보면 이미 노동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법령과 충돌하는 부분도 일부 확인되는 등 정교한 취업규칙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야	내용(요약)	관계 법령	취업규칙 관리방향
자발적근로	① 강제근로 금지 ② 급여에서 과다한 대출상환 금지 ③ 초과근로를 해야만 생활임금이 달성되는 수준의 저임금 금지 등	근로기준법 제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등	① 법령수준 유지(개선) ② 법령보다 강화 ③ 선언 규정 추가
교육/소통	비자발적 노동 금지를 담당하는 직원(인사 등)에 종합적 교육 실시 등	-	법령보다 강화
근로계약	① 근로계약서 핵심내용 문서로 제공 ② 근로계약서를 모국어로 작성 및 설명을 들었 다는 근거 보유 등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7조, 제19조 등	① 법령수준 유지(개선) ② 법령보다 강화
자유 이동	① 사업장(기숙사) 거주 시 불합리한 출입 제한 금지 ② 이동의 자유에 대한 방침 확립 등	근로기준법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100조의2 등	① 법령보다 강화 ② 법령보다 강화
연소자 보호	① 현지 법규에 따른 최저 취업연령 이상의 연령 자만을 고용할 것 ② 공식적인 아동노동 금지 방침 수립 ③ 연령 검증 절차 명시(정부공인 문서에 부착된 사진과 대조 필수) ④ 유해환경 등에서 근로 금지 등	근로기준법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9조, 제70조, 제72조 등	① 법령수준 유지 ② 법령보다 강화 및 선언 규정 추가 ③ 법령보다 강화 ④ 법령보다 강화
근로시간	① 법정근로시간 준수 ② 매주 1일의 휴일 제공 ③ 연장/휴일근로 모니터링 체계 확립(근태기록 관리) ④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사전 경고 시스템 구축, ⑤ 초과근로를 방지할 수 있는 생산일정 계획 등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69조 등	① 법령수준 유지 ② 법령수준 유지 ③ 법령보다 강화 ④ 법령보다 강화 ⑤ 법령보다 강화 및 선언 규정 추가

<p>기타</p>	<p>① 징계 수단으로 임금 감액 금지 ② 일체의 차별 금지, 괴롭힘 금지 ③ 결사의 자유 보장 등</p>	<p>근로기준법 제95조, 제76조의2, 제76조의 3 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9조 등</p>	<p>① 법령수준 유지(충돌부분 검토) ② 법령수준 유지 후 점진적 강화 검토, 선언 규정 추가 검토 ③ 법령(노조법)수준 유지</p>
-----------	---	---	---

3. 총괄적·체계적 취업규칙 관리를 위한 솔루션

상술한 바와 같이 취업규칙은 사용자에 의해 작성되어 전 구성원에 공유되는 기업에서의 일종의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 두 5026 판결 등 참조), **적정하게 작성된 취업규칙은 노동관계법령 준수를 위한 초석이기도 하면서 경영진의 의지를 담은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현행 노동관계법령 체계에 부합하면서도 경영진의 ESG 경영 기초를 적절히 포괄할 수 있는 취업규칙(내규)을 제·개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나, 국제적 기준에 따라 작성된 일반적인 “ESG 공급망 행동규범”에는 우리 노동법과 충돌하거나 수정 적용되어야 할 내용이 적지 않으며, 취업규칙 상호간 정합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취업규칙 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FOCUS SECTOR

법무법인(유) 화우



법무법인(유) 화우
YOON & YANG

FOCUS SECTOR

“금융, 헬스케어, 화학 및 소재,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 전기, 전자 및 반도체, ICT 서비스, 식품 및 음료 등 각 산업 분야별 ESG 이슈 및 동향을 최신순으로 엮은 리포트입니다.”



- 금융 산업 -

(신승국, 이광욱, 이근우, 조준오, 양희, 김현지 / 2022. 10. 13)

- 자본시장의 중개자로서 건전한 거버넌스의 구축과 자산 운용 상의 ESG 반영이 요구됨 -

금융회사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금융중개자로서 실물 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영리기업으로서 수익성과 건전성, 안정성 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성 상 각국 정부는 다른 산업에 비해 금융회사에 보다 건전한 지배구조를 요구하고 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금융회사 역시 ESG 경영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금융 산업 ESG 경영 주요 이슈로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친환경 분야 금융 지원, 금융 접근성 향상, 금융 소비자 보호, 윤리경영 등이 있으며, 금융 산업에 적용되는 ESG 공시, 녹색분류체계, 기후리스크 관리 등 관련 규제 및 정책을 고려해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01

Standard



- SASB: 자산관리 및 보관활동 산업 '시스템 리스크 관리 주제' 식재

02

Initiative



- UN PRI: 글로벌 투자 원칙, ESG투자 모범관행 제시
- UN PRB: 파리기후협정과 UN SDGs 이행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역할과 책임 규정한 국제협약

03

Policy



-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 초안 공개
- 금융감독원,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추진 위한 회의 개최

04

Case



- NH농협금융, ESG 경영 체계 및 투자 모델 구축
- 신한금융그룹, 금융배출량 측정 시스템 개발

1. ESG 스탠다드

(1) 금융 부문 SASB 기준, 자산관리 및 보관활동 산업 '시스템 리스크 관리' 주제 삭제

SASB 기준에 따르면 금융 부문 중요 ESG 이슈는 비즈니스 윤리, 상품 설계 및 생애주기 관리, 판매 관행 및 제품 라벨링,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보안, 금융 접근성 및 경제성 등입니다. 상대적으로 폐기물 관리 등 환경 요소의 중요성은 낮습니다. 2021 년 12 월에는 금융 부문의 자산관리 및 보관활동 산업의 표준이 업데이트 되어 '시스템 위험 관리' 주제가 삭제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과 투자자들은 시스템 리스크 관리 주제가 자산관리 및 보관활동 산업의 운영 및 비즈니스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속가능성 영향을 적절하게 측정하지 않으며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변경사항은 자산관리 및 보관활동 산업에 적용되며 다른 금융 부문 산업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2. ESG 이니셔티브

(1) UN PRI(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2006 년 4 월 출범한 UN PRI 는 유엔 환경계획금융부문(UN Environment Program Finance Initiative, UNEP FI)과 유엔 글로벌 콤팩트(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UNGC)의 협력 하에 수립된 투자 원칙 대표적 글로벌 투자 원칙으로, 연기금을 비롯해 자산운용사와 PE 등 금융회사들의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촉구하는 모범 관행을 제시합니다. 매년 PRI 가입 기관은 책임투자 방안, 정책 및 절차를 공개하고 책임투자원칙기구는 각 기업의 성과에 대한 개별적 평가와 동종 업계 대비 상대평가를 실시한 후 공식 PRI 등급을 매깁니다. 2021 년 1 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53% 증가한 3,613 개 금융회사 및 연기금 등이 UN PRI 에 가입하였습니다. UN PRI 는 가입 기관 관리 자산의 50% 이상에 PRI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담당하는 직원과 감독 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였으며, UN PRI 의 투자 철학을 이행하지 못하는 기관의 탈락 등 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UN PRB(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파리기후협정과 UN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역할을 확산하고 부정적인 요소를 완화하고자 금융 산업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국제협약입니다. 경제 시스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금융 부문이 사업전략과 상품, 서비스를 통해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하고, 부정적인 요소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벤치마크를 제시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금융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제시합니다. 2021 년 5 월 기준 Barclays Group, BBVA, Citi 등 유수의 글로벌 은행 및 하나금융그룹, KB 금융그룹, NH 농협은행, 신한금융그룹 등 230 여 개 은행(그룹)이 PRB 에 서명했습니다. 서명 은행은 서명 후 4 년 이내에 은행의 ESG 영향 분석, ESG 관련 목표 설정 및 이행,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 및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3. 국내 규제 동향

(1)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 초안 공개

환경부는 지난 해 12 월 그린워싱 예방 및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발표 당시 원자력 발전의 경우 유럽연합(EU) 등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9 월 20 일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 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국가 원자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하며,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 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 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초안 공개 이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2) 금융감독원,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추진을 위한 「시나리오 공동 작업반」 첫 회의(Kick-off) 개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 대응이 강화되는 가운데 특히 기후 시나리오 분석 및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융부문 기후리스크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 주요 감독당국은 각국의 자연환경 및 탄소배출정책 등에 기반한 기후 시나리오 분석 및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 중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부문 기후리스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추진을 위해 국내 10 개 은행 및 보험사 등이 참여하는 「기후 시나리오 공동작업반」을 구성하여 지난 9 월 19 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공동작업반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의체에서 제공하는 6 가지 표준 기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국내 정부의 탄소중립정책과 한반도 주요 자연재해 등 국내 사정을 반영하여 기후 시나리오를 구체화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주요 잠재위험요인 중 하나인 기후리스크를 측정하고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4. 기업 동향

(1) NH 농협금융, ESG 경영 체계 및 투자 모델 구축

NH 농협금융은 전사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구축해 친환경 기업·에너지·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상품 개발로 녹색금융을 확대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ESG 추진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ESG 의사결정 체계로서 이사회 내 ESG 관련 위원회인 '사회가치 및 녹색금융위원회'와 회장 주관의 'ESG 전략협의회'를 신설,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기존의 전담조직인 'ESG 추진팀'을 'ESG 추진단'으로 격상했습니다. ESG 투자는 농협의 특성을 반영해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의 '그린 임팩트 금융'과 친환경 농업 및 농·식품 기업을 지원하는 '농업 임팩트 금융'의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NH 농협금융의 그린 임팩트 금융(7503 억원)과 농업 임팩트 금융(8664 억원) 투자 금액은 1 조 6167 억원이었습니다. 올해는 7 월 말 기준으로 그린 임팩트 금융 8847 억원, 농업 임팩트 금융 1 조 6501 억원 등, 총 2 조 5348 억원에 달하며 지난해 대비 약 9000 억원 증가하였습니다.

[ESG 투자 모델]

구분	내용
그린 Impact 금융	신재생에너지 PF
	그린뉴딜 민자사업
	환경 정책자금
	그린리모델링 지원
	태양광 정책자금
	뉴딜펀드 판매
농업 Impact 금융	농식품 기업여신
	농산업 가치펀드
	스마트팜 지원

(2) 신한금융그룹, 금융배출량 측정 시스템 개발

신한금융그룹은 2022 년 3 월,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금융자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 측정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의 '금융배출량 측정

시스템'은 PCAF 가이드라인 산정식을 토대로 고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회사의 금융자산 유형에 따라 산출하는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 신한금융그룹은 6개 산업군, 약 230 조원의 금융자산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했고, 이를 ▲산업별 ▲고객별 ▲자산별 ▲계약 만기 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금융배출량 측정 시스템'은 향후 자산 포트폴리오 변동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동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신한금융그룹은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그룹사 별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 금융산업 사회 이슈 -

(신승국, 이광욱, 이근우, 유현상, 양희, 김현지 / 2022. 10. 26)

- 금융사의 ESG 경영: 자체적 ESG 이슈 관리와 금융에의 ESG 요소 통합을 통해 추진됨 -

금융회사의 사회 기여 방식은 소외계층 지원, 금융 교육 실시, 공공기금 마련, 스포츠/문화 활동 후원 등에 국한되었으나, 사회 전체를 위한 지속가능 투자 및 공동 가치 창출로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녹색금융(Green Finance)이나 기후금융(Climate Finance)보다 광의의 개념으로서 사회(S), 지배구조(G) 등을 금융활동에 포함시키는 개념인 지속가능금융이 금융산업의 주요 화두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자금 공급자와 자금 수요자 간 자금중개자인 금융회사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국가 내 자금순환을 통해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ESG 경영은 다른 산업보다 중요합니다.

1. 금융 내 사회 이슈 중요성

글로벌 지속가능투자 시장 규모와 전략 등을 집계하는 GSIA(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에 따르면 지속가능투자는 2018년 말 기준 30.7조 달러로 2012년 13.2조 달러 대비 2.3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또한 2020년 6월 기준 지속가능투자 규모를 약 40.5조 달러로 추정하는 가운데, 최근 들어 지속가능투자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금융회사의 ESG 경영은 IMF(2019)의 '지속가능 금융(Sustainable Finance)' 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IMF에 따르면 지속가능 금융이란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원칙을 경영 의사결정, 경제개발 및 투자전략에 반영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공익적 외부효과를 유발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회사의 ESG 경영은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금융회사의 ESG 수준을 제고하는 것으로, 자사의 탄소배출 감소, 임직원 다양성 제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이 있습니다. 둘째, 타사에 대해 ESG 금융을 제공하는 것으로, 타사의 ESG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기반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금융산업의 사회 이슈 관련 표준 가이드라인

ESG 정보 공시에 관한 주요 글로벌 표준 가이드라인으로는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전담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 기준 등이 있습니다.

주요 글로벌 표준 가이드라인 중 사회 이슈와 관련이 깊은 것은 2018년 발표된 SASB 기준입니다. SASB 기준은 재무적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ESG 이슈를, 산업별로 중요성 지도(Materiality Map)를 통해 제시한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SASB 기준은 ESG 이슈 중 사회 이슈와 관련하여 사업모델, 사회자본, 인적자본 3개 주제에 관해 산업별 특성에 따른 '중요성(Materiality)' 이슈를 선정하여 공시하도록 합니다.

SASB 가 발표한 금융업 내 중요 ESG 이슈는 지배구조와 리더십, 사업모델과 혁신, 사회자본, 인적 자본입니다. 중요 이슈 중 상품 설계 및 생애주기관리, 비즈니스 윤리와 시스템 리스크 관리, 판매 관행 및 제품 라벨링이 금융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ESG 요소로 꼽히고,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 금융접근성과 경제성 역시 중요 요소입니다.

또한, SASB 는 금융업을 7 가지 세부업종으로 구분하여 중요 공시항목을 제시합니다. 업종별로 ① 일반 소비자 대상 상품 판매 등 고객 접점이 많은 은행과 소비자금융업은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보안이 매우 중요한 항목이며, ② 자산운용사와 투자은행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인적자원 중심의 산업인 점이 반영되어 직원의 참여와 다양성 확보 등이 중요 이슈로 꼽힙니다.

3. 해외 금융산업의 사회 이슈 관련 동향

BlackRock 은 이사회 독립성, 조직 다양성 등 현재의 ESG 수준 및 투자대상 기업의 장기성장 전략에의 ESG 반영도를 함께 검토하는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습니다. BlackRock 은 기업 관여를 통해서 ESG 관련 우려사항이 해소되지 못한 경우 이사·경영진 연임 반대 또는 해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Goldman Sachs 는 기업 임직원의 다양성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를 당사 자산운용 사업부문(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GSAM)의 스투어드십 코드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GSAM 의 스투어드십 코드는 투자대상 기업 이사회 구성원 중 여성 이사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 이사회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2020 년 투자대상 기업 이사회 안건 중 25%의 경우 여성 이사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Goldman Sachs 는 투자은행 업무에 있어서도 임직원 다양성을 고수하고 있으며 2020 년부터 기업공개(IPO) 업무에 있어서 대상 기업 이사회에 1 명 이상의 여성이 없는 경우 IPO 를 주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표명하였습니다.

JP Morgan 은 'Environment and Social Policy Framework'에서 환경·사회 리스크를 다루는 ESG 원칙과 프로세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JP Morgan 의 ESG 원칙은 프로젝트 파이낸스, 신디케이트론, 유가증권 인수, 사모 발행, 재무자문 등 모든 주요 자금의 공급 및 중개 업무에 적용됩니다. JP Morgan 에서는 Global Environmental and Social Risk Management(GESRM) 그룹이 ESG 원칙을 바탕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환경·사회 평가(E&S Review)를 수행하며, 환경·사회 리스크가 높게 평가되는 사업은 Reputation Risk Committee 로 안건이 이전되어 추가적 검토를 거치는 프로세스를 두고 있습니다.

4.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및 대응 방향

국내 ESG 펀드 및 ESG 채권 발행 규모는 지속 확대되는 추세이며, 2020 년 12 월 기준 국내 ESG 채권 상장종목은 총 549 개(상장 잔액 82.6 조원)로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최근 금융회사 내 ESG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ESG 와 연계된 리스크 모니터링을 내실화하며, ESG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내 5 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ESG 요소를 전사적 경영전략에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금융회사 및 공적 투자자를 제외한 국내 금융권의 ESG 에 대한 대응은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들 또한 해외 금융회사의 ESG 행보에 주목하면서 경영 활동에 있어서 규제기관의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수동적인 대응을 벗어나 ESG 를 고려한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 입니다.

- 금융산업 환경 이슈 -

(신승국, 이광욱, 이근우, 조준오, 김연각 / 2022. 10. 18)

- 금융사 보유 자산에 대한 탄소배출량, 생물다양성 영향 등의 환경성 고려가 증시되는 추이-

금융사의 간접 운영 범위에 해당하는 보유 금융자산에서의 환경이슈의 관리와 영향에 대한 공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금융자산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론 지침을 개발하는 PCAF 나 생물다양성 영향 측정 지침을 개발하는 PBAF 등의 이니셔티브에의 참여를 통해 환경 영향을 측정하고, 투자프로세스 내에 환경이슈를 주요한 인자로 반영하는 등 친환경 금융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금융 내 환경이슈 중요성

근래 대형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를 사회적 책임투자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당면 리스크로 인식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친환경 투자의 이행과 친환경 금융시장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기업에 우호적인 정부 정책과 소비자 선호 변화, 그리고 수익 추구형 중소 기관투자자들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환경경영 요청에 따라 금융산업에서 녹색, 기후금융의 수요가 늘고,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환경이 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하여, 10 조 100 억 달러의 자금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규모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스투어드십 보고서에서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단·중·장기별 과학적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각 기업은 이러한 목표 설정이 장기적 차원에서 주주들의 경제적 이익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해 증명하도록 요구할 것"이라 밝힌바 있습니다.

2. 금융 내 환경이슈 고려 방안

가. 친환경 투자 프로세스 구축

1) 2015. 12. 파리협정은 '기후위기에 대한 지구적 대응능력 강화'가 파리협정의 합의목적임을 명시하고, 그 목적 달성의 일환으로 세 가지 중간목표에 합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후금융 활성화입니다. 그러나 현재 2050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후금융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모자란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제에너지기구)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내 온도 상승 억제를 가정하고 2030 년까지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기후금융수요를 전세계적으로 연간 5 조 달러, 2040 년부터 2050 년까지는 연간 6 조 달러로 추정하고 있는데, 2020. 전세계 기후금융 규모는 6,320 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즉, 친환경 금융시장은 금융기관의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2) 기업의 탄소배출은 직접배출원(Scope1)과 간접배출원(Scope2-3)으로 구성됩니다. 간접배출원 가운데 '3 영역'(Scope3)의 경우 기업 경영활동을 통해 직접 배출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책임과 영향을 고려해 관리하도록 국제사회가 권고하고 있으나, 배출량 산정·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탄소중립 추진이 쉽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금융자산 유래 Scope 3 배출에 대한 탄소중립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석탄 발전과 같은 고탄소 사업 영위 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 축소 및 재생에너지 등의 녹색활동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기후 리스크를 관리하라는 구체적인 요청이 생겨나고 있고, 이에 따라 금융산업에서는 금융자산의 배출량 산정 및 해당 배출량 관리와 감축을 고려한 투자 프로세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이니셔티브 참여

1) 넷 제로 선언

넷제로는 금융회사가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것으로, 본인의 금융활동에 따른 결과로 보유한 자산 포트폴리오의 배출량에 대한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며, 일반적인 기업 단위 탄소중립과는 의미가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기후금융에 적극적인 금융회사라면 구체적인 포트폴리오의 넷제로를 선언하고 이행전략, 수단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녹색금융은 중요한 이행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이니셔티브 활용을 통한 친환경 금융사 포지셔닝

친환경 투자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가장 큰 장애물은 이를 공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입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다양한 금융기관 주도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활용하고, 환경위험을 평판위험의 주된 요소로 간주해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친환경 이니셔티브 가입, 기금 조성 및 캠페인 지원 등을 통한 브랜드 구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주요 글로벌 이니셔티브

- √ PCAF (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탄소 회계금융 파트너십): 금융기관의 자산 운용으로 인한 금융 배출량 산정과 공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금융기관 주도 글로벌 이니셔티브.
- √ NZBA(Net-Zero Banking Alliance, 넷제로 은행연합): 2050년까지 '넷제로(Net-Zero)'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은행간 리더십 그룹. 금융회사는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금융지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게 됨.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된 수치는 최소 5년마다 재검토하고, NZBA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년 달성 이행 현황을 공유.
- √ TNFD(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자연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TNFD는 자연 손실을 방지하고, 생태계 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글로벌 환경 협의체로 기업의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를 지원하기 위해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 세계자연기금(WWF) 등이 참여해 2021년 6월 공식 출범하였음. 현재 블랙록, 뱅크오브아메리카(BoA), HSBC 등 250개 이상 글로벌 기업이 참여 중이며 국내 기업으로는 우리금융그룹이 최초 가입.
- √ PBAF(Partnership for Biodiversity Accounting Financials, 생물다양성 회계금융 파트너십): PBAF는 금융섹터의 생물다양성 영향 평가 및 측정 표준 개발을 목표로, 네덜란드 기업개발은행(FMO)을 비롯해 ASN 은행, 트리odos 은행(Triodos Bank) 등이 연합해 2019년 설립되었음. 2022년 2월 기준으로, 2022년 2월 기준으로, 전세계 30개 금융기관이 PBAF에 가입해 금융 거래에 대한 생물다양성 영향 평가 방안을 논하고 적용을 위한 상호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PBAF는 금융기관 대출과 투자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임팩트(영향)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표준(Standard)을 2022. 6. 14. 발표하였음.

3.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및 전망

국내 금융산업은 아직까지 넷제로 선언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하여, 기후솔루션이 2022. 조사한 바로는 최근 100대 금융기관 중 포트폴리오 넷제로를 선언한 자산운용회사는 5곳이며, 증권회사는 2곳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금융지주 계열의 시중은행은 넷제로 선언에 적극적이어서, 최근 국내 4대 금융그룹이 SBTi 인증의 넷제로를 선언하였습니다.

기후금융에서 자본시장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는 저탄소 경제의 흐름을 고려한다면,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넷제로의 전향적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내 금융산업계 전반에서 포트폴리오 넷제로를 탄소중립으로 인한 규제비용이 아닌 자본시장의 발전전략이자 투자자보호 장치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헬스케어 산업 -

(신승국, 이광욱, 이근우, 조준오, 양희, 김현지 / 2022. 9. 5)

- 의료 접근성 강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등의 가치사슬 전후방의 ESG 관리가 강화되는 추이-

미국의 법무법인 Fenwick 가 올해 2 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ESG 관련 내역을 공개한 헬스케어 기업은 30%에 불과하였으나 코로나 19 이후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면서 빠르게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들은 의료 서비스에의 접근성 개선, 지속 가능한 공급망 관리,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이슈에 초점을 맞춰 ESG 경영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는 산업인 바, 기업들은 ESG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각 기업의 핵심 관리 이슈를 도출하여 맞춤형 ESG 경영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1. ESG 스탠다드

(1) Biopharma Investor ESG Communications Guidance 2.0

2020 년 주요 글로벌 제약사가 참여한 Biopharma Sustainability Roundtable 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기반의 가이드라인 Biopharma Investor ESG Communications Guidance 2.0 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이니셔티브에는 Amgen, Johnson&Johnson 등 5 개 글로벌 제약사와 자산운용사 등이 참여하였으며, 제약바이오 분야의 ESG 중요 항목 12 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Biopharma Investor ESG Communications Guidance 2.0 주요 항목

항목	예시
의약품/헬스케어 가격접근성 (Access to Health care and Medicine Pricing)	의약품 가격산정 관련 투명성 및 경영 전략 확보여부, 의약품 접근성 및 가격장벽 개선활동 등
경영 윤리, 진실성 및 컴플라이언스 (Business Ethics, Integrity, and Compliance)	리베이트, 뇌물, 부패, 담합 및 윤리적 분쟁, 정치권 로비

항목	예시
기후변화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 역학 변화 등에 대한 대책, 중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전략 확보 여부 등
임상시험 시행절차 (Clinical Trial Practices)	제품 안전성, 인종 다양성 반영, 개인정보 및 인권 보호
ESG 지배구조 (ESG Governance)	ESG 관리체계, 임원 보수, 감시기구, 거버넌스 소통 등
환경영향 (Environmental Impacts)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폐기물 관리, 폐수처리 등
인적자원 관리 (Human Capital Management)	이직률, 인재 확보 및 유지 전략, 인종 다양성 등
혁신 (Innovation)	연구개발 자원 및 역량, 개발 파이프라인 등
의약품의 환경/항생제내성에 대한 영향 (Pharmaceuticals in the Environment and Anti-microbial Resistance)	공급망 단계로부터의 제품 및 관련 위험 관리 (원료 및 제품 유출사고 방지 등)
제품 품질과 환자 안전 (Product Quality and Patient Safety)	제품 리콜 사례, 제품 안전성 관련 노력 등
위험 및 위기 관리 (Risk and Crisis Management)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위험 현안 인식 및 대응
공급망 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제 3 자 ESG 관련 관리 감독

출처: BIOPHARMA SUSTAINABILITY ROUNDTABLE(2020), "BIOPHARMA INVESTOR ESG COMMUNICATIONS GUIDANCE 2.0"

2. ESG 이니셔티브

(1) PSCI(Pharmaceutical Supply Chain Initiative)

PSCI 는 글로벌 헬스케어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2006 년 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글로벌 제약 및 의료 공급망 전체에 대한 안전, 환경, 및 사회적 결과의 우수성 추구'를 비전으로 합니다. PSCI 의 원칙은 윤리, 인권과 노동, 건강과 안전, 환경, 관리 시스템 등 크게 5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지며 제약 기업에 특화된 세부 관리 요소로는 동물 복지, 환자 안전 및 정보 열람 권리 보호, 공정 안전, 위험 정보, 누출 및 방출 등이 있습니다. PSCI 는 제약·의료 산업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2022 년 3 월 기준 PSCI 에 가입한 기업은 61 개사로 국내에서는 SK 바이오팜이 유일하게 가입했습니다.

(2) SMI(Sustainable Markets Initiative)

SMI 는 영국 왕실 주도의 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로 산업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활동합니다. 의료 시스템 TF(Health System Taskforce)는 그 중 하나로 개인, 사회 및 지구의 건강을 개선하고 넷제로를 가속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머크, 사노피, 로슈, GSK 등 글로벌 제약업체들이 참여하며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디지털 헬스케어, 공급망, 환자 치료 경로 세 가지 영역을 우선순위로 하여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3. 국내 정책 동향

(1) '식의약 규제혁신 100 대 과제'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 월 11 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 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혁신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신제품 개발 활성화와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안전·건강과 직결되지 않으면서 시대·환경 변화에 맞지 않고 기업 활동에도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식의약 규제혁신 100 대 과제는 ▲신산업 지원 ▲민생불편·부담 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 해소 4 개 분야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	주요 과제
신산업 지원	① 디지털헬스기기 등 의료기기 맞춤형 신속 분류제도 도입 ② 코로나 19 mRNA 백신, 치료제 개발 신속 임상 지원 플랫폼 마련 ③ 미래 식품 원료의 인정 확대
민생불편·부담 해소	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망보상금 지급대상 확대 ② 음식점 옥외 조리행위 허용 확대 ③ 해외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 확대
국제조화	① '글로벌 식의약 정책 전략 추진단' 구성·운영 ② 디지털헬스기기의 국제적 규제기준 선도
절차적규제 개선	①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계도기간 부여 ②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신설

(2) 의료 마이데이터 시범 개통

8 월 31 일 보건복지부는 의료 마이데이터를 위한 시스템 '마이헬스웨이' 초기 단계 구축을 완료하고 서울과 부산에서 시범 개통했음을 밝혔습니다. 금융과 공공 분야에선 마이데이터가 도입됐지만, 의료 분야는 규제 수준이 높고 데이터 표준화가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 월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이헬스웨이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8 월부터 약 200 억원 예산을 투입해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마이헬스웨이는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본인의 개인 의료데이터를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손쉽게 받아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이 제공하고자 하는 곳 어디로든 통합·표준화된 형태로 쉽게 보내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향후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4. 해외 기업 동향

(1) RE100, EV100 등 친환경 이니셔티브 동참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의 대다수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사용비율 100% 달성 목표를 수립 중이며 일부 기업은 RE100, EV100 등 친환경 이니셔티브에 동참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질병 감염의 매개체인 모기, 벼룩 등의 분포지역이 달라짐에 따라 특정 지역의 신종 감염병 노출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고 건강 불평등 문제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의 탄소 중립은 친환경 이슈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Biopharma Investor ESG Communications Guidance 2.0 주요 항목

이니셔티브	기업명(국가)	목표연도	가입연도/대수
RE100	Astrazeneca(영국)	2025	2016
	Biogen(미국)	2014	2014
	Daiichi Sankyo(일본)	2050	2021
	Eisai(일본)	2030	2021
	Gilead Sciences(미국)	2025	2021
	GlaxoSmithKline(영국)	2025	2020
	Johnson&Johnson(미국)	2025	2015
	Novartis(프랑스)	2025	2021
	Novo Nordisk(덴마크)	2020	2015
	Sanofi(프랑스)	2030	2020
EV100	Astrazeneca(영국)	2025	16,000 대
	Biogen(미국)	2030	16,000 대
	Genentech(미국)	2030	1,300 대
	Gilead Sciences(미국)	2030	2,475 대
	GlaxoSmithKline(영국)	2030	19,000 대
	Novartis(프랑스)	2025	25,000 대
	Novo Nordisk(덴마크)	2030	8,000 대

출처: RE100(www.there100.org), EV100(www.theclimategroup.org/ev100) 웹사이트(2022.1.10. 기준)

(2) 의료 접근성 문제 개선

의약품 접근성은 빈곤층, 개발도상국 거주자 등에 대한 가격 접근성 문제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나, 취약한 의료 인프라에서 기인한 의료 접근성 저하와도 맞닿아 있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에 글로벌 제약사들은 국가별 약가 차등화, 의약품 기부와 같은 단순 지원 외에도 취약계층 의료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질병 예방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Novartis 는 보건 체계 미구축으로 인한 의료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취약지역에 의료거점시설을 구축하고 보건의료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격오지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스웨덴의 당뇨 전문기업인 Novo Nordisk 는 사회적 활동의 한 축을 '당뇨 퇴출(Defeat Diabetes)'로 설정하고, 기업의 다양한 활동들을 당뇨 퇴출의 맥락 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헬스케어 산업 사회 이슈 -

(신승국, 이광욱, 이근우, 유현상, 양희, 김현지 / 2022. 9. 21)

- 헬스케어 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 증가와 기업 대응 추이 -

헬스케어 섹터는 의약품 접근성 이슈 및 윤리경영 등이 주요한 사회 이슈입니다. 글로벌 상위 바이오·제약기업들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경영 전략 수립을 통해 ESG 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회적 이슈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나,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헬스케어 기업들은 ESG 규제가 국가간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글로벌 기업들을 지켜보면서 긴밀한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배경 및 중요성

2021 년 PwC 의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 대상기업인 제약·바이오 32 개사 중 84%가 GRI, SASB 또는 두 공시 표준 모두를 활용하여 ESG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2020 년 주요 글로벌 제약사가 참여한 'Biopharma Sustainability Roundtable'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인 「Biopharma Investor ESG Communications Guidance 2.0」은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의약품/헬스케어의 가격 접근성, 경영 윤리, 진실성 및 컴플라이언스, 임상시험 시행절차, 인적자원 관리 등이 중요 이슈로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전세계적인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은 보건이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USMCA, CPTPP, CETA 등 다자간 통상 조약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관련 조항이 도입 되는 등 ESG 의 사회 이슈가 무역·통상의 핵심 의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 헬스케어 업계의 사회 이슈 관련 노력

주요 사회 이슈로는 1) 의약품 접근성, 2) 인적 자원 관리, 3) 임상시험 기준, 4) 윤리경영 등이 있습니다. 의약품 접근성은 취약한 의료인프라에 노출된 빈곤층, 개발도상국 거주자 등에 대한 가격 접근성 및 의료 접근성 향상과 연관된 이슈입니다. 인적 자원 관리는 인종·성별 등의 관점에서 인력 구성의 다양성에 관한 이슈이며, 윤리경영은 리베이트, 담합 등 컴플라이언스 관련 이슈 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상시험 기준은 임상시험 수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와 인종다양성 반영 이슈입니다.

(1) 의약품 접근성

글로벌 제약사들은 의약품 기부와 같은 단순 지원 외에도 국가별 약가 차등화, 취약계층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질병 예방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Novartis 는 보건체계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접근성 저하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취약지역에 의료거점시설 구축 및 보건의로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소외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환자가 자사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가격 책정 및 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며, 신약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역에 관계 없이 최대한 많은 수의 환자에게 의약품을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Novo Nordisk 는 질병 예방활동으로 '당뇨퇴출(Defeat Diabetes)'을 선정하여, 가격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저소득 국가 및 소수자들에 대한 인슐린 가격을 인하하는 외에도 아동 1 형 당뇨병 의약품 지원, 기타 의약품 기부활동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치료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Takeda 약품공업 또한 환자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차등요금"에 대한 약속을 도입하는 혁신적인 가격원칙을 채택하였습니다.

(2) 인적 자원 관리

미국 Abbvie 는 형평성, 평등성, 다양성 및 포용성(EED&I) 프레임워크와 전략을 시행하면서 직원의 다양성의 관점에서 인재를 유치하고, 관련 커뮤니티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성에 기반한 채용을 위해 Historically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HBCUs)와의 집중적인 파트너십을 확장하였습니다.

미국 Pfizer 는 고용환경에서의 양성평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Pfizer 는 2020 년말 38.1%였던 부사장급 이상 여성의 비율이 2021 년말에는 41.5%를 기록하였고 2025 년까지 47%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GSK 는 다양성 및 포용성 측면에서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2025 년 말 까지 여성 및 소수인종 등의 고위직 대표자 비율을 45%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사급 이상 직위에 있는 여성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 년 기준 이미 부사장 이상 직위 중 여성의 비율이

40%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2021 년 기준 미국 내 부사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소수인종의 비율 또한 27.1% 에 육박하였습니다.

(3) 임상시험

헬스케어 업계에서는 임상시험 고려사항으로 수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및 인종다양성 반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상시험 중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인권 침해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약사들은 보다 엄격한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2021 년 미국 FDA 는 제약사들에 유병인구의 인종·민족적 다양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임상시험이 진행되었음을 지적하며 다양한 환자들이 임상시험에 참여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어 향후 글로벌 임상 환자 모집 방식에도 인종다양성이 중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주요한 사회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참고: 글로벌 제약사의 사회분야 주요 대응 사례

구분	주요 대응 사례
사회	소외계층의 재정 지원을 통한 의약품 및 치료 접근성 개선
	신약개발 과정에서의 임상시험 인종 다양성 확보
	공급망 다양화 및 리스크 평가를 통한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
	제품 안전성을 위한 노력
	채용 및 멘토링 과정에서의 다양성 및 포용 정책

자료: PwC(2021), "ESG for pharmaceutical and life sciences companies"

3. 국내 기업의 대응 방향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회원사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헬스케어 기업들은 복잡한 평가기준, 전문인력 부족,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ESG 경영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1 년 금융위원회의 ESG 포털에 따르면 국내 헬스케어 기업들이 받은 ESG 최고등급은 A(우수)에 불과했으며, 22 개사는 관련 자료가 없어 평가조차 받지 못한 실정입니다. 현재는 상위 제약사 위주로 ESG 경영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나, 중요 신약들의 특허 만료로 인한 제약사 간 경쟁이 심화되고, 선진국 주도의 ESG 를 통한 통상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위탁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국내 헬스케어 기업들은 신속한 ESG 대응을 통해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헬스케어 섹터 환경 이슈 -

(신승국, 이광욱, 이근우, 조준오, 김연각, 양희 / 2022. 9. 13)

- 헬스케어 산업의 친환경 사업 전략 동향 -

헬스케어 섹터는 규제화를 통해 확대되는 환경경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주요하게 개선 및 추진이 요구되는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인 목표 설정 및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은 10 년 이내에 탄소 중립 및 유의미한 폐수·폐기물 저감계획을 수립 중이며, 점차 공급망 내 업체들에 대한 적용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1. 배경 및 중요성

국내 헬스케어 산업은 규제 산업에 해당하는 특성에 의해 준법경영시스템(ISO 37001), 부패방지 관련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또는 의약품 품질 관리(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등 다양한 인증을 받고 유지하는 등 ESG 경영을 실행하고 있으나, "환경"과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전사적인 차원에서 관리체계를 구축하거나 의사결정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헬스케어 산업이 탄소중립이나 친환경 정책 및 구체적인 환경경영 목표를 제시할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2. 3. 21. 모든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리스크 및 그 영향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는 새로운 규칙(Rule)을 제안하였으며, 그에 따르면 2023 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부터 상장 대기업을 대상으로 Scope 1 과 Scope 2 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공시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EU 분류체계는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호,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의 총 6 가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달성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에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라 판단하고 있으므로, **헬스케어 산업의 ESG 분야 환경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하고 있습니다.**

2. 헬스케어 업계 친환경 사업 전략

가. 탄소중립

대다수의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에 대한 구체적목표를 수립하고, 일부 기업은 RE100, EV100 등의 친환경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생에너지 구매 등을 통한 RE100 가입 이외에도, 제약산업은 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스팀 회수를 통한 에너지 절감, 운송망의 친환경 차량 적극 도입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스위스의 다국적 제약사 Novartis 는 북미 및 유럽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비율 100%를 달성한 외에도, 2030 년까지 Scope 3(직접적인 제품 생산 외에 협력업체와 물류, 제품 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 외부 탄소배출량을 의미합니다)에서의 탄소중립 달성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량을 기반으로 하는 온실가스 원단위 감축목표를 2025 년 까지 2020 년 대비 37% 절감하는 목표를수립하였고, 2022 년 현재 2020 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3.4% 감축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나. 물 환경 및 오염물질 배출

의약품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유기용매, 항생제, 의약품 유출 등 오염물질 배출에 의한 물 환경 오염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헬스케어 산업의 주요 환경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 폐기물은 수로로 흘러 들어가 다중 약물에 내성을 나타내는 병원균을 발생시킨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폐수 배출 저감을 통한 물환경 보전 및 오염물질 배출 감소는 헬스케어 산업의 중대한 환경 이슈에 다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다국적 제약사 Novartis 는 2025 년 까지 제조 과정 상의 배수로 인한 수질 영향이 없도록 하고, 2030 년까지는 사업장인근의 수질이 오히려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지속가능성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MSD(Merk Sharp & Dohme Corp.), Pfizer 등은 녹색화학(Green Chemistry, 친환경 원료와 용매를 사용하고 합성 과정을 간소화 시켜 환경친화적인 화합물을 제조하는 화학의 한 분야)기반의 연구개발 활동 및 이니셔티브 가입, 산업용수 재활용, 유기합성 기반 의약품을 생물 공정을 통해 생산하는 등의 친환경적인 의약품 생산을 위한 노력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 폐기물 감축 및 포장재

최근 플라스틱 이용 감소 움직임에 따라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의 이중 과대 포장을 줄이고 포장 재료를 친환경 포장 재질로 대체하거나, 일회용 기반 시스템(Single Use System)에 대한 대체를 시도하는 등 폐의약품 처리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사용 용기, 주사기 또는 오토인젝터 등의 회수 및 포장용기 간소화, 플라스틱 대체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관련하여, Takeda 는 포장에 재활용 자재 사용, 재활용률을 최대화하여 모든 가치사슬에 걸친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GlaxoSmithKline 은 2030 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제료를 포함한 폐기물 제로, 제품 및 포장에 대한 환경영향 25% 감소, 공급망으로 인한 폐기물 10% 감소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약품은 일회용 기반 시스템의 장점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향후 ESG 스탠다드 및 관련 규정의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참고: 글로벌 제약사의 환경분야 주요 대응 사례

구분	주요 대응 사례
환경	친환경 운송수단 이니셔티브 가입
	5-10 년 내 탄소중립 실현
	연속제조 또는 기타 공정기술 개선에 의한 폐기물 관리 및 제조비용 절감

자료: PwC(2021), "ESG for pharmaceutical and life sciences companies"

3.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및 전망

헬스케어 산업에 있어서도 ESG 경영은 단순히 추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관리하는지를 계속해서 검증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목표의 설정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는 기업의 그린워싱 사례가 되어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에서 논의된 규범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원료 및 완제의약품의 위탁생산(CMO,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국내업체들은 ESG 대응 지연이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 - 화학 및 소재 산업 -

(신승국, 이광욱, 이근우, 조준오, 양희, 김현지 / 2022. 8. 8)

- 제품 전과정(Life Cycle) 관리를 통한 탄소, 플라스틱 폐기물의 환경 부하 저감이 중요 -

화학 및 소재 산업의 주요 ESG 이슈는 제품 탄소발자국, 친환경 기술, 유해 물질 및 폐기물, 수자원, 산업안전, 노동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플라스틱 이슈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학 및 소재 산업은 2024 년 의무화될 예정인 공급망 실시 제도, 2024 년 마련될 예정인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국제협약과 2025 년 도입될 EU 탄소국경세 (CBAM)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이므로 이에 따른 동향을 살피고 선제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ESG 스탠다드

(1) 화학산업 SASB 기준, '일회용 플라스틱 관리' 주제 추가

일회용 플라스틱의 생산 및 폐기와 관련된 환경적 외부 효과로 인해 최근 몇 년 동안 글로벌 규제가 증가하고 소비자 수요가 변화되었으며, 대형 소비자 기업은 100% 재활용·재사용 가능한 포장재 사용으로의 전환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처럼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의 위험과 기회는 화학산업에 속한 기업에 재무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만 화학산업 SASB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20 년 6 월, SASB 기준위원회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고 기회를 식별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반영하기 위한 공개 주제 및 지표를 평가할 목적으로 기준 설정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2022 년 6 월, 이사회는 '일회용 플라스틱 관리' 주제를 추가하고 이와 관련한 5 개의 새로운 지표를 추가할 것을 권장하였으며, 현재 프로젝트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로 이전되어 ISSB 의 절차를 따라 업데이트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2. ESG 이니셔티브

(1)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의 '탄소 투명성을 위한 파트너십(PACT)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가 이끄는 연합체인 '탄소 투명성을 위한 파트너십(PACT)'이 기업·공급망 간 탄소 배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패스파인더(Pathfinder) 프레임워크'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기업간 생산·구매한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에너지 소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록하는 탄소 회계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며, 기업과 공급업체가 사용하는 탄소 회계 기술 솔루션들이 호환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공급업체의 배출량 데이터를 상호 확인 및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업 간 배출량 정보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 월 PACT 는 바스프, 다우, 유니레버 등 세제 및 화학물질 제조사를 중심으로 배출량 데이터를 시범 교환하였습니다. 벨기에 화학기업 솔베이의 최고지속가능성책임자는 "제품 탄소발자국을 측정 및 공유함으로써 배출량 순제로를 달성하고 탄소 배출 데이터를 공급망에 공유할 수 있는 협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Responsible Care (RC)

RC(Responsible Care)는 글로벌 화학산업의 환경·안전·보건에 대한 자발적인 지속가능 프로그램으로, 제품 개발에서부터 제조, 판매, 유통,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과 안전을 강화하고, 실행하는 국제적 이니셔티브입니다. 기업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RC 에 참여하는 기업은 환경·안전·보건 성과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는 워크샵, 교육 및 기타 자원에 접근할 수 있으며, 기업이 이해관계자, 공급사 및 고객과의 관계 구축에 도움이 되는 네트워킹 기회를 갖게 됩니다.

3. 국내 규제 동향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허가 물질 지정 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21.10.12.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14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에 관한 등록·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8034 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화학물질 수출입에 관한 제공 요청 자료의 내용 등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을 할 때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허가 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대상 후보 물질을 선정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게 되었습니다.

(2) 경제 규제 혁신방안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은 2022.07.28.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규제 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단기간에 규제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6 개 분야 50 개 과제를 발표했으며 주요과제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집중적 활용 필요 분야 선정기준 설정 및 적용대상 제품 군 확정 등 활용기반 마련'과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의 업종 코드에 대한 적극 해석으로 산단 입주를 허용 및 同 생산 업종의 산업분류코드 명확화'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음식물쓰레기 봉투 등 제품 특성상 자원 재활용 체계로

회수가 어려운 제품 군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기업의 투자 집행 및 산단입주 등과 관련된 기업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세계적으로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국내 기업은 규제로 인해 참여를 주저하고 있었으나, 활용 분야가 뚜렷해지면 기업의 투자계획 집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국내외 기업 사례

(1) BASF

독일계 글로벌 화학기업 바스프(BASF)는 "지난해 발표한 넷제로 계획이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탄소 발자국을 추적하는 솔루션과 함께 넷제로 및 저탄소 제품의 제공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스프는 지난해 2050년까지 Scope 1, 2 넷제로 달성,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은 바 있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바스프는 2025년까지 최대 10억 유로를 투자하고 2030년까지 20억~30억 유로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바스프는 2030년까지 전력 수요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자체 재생 전력을 위한 자산에 투자하고, 제 3자로부터 녹색 전력을 구입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나아가 재생 가능한 전력, 저탄소 증기, 바이오 기반 공급원료 및 고효율 공정을 생산과정에 적용하면서 소비자에게 제품 탄소발자국(PCF)가 낮은 넷제로 제품을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2) LG 화학

LG 화학은 화학업계 최초로 '2050 탄소중립 성장'을 핵심 전략으로 채택하고, 2050년까지 바이오 소재와 재활용, 신재생에너지 산업 소재 등 친환경 소재 비즈니스에 3조원을 투자하여 미래 핵심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RE100은 '2050 탄소중립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LG 화학은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전 세계 모든 사업장에 RE10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E100 이행을 위해 녹색프리미엄제와 전력구매계약(PPA)은 물론 인증서(REC) 구매, 자가발전 등 모든 방안을 전략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Scope 3 분석과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2년 국내 생산 전 제품에 대한 LCA(Life Cycle Assessment) 완료, EU의 탄소국경세가 발효되는 2023년까지 해외 생산 전제품에 대한 LCA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 화학 및 소재 산업 사회 이슈 -

(신승국, 이광욱, 이근우, 유현상, 양희, 김현지 / 2022. 8. 23)

- 화학 및 소재산업의 규제 동향 -

화학 및 소재 산업에서 주요하게 관리되어야 할 사회 이슈는 근로자 및 지역사회의 안전입니다. 국내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리법 등을 통해 근로자 및 지역사회의 안전을 기하고 있으며 EU에서는 REACH를 통해 화학물질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합리적인 화학물질

관리체계 마련'이므로 새로운 정책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배경 및 중요성

화학 및 소재산업의 경우 공장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인근 지역 주민 및 근로자의 건강 및 생명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주요한 이슈입니다. 최근 환경운동연합이 분석한 연도별 화학 사고 건수에 따르면 2012 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와 가슴기 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제·개정된 화학물질 안전 관련 법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화학 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9 년 말부터 2020 년까지 정부의 화학물질 규제 완화가 본격화되자 2020 년에는 96 건으로 전년 대비 절반 이상(54.8%)이나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인 화학물질 관련 국내법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을 둘러싸고 산업계와 환경보호단체들은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 국내외 관련 규제

(1) EU: REACH(신화학물질규제)

EU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는 EU 내에서 연간 1 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혼합물 및 화학물질을 포함한 제품)에 대해 유통량 및 유해성 등에 따라 등록 평가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EU 신 화학물질관리 제도'로 2007 년 6 월 1 일부터 발효된 제도입니다.

EU 에서 연간 1 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물질에 대해 EU 내 제조, 수입자가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하면, 유럽화학물질청과 EU 회원국은 등록 서류의 검토와 함께 물질의 유해성을 평가합니다.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유해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허가 및 제한이라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고, 궁극적으로 대체물질개발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분	대상 물질
등록대상 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질: 연간 1ton 이상의 물질 • 혼합물: 혼합물 내 포함된 연간 1ton 이상의 물질 단, 상위 공급자가 동일 용도로 등록한 물질은 면제 • 완제품: 완제품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배출되는 ≥1 톤/년 이상의 물질
등록제외 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Regulation (EC) No.726/2004) • 식품 첨가물(Regulation (EC) No.178/2002) • 식품 향신료(Commission Decision 1999/217/EC) • 시료 첨가물(Regulation (EC) No.1831/2003) • 동물 영양제(Council Directive 82/471/EEC)
등록면제 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nex IV • 환경적 요인에 노출되어 화학반응으로 생성된 물질 • 저장 중 우연히 일어나는 화학반응으로 생성된 물질 • 최종 사용시 발생하는 화학반응으로 생성된 물질 • 그 자체로서는 수입 또는 시장 출시가 되지 않은 부산물 • 물질이 등록이 된 이후 그 물질과 물이 결합하여 생성된 수화물 또는 수화 이온 •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질(예: 광석, 천연가스, 석탄, 원유 등) • 유해성 및 유해성이 이미 잘 알려진 기초적인 물질들(예: 수소, 산소 등) • 연구 및 개발에 사용되는 PRORD 물질(한시적 면제 물질)

(2) 국내: 화학물질관리법 등

가습기 살균제 사고(2011.4), 구미 불산 사고(2012.9) 등 잇따른 화학 사고에 따라 종전 유해법 관리체계가 한계에 직면하면서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2015 년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개편되었고, 2019 년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추가되어 규제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화학 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구축,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설치·운영기준 구체화 등의 안전관리 강화, 화학 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 및 영업 허가제 신설 등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 사고대비물질 관리강화, 화학 사고의 발생 시 즉시 신고의무를 부여, 현장 조정관 파견 등 화학 사고의 대비·대응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한편 화학물질의 등록·평가법 도입으로 출시 이전에 화학물질 정보를 등록·심사·평가하여 유해화학물질로 지정·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이 법은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화학물질 확인과 유해성 등 안전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공유하며, 생활용 화학제품으로 인한 독성 피해사고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의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제정되었습니다.

연간 1 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과 국내 시장에 새롭게 유입되는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심사가 의무화되고,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은 폐기 또는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3. 국내 기업 동향

금호석유화학은 본사 기술기획본부 소속의 안전환경팀을 대표이사(CEO) 직속의 '안전환경기획실'로 격상하여 향후 안전환경실은 금호석유화학의 12 개 사업장의 안전·환경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ESG 컴플라이언스 기능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LG 화학은 전세계 37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안전 기준을 재정립하고 관리체계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위험 공정 및 설비에 대한 긴급 진단을 우선 완료하고 총 590 개 항목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즉각 조치를 위해 총 810 억원 규모의 환경안전 투자를 추가로 집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 규정 체계 보완 및 기술 지침 등을 외부 전문업체와 협업해 설계·운전 노하우·유지보수·법규 등 환경안전 분야에서 총 25 건의 개정사항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충남 서산 대산공장 NC(나프타 크래킹 센터) 공정 재가동에 맞춰 특별 안전환경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국내외 전 사업장의 안전환경 기준을 글로벌 상위 수준으로 재정립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케미칼 부문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경영 상황을 전반을 논의하는 안전보건경영위원회도 신설했습니다.

4. 시사점

최근 환경부는 2022. 6. 8.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상의 중복규제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지정 폐기물처리 업계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이 중복 적용에 관하여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에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보관·운반하는 등의 취급하는 과정에서는 '폐기물관리법'만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110 대 국정과제에서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과학적인 정보에 기반하여 국민 안전은 높이고 기업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화학물질 관리 체계가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국내 화학물질 관련 규제 또한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추어 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기업들은 새 정부의 화학물질 관련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그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화학 및 소재 산업 환경 이슈 -

(신승국, 이광욱, 이근우, 조준오, 김연각 / 2022. 8. 16)

- 화학 및 소재산업의 탄소중립과 플라스틱 폐기물 억제 동향 -

화학 및 소재 산업은 원료와 제조과정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특성으로 각 가치사슬의 특성을 고려한 탄소 발생 저감 전략 도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제 현안으로 부상한 플라스틱 오염에의 대응을 위해, 화학 및 소재 산업은 폐기물 원료화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 화학 및 소재 산업의 넷제로 달성

가. 배경 및 중요성

2022. 6. 29. 유럽연합 이사회는 유럽연합 의회가 제안한 CBAM 법률안에 관한 기본 입장을 "도입 지지"로 확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논의된 CBAM 법률안의 적용대상 업종은 시멘트, 전력생산, 비료, 철강, 알루미늄 등 5 개 분야이나, EU 의회는 기존에 논의된 5 개 분야에 더하여 '유기화학 제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등 4 개 분야를 추가하고, 전기 생산에 수반되는 탄소 배출(간접배출)도 CBAM의 적용대상으로 할 것을 예정하고 있어, 화학 및 소재 산업의 CBAM 대응을 위한 넷제로 달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나. 석유화학 산업의 탄소배출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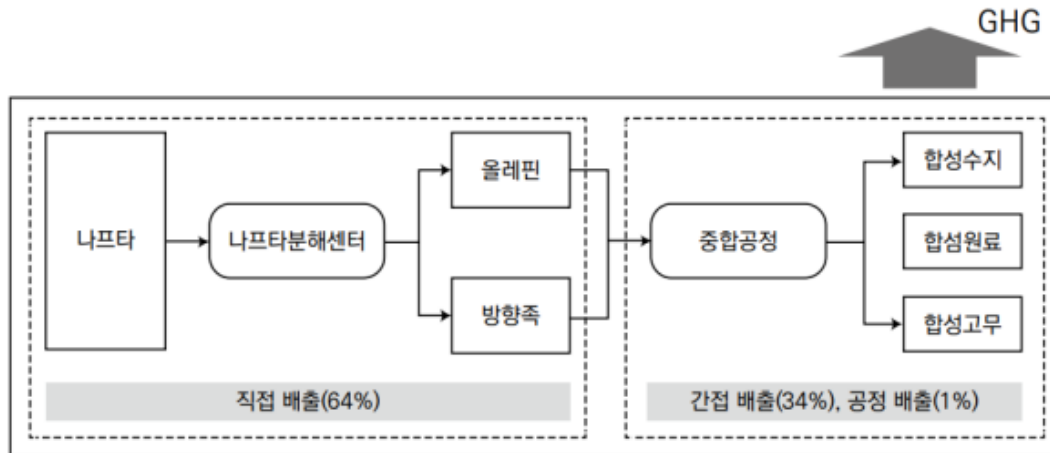
1) 다량의 탄소 배출

석유화학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대 2%를 차지하며, 이는 항공 산업의 전체 배출량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특히 석유화학은 원료와 제조과정 모두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넷제로 실현을 위해서는 철강이나 시멘트의 탈탄소화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간접배출

석유화학 산업은 기초 유분(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BTX(Benzene, Toluene, Xylenes) 등)을 활용해서 종합공정 과정을 통해 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 및 기타 화학제품을 생산하는데, 종합공정 과정에서 전력을 다량 사용하며 이는 모두 간접배출 실적으로 계상됩니다. 그에 따라 석유화학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간접배출이 35%를 차지하며, 간접배출의 대부분은 전력 사용에 따른 배출입니다.

<석유화학산업 온실가스 배출 구조>



<출처 : KIET 산업연구원, 석유화학산업 탄소중립 전략과 정책적 대응방안>

다. 국내외 기업 동향

최근 석유화학업계에서는 제품 제조 전 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정량화하는 LCA(전 과정 평가)를 통해 넷제로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G 화학은 2022. 국내에서 생산하는 전 제품에 대한 LCA 를 완료하고, 2023. 해외 생산 전 제품에 대한 LCA 를 완수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으며(LG 화학 지속 가능 경영보고서), 롯데케미칼, SK 이노베이션, SK 케미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대형 석유화학 기업들 또한 LCA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화학업체 아반티움(Avantium)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생가능한 플라스틱을 만드는 시범 공장을 건설, 2024. 생산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플라스틱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억제

가. 배경 및 중요성

제 5 차 유엔환경총회*(UNEA 5.2)가 금년 3 월 개최되었습니다. 제 5 차 유엔환경총회의 주요 목표는 "플라스틱 오염을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지"였는데, 결과적으로 해당 총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175 개의 회원국들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간 협상 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2024.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해당 논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서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재활용, 처리까지 전 생애 주기 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해양뿐 아니라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를 다루는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만들기로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잉거 앤더슨 UNEP 사무총장은 "파리기후협정 이후 가장 중요한 환경 다자간 협약"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 * 유엔환경총회: 유엔회원국 전체가 참가하여 유엔환경계획(UNEP)의 사업계획 뿐만 아니라 주요 환경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환경 회의로, 제 5 차 총회는 코로나로 인해 1·2 부로 나뉘어 개최
- * 결의안 명칭: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End plastic pollution: Towards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나. 국내외 기업 동향

2024.까지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할 국제협약을 만들겠다는 제 5 차 유엔환경총회(UNEA-5.2)가 있는 후, 석유화학업계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다시 원료로 재활용하는 등 신기술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 최대 석유화학 기업인 다우케미칼, 사빅, 세브론, 필립스케미칼 등은 모두 플라스틱 재활용 스타트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로얄더치셀은 싱가포르의 석유화학 단지에서 열분해 원유 업그레이드기(Pyrolysis oil upgrader)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엑손모빌 또한 2021. 11. 북미에서 가장 큰 시설로 알려진 플라스틱 폐기물 고급 재활용 시설 설립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는 SKC 가 2030 년까지 플라스틱 넷제로 실현 목표 기반,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해 재활용 및 소각되는 폐플라스틱 절대량을 줄이고, 페트 필름 제조에 사용하는 칩을 재생 칩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지속가능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SKC 는 국내 최초로 2019 년 7 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연합 AEPW 에 가입하기도 하였습니다. SK 종합화학은 2021 년 SK 지오센트릭으로 사명을 바꾸고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주도하는 도시유전 기업으로의 성장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SK 지오센트릭에 따르면 오는 2025 년까지 울산에 21 만 5000 m²(약 6 만 5000 평) 부지에 폐플라스틱 재활용 클러스터(Recycle Cluster) 구축할 계획으로, 3 대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모두 한 곳에 모아 리사이클 클러스터 조성하는 것은 SK 지오센트릭이 세계 최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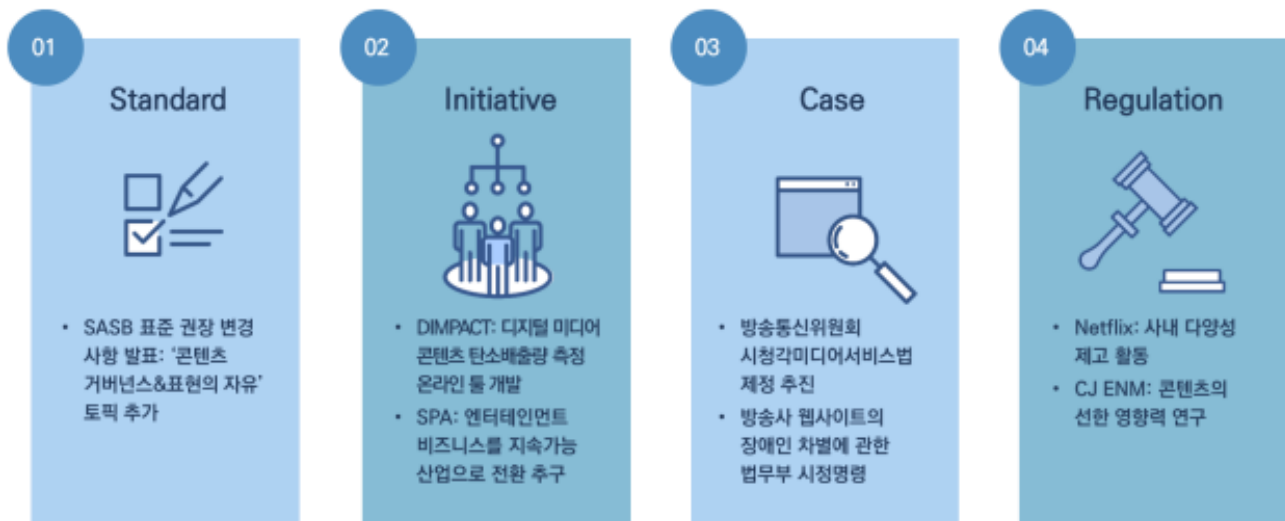
3.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및 전망

향후 제정될 국제 협약은 플라스틱 폐기물 수집, 재활용 확대 및 화석연료 사용 저감 기술 도입에 그치지 않고 플라스틱의 생산 및 거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라스틱의 생산 및 거래를 직접 제한하게 된다면 국내 산업계 또한 그에 적극 대응하여 산업,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소재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미국화학협회(American Chemistry Council), 플라스틱 유럽(Plastics Europe)등 주요 산업협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므로,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2024. 국제협약의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논의의 진행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 미디어-엔터 산업의 문화적 파급력을 고려한 ESG 이슈 관리가 필요 -

(신승국, 이광욱, 이근우, 유현상, 양희, 김현지 / 2022. 7. 4)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주요 사회 이슈는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안, 인적자본관리, 노동 관리, 콘텐츠에 대한 책임이며, 주요 환경 이슈는 원자재 소싱 및 탄소 배출입니다.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문화, 사회적 견해, 사회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불평등과 차별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도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은 문화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ESG 이슈를 주의 깊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ESG 스탠다드

• SASB 표준위원회 미디어 & 서비스 산업 변경사항 발표

2022년 6월 2일 SASB 표준 위원회는 인터넷 미디어 및 서비스(Internet Media & Services) 표준에 대한 권장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산업의 사용자는 폭력 선동, 테러 행위 미화, 아동 성적 학대 묘사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거나 업로드 함에 따라 콘텐츠와 관련된 위험이 있으므로 '콘텐츠 거버넌스 & 표현의 자유' 토픽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토픽인 '데이터 프라이버시, 광고 표준 & 표현의 자유'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 광고 표준'으로 변경되었으며, '표현의 자유' 관련 지표는 '콘텐츠 거버넌스 & 표현의 자유'로 재배치되었습니다.

2. ESG 이니셔티브

(1) DIMPACT

DIMPACT는 글로벌 미디어 및 기술 기업과 브리스톨 대학(University of Bristol)의 연구진이 함께하는 협업 프로젝트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의 탄소배출량 측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온라인 툴을 개발합니다.

디지털 콘텐츠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므로 배출량 측정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브리스톨 대학 연구진은 10 년에 걸쳐 인터넷 사용의 탄소배출량 산출 도구를 개발하고, 기업에게 직접 데이터를 받아 배출량을 측정합니다. BBC, Netflix, dentsu 등 글로벌 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은 기후 영향을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평가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 SPA

SPA(Sustainable Production Alliance)는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영화, TV 및 스트리밍 기업 컨소시엄으로, 회원으로는 Amazon Studios, Disney, Fox Corporation, Netflix, Paramount, Sony Pictures Entertainment 등이 있습니다. 영화, 텔레비전 및 스트리밍 전문가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 및 리소스의 생성 및 배포를 통해 세계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며 2010년에는 PGA 녹색위원회와 함께 GPG(Green Production Guide)를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COVID-19, 기후변화 등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논의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3. 국내 규제 동향

(1) 방송통신위원회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추진

방통위는 2022 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온라인 미디어의 급성장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디어서비스별 경쟁 활성화, 공익성 제고,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을 마련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해당 법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3 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의 규제 완화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신정부가 기업 대상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방통위 역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에서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대상 규제 관련 부문을 대폭 수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방송사 웹사이트의 장애인 차별에 관한 법무부 시정명령

법무부는 2021 년 열린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해 총 4 건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4 건의 시정명령에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대체 수단 부족 등으로 시각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iMBC, SBS 콘텐츠 허브 등 일부 방송사 웹사이트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CGV 압구정 '라이브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비장애인과 동일한 관람료를 지급하고 CJ CGV 주식회사에 문자 통역을 요청했으나 거부 당한 청각장애인에 대한 문자 통역 지원 등의 조치 △CGV 여의도 컴포트관·프리미엄관 장애인 관람석 마련이 포함되었습니다. 일부 방송사에 대한 시정명령은 장애인의 웹 사이트 접근성에 관한 최초의 시정명령 사례로 향후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 보장의 기준을 제시해 웹 접근성 관련 장애인 차별이 개선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CJ CGV 에 대한 시정명령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하고,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영화관의 의무를 인정해, 향후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장애인 차별이 개선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국내외 기업 사례

(1) Netflix, 사내 다양성 제고 활동

넷플릭스는 최고경영진 수준에서 다양성 전략을 감독하며 편견 없는 채용 프로세스와 직원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흑인, 라틴계, 아시아계, 성소수자 등 다양한 커뮤니티와의 행사를 개최하여 네트워크를 구축, 인재를 발굴하고자 하며 장애인 커뮤니티, 이민자 커뮤니티, 다문화 직원 커뮤니티, 문화적 유대인 직원 커뮤니티, LGBTQ+ 직원 커뮤니티 등 다양성을 고려한 사내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직원의 유대감 향상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향후 5 년간 1 억 달러의 넷플릭스 창작 기금(Netflix Fund for Creative Equity)을 조성하여 외부조직들과의 협력을 통해 TV 와 필름 산업에서 소외된 인재를 발굴하고 훈련해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투자할 계획입니다.

(2) CJ ENM, 콘텐츠의 선한 영향력 연구

CJ ENM 은 미디어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사회적 가치 평가 지표와 선한 영향력을 가진 콘텐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수준에서 통용될 수 있고, 콘텐츠의 선한 영향력 등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의 가치 창출과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여러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방송 미디어 콘텐츠의 조건들을 분석합니다. 콘텐츠가 선한 영향력을 갖기 위한 조건은 '사회적 가치 기준에 콘텐츠 기획 의도 부합'과 '시청자 몰입도(공감·감동·긍정 등)'로 구성된 1 차 영향과 '콘텐츠를 통한 시청자들의 인식, 행동 변화'와 '사회적 영향력(인식 개선, 제도 정비 등)'으로 구성된 2 차 영향으로 나뉩니다.

-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 산업 사회 이슈 -

(신승국, 이광욱, 이근우, 유현상, 양희, 김현지 / 2022. 7. 19)

- 산업 내 DEI 반영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중 -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이하 '미디어 산업')은 미디어 산업구조와 콘텐츠 내용에서의 다양성 가치가 주요한 사회 이슈입니다. 콘텐츠 제작 방식과 공급망에서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미디어 기업들은 출연진과 제작진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전체 콘텐츠 생태계에서 포용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아직 다양성 증진을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배경 및 중요성

미디어 산업은 C-P-N-D(Contents-Platform-Network-Device) 구조로, 인프라, 콘텐츠, 통신 등 다양한 요소를 지니고 있어 대중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고민이 적극적으로 요청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미디어 기업의 DEI(Diversity, Equity, Inclusion) 실천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다양성(Diversity)은 한 집단 내에서 나이, 종교, 성, 인종과 같은 개인적 특성의 차이 또는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고, 형평성(Equity)은 공정한 접근권과 기회를 보장하여 구성원 모두가 집단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안정감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포용성(Inclusion)은 모든 개인이 환영 및 지지를 받고 가치를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해외 정부의 정책적 노력 - 다양성 이슈 고려

(1) 영국, BFI 다양성 표준 마련

영국영화협회 (British Film Institute, 이하 'BFI')는 2016 년 영화 및 텔레비전 산업 분야에서 스크린 안팎에서 대표성이 적은 소수 그룹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BFI 다양성 표준(BFI Diversity Standards)'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BFI 다양성 표준'은 영화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다양성'을 위하여 영국 평등법에 따라 차별로부터 보호되는 대상(나이, 장애, 성전환, 결혼 및 시민 동반자, 임신 및 출산, 인종, 종교 또는 신념, 성별, 성적 취향)과 지역·사회경제적 배경에 있어서 소수인 집단의 재현 및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BFI 다양성 표준'은 BFI 의 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계약서상으로 요구되는 필수 사항으로, 캐릭터 및 주제, 핵심 스태프의 구성, 관객 개발 등의 측면에서 다양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2016 년부터 2019 년까지 지원사업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BFI 다양성 표준'이 영화에서 재현 주체의 다양성 및 영화산업 내의 다양성, 그리고 관객 다양성을 증진시켰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2)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다양성 관련 행정조치

바이든 행정부는 사회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및 접근성에 대한 연방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취임 초부터 인종 형평성 향상, 성별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 금지 등과 관련된 행정 및 입법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적 갈등과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2021 년 1 월 20 일에 발표된 '인종 형평성(racial equity)에 대한 행정명령(EO 13985)'은 인종 형평성 확보와 증진을 위한 연방정부 정책을 제도화하여 인종차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연방정부기관의 프로그램 참여 및 정책 수혜에 관한 기회 제공 측면에서 구조적인 인종차별 요인의 유무를 조사하고, 관리예산실(OMB)은 연방자금이 인종과 관계없이 공평하게 분배되는지를 분석하도록 하였습니다.

3. 해외 미디어 업계의 동향

넷플릭스는 2021 년 업계 최초로 자사 콘텐츠 306 건(2018~2019 년)을 분석한 다양성 보고서(Inclusion Report)를 발표하여 회사의 다양성과 포용성이 어떻게 실천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제시하였습니다. '대중 영화 속의 불평등' 연구 등으로 다양성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은 USC 애너버그 포용정책연구소의 스테이시 스미스(Stacy L. Smith)박사가 해당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였습니다. 넷플릭스는 2026 년까지 격년으로 다양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전 세계의 국가들에서 유사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5 년간 1 억 달러의 넷플릭스 창작 기금(Netflix Fund for Creative Equity)을 조성하여 TV 와 필름 산업에서 소외된 인재들에게 훈련과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데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통신 및 미디어그룹인 AT&T 는 2014 년부터 다양성과 포용성 보고서(Diversity & Inclusion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별 이슈를 직원, 콘텐츠, 고객, 협력업체, 지역사회 5 가지로 분류하여 다양성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직원 측면에서는 직장 내 성비 및 인종 별 불균형과 세대 격차, 다양성 문화 등을 주요 이슈로 선정해 다양성 최고 책임자(Chief Diversity Officer, CDO)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측면에서는 AT&의 콘텐츠가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워너미디어(WarnerMedia)의 콘텐츠에 다양성 이슈를 반영해 시청자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차별과 편견을 근절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으며, 특히 2020 년 성 소수자 가족의 갈등과 화합을 다룬 <트랜스후드(TransHood)> 등 다양성을 주제로 한 창작물을 제작 및 방영해 주목받기도 하였습니다.

4. 국내 기업의 대응 방향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커짐에 따라 해외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채용절차 및 직원의 구성에서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가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소수계층의 스토리를 반영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정보공개를 위해 다양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국내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업계도 아직 다양성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마련되고 있지 않으나, K 콘텐츠가 전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어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 산업 환경 이슈 -

(신승국, 이광욱, 이근우, 조준오, 김연각 / 2022. 7. 12)

- 미디어& 엔터 산업의 친환경 전략 동향 -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콘텐츠 제작부터 송출, 소비자의 스트리밍/관람 등 밸류체인 전 단계에서 환경영향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OTT 서비스의 확대와 고화질 영상의 증대는 탄소배출량 증가에 영향을 줍니다. 이에 국내외 기업은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위한 친환경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배경 및 중요성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전통적인 제조업에 비해서는 낮은 탄소 배출량을 보이는 특성이 있지만, 최근 콘텐츠 제작의 대형화로 인한 탄소배출 / 폐기물 발생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규모가 7 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블록버스터 영화는 제작과정에서 평균 2,840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알려져

있고, 일회성 대형 공연 또는 촬영에는 대규모의 폐기물 발생이 수반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 최근 영국의 유명 록밴드 콜드플레이는 탄소배출 및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제안, 공연에서 이행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2.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업계 에너지 효율화 추진전략

(1) 탄소배출량 감축

세계 최대 동영상스트리밍 업체(OTT) 넷플릭스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뿐 아니라 콘텐츠를 촬영하는 세트장에서도 집약적으로 환경 파괴 물질(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30%는 전력과 가스 사용, 그리고 디젤발전기 등 Scope 2(전력사용 등 기업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간접배출) 영역에서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고정된 네트워크를 이용해 1 시간 분량의 4K 고해상도 시리즈 물을 시청하면 대략 시간당 30g CO2e 를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Scope 3, 외부에서 기업 제품을 사용하면서 배출).

위와 같이,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탄소 발생의 유형을 고려해 업계는 “에너지 효율화 추진전략”을 ESG 정책의 가장 우선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JYP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K-RE100 에 가입하고, YG 엔터테인먼트는 신사옥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대폭 높이고 있으며, 넷플릭스는 영화 세트장 등 촬영장에서 사용하는 디젤발전기를 제거하고 이동식 배터리로 대체하는 방안, 그리고 콘텐츠 제작을 위한 출장 및 숙박을 제한하기 위한 현지 인력 고용 등 적극적인 에너지 효율화 전략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탄소배출량 감축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최대 OTT 기업 넷플릭스 내부의 탄소배출 저감 3 단계(넷플릭스 ESG Report 2020)]

이니셔티브	콘텐츠 제작	기업 운영	스트리밍 서비스
최적화 (Optimize)	운영효율성 달성을 위한 가장 비용 효율적인 절감방안 모색		
	출장 및 숙박을 제한하기 위해 현지인력고용	직원들에게 출퇴근 이동수단 제공 (ex. 셔틀, 대중교통 패스 무료 제공, 카풀지원금 지원, 뱅합승 등)	캐시서버 운영
전기화 (Electrify)	화석연료, 액체연료보다 탈 탄소화하기 쉬운 전기로 전환		
	디젤발전기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배터리 사용 및 스테이지 내 추가 전원선 설치 - 영국에서 제작된 브리저튼 시즌 2 에서 그린수소 연전지 지오퓨라(GeoPura) 최초 적용 - 영국, 캐나다, 미국에서 이동식 배터리 시범 적용	전기차를 위한 무료 충전 및 주차공 간제공	100% 달성
친환경 에너지화 (Decarbonize)	100% 재생가능한 전기 구입 또는 재생가능한 에너지 구입		
	사무실 전력 공급을 위해 지역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선택	특정 장소에 현장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및 100% 재생에너지 친환경 요금제 선택	데이터센터, 기술파트너의 친환경에너지 사용 및 고객에게 세부정보 공개 권장

(2) 탄소상쇄(Carbon offset) 시장 활용

탄소상쇄(Carbon offset)시장 또한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친환경 실천을 위한 주된 수단 중 하나입니다.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전통적인 제조업에 비해 배출되는 절대적인 탄소배출량이 낮은 특성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탄소상쇄(Carbon offset)시장 활용을 통해 피할 수 없는 탄소배출에 대한 감축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에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K 팝 숲”조성 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넷플릭스는 북미 최대 대초원 보존에 투자하는 ‘오리건 라이트닝 크리크랜치(Lightning Creek Ranch) 프로젝트’, 케냐의 건조지대 산림 보호 및 밀렵 방지를 위한 ‘카시가우 회랑 REDD+프로젝트(Kasigau Corridor REDD+Project)’ 등에 직접 투자할 예정입니다.

3. 폐기물 감축을 위한 노력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는 세트 제작을 위한 물리적 소품 사용을 위해 다양한 일회용품이 소모되고, 음반 등 미디어저장매체(CD) 제작에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는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는 유해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의 폐기물 발생은 산업의 규모에 비해 그 비중이 과도한 것으로, 과거부터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관련하여, YG 엔터테인먼트는 FSC(국제삼림관리협회의)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 종이와 콩기름 잉크, 생분해 플라스틱을 활용한 친환경 앨범을 선보이기도 하였으며, 실물 앨범이 없는 가상의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앨범”, 또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적용한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소품을 대체할 수 있는 가상현실 기술의 적극 도입은 친환경적 사업 활동뿐 아니라 기업의 수익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업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및 전망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C-P-N-D(Contents-Platform-Network-Device)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다른 단일 산업에 비해 구조가 복잡 다양한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 산업 자체의 환경 영향을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콘텐츠 제작자는 제작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다량의 탄소와 폐기물을 배출하게 되고,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센터, 전송 망, 셋톱박스나 라우터, 이용자의 노트북이나 TV, 스마트폰 등을 구동하기 위해서 많은 전력이 필요하며 이는 많은 탄소를 배출합니다. 최근까지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논의하거나 특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부족하였으나, ESG 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커지면서 국내 업계 및 해외 최대 OTT 업체인 넷플릭스의 친환경 정책 추진이 구체화되었는 바, 그에 따른 국내 제도의 변화 및 정책의 방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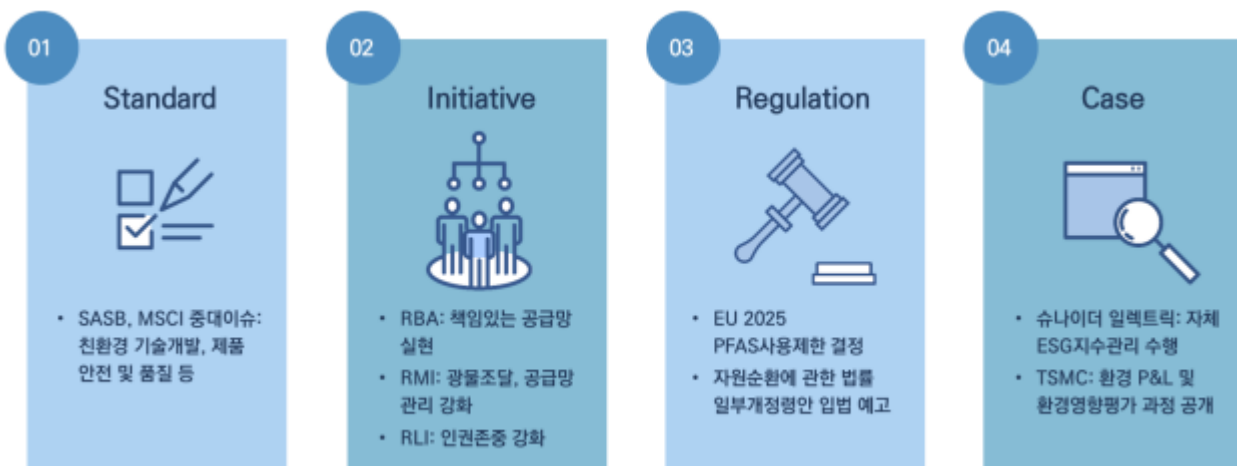
 - 전기, 전자 및 반도체 산업(ICT 하드웨어) -

(신승국, 이광욱, 이근우, 조준오, 양희, 김현지 / 2022. 6. 7)

- 제품 전과정의 지속가능성 관리가 필수적 -

전기, 전자 및 반도체 산업입니다. 전기, 전자 및 반도체 산업에서 주요하게 관리되어야 할 이슈는 친환경 기술 개발, 수자원 및 폐기물 관리, 기후변화 대응, 원재료 구매, 제품 안전 및 품질, 인적자본개발, 노동 관리 등이 있습니다.

구매부터 제품 생산 및 폐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환경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며 EU 공급망 실사법,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규제 영향권에 있는 산업이므로 기업은 공급망을 포함한 전과정 관리 및 탄소중립 등에 사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1. ESG 스탠다드

전기, 전자 및 반도체 산업에서 주요하게 관리되어야 할 이슈로, 환경 영역에서는 친환경 기술 개발, 수자원 및 폐기물 관리, 기후변화 대응, 사회 영역에서는 인적자본개발, 원재료 구매, 제품 안전 및 품질, 노동 관리, 공급망 노동 조건 등이 꼽힙니다. (SASB, MSCI 분석)

2. ESG 이니셔티브

(1) RBA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책임 있는 비즈니스 연합)는 책임 있는 공급망 실현을 위한 전기, 전자 및 반도체 산업의 대표적인 협의체입니다. 공급망 실사 표준, 도구 및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애플, 구글, 폭스바겐, 테슬라와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LG 등 글로벌 기업 200 여 개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 RMI

RMI(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책임 광물 이니셔티브)는 광물 조달과 공급망 관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RBA 산하의 이니셔티브로 450 여개의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성 전략 자문사인 TDi Sustainability 와 광물 공급망 플랫폼인 '머티리얼 인사이트 플랫폼'(Material Insights Platform)을

출시하여 원료의 공급 보안에 대한 위험을 식별할 수 있도록 광물 원자재 프로필과 ESG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RLI

RLI(Responsible Labor Initiative, 책임 노동 이니셔티브) 역시 RBA 산하의 이니셔티브로 인권존중·다양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에 취약한 근로자 권리 보장을 중점으로 활동하며 190 여개 이상의 기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3. 국내외 규제 동향

(1) EU 2025 년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 결정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유럽연합(EU)이 현재 환경과 생태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규제를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PFAS 는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로 유럽 화학물질규정인 리치(REACH)에 해당 규제가 반영되면 PFAS 의 제조·사용·수입이 제한됩니다. 닛케이는 이르면 2025 년, EU 가 PFAS 사용을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이 같은 유럽의 움직임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반도체 수출국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2022. 2. 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이 시행되면, 태양광 패널은 기존 재활용 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51 종)과 별도 품목으로 구분하여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을 각각 산정 받게 되어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판매업자는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부과 받습니다. 또한 현재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할 때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의무량 감경을 인정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폐자동차, 폐생활용품 등 모든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에 포함됩니다.

(3)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및 공급망실사법

2026 년 본격 발효될 예정인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우선 적용 대상에 전기 품목이 포함되며 전자제품, 전기장비 등 사업으로 조치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반도체 기업은 EU, 독일 등 공급망 실사 발효 시 우선 영향권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므로 각 이슈에 대한 기업의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4. 해외 기업 사례

(1)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자체 ESG 지수를 통한 ESG 경영 관리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후(Climate), 자원(Resource), 신뢰(Trust), 동등한 기회(Equal), 세대(Generation), 지역(Local) 등 6 개 부문에서 장기적인 약속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

가능하기 위한 11 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해 실천합니다. 또한 16 년 간 자체 ESG 지수인 SSERI(Schneider Sustainability External and Relative Index)를 통해 ESG 경영을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SSERI 는 DJSI World, Euronext Vigeo, Ecovadis, CDP 자료를 사용하며 DJSI 임원의 인센티브에도 반영됩니다.

(2) TSMC 의 환경영향평가

대만의 반도체기업 TSMC 는 다양한 국제표준 및 평가 방식을 활용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에 가장 적극적인 업체 중 하나로, 2018 년부터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더불어 환경적 이익 및 손실(Environmental Profit & Loss) 보고서를 발간하여 자사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수급부터 제조단계까지의 업스트림(Upstream) 공급망을 평가 범위로 설정하고 가치사슬 내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 요소와 그 영향을 평가합니다. 해당 평가를 통해 TSMC 는 온실가스 배출, 수자원 사용,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폐기물 배출의 5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리스크와 환경 영향을 측정합니다.

- ICT 하드웨어(전기, 전자, 반도체) 산업 사회 이슈 - 공급망 인권실사 의무화 동향 -

(신승국, 이광욱, 이근우, 유현상, 양희, 김현지 / 2022. 6. 20)

ICT 하드웨어 산업에서는 공급망에서의 인권침해 및 인권실사 의무화가 주요한 사회 이슈입니다. 기업들은 사업장 및 공급망 전체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공급망의 인권 및 환경 실사의무에 관한 '기업지속가능 실사 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안을 발표하였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문제를 포함한 공급망 정책 연구 개시를 요청하였습니다. 국내 ICT 하드웨어 산업계는 사회 이슈에 관한 글로벌 추세를 정확히 인지하고 대처해야합니다.

1. 배경 및 중요성

최근 세계 각국에서 투자의사 결정에 기업의 비재무적 요인을 반영하는 ESG 투자가 확산되고, 특히 기업의 공급망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실사를 의무화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의 선제 대응 지원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 3. 31. '수출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 시범사업' 착수 회의를 개최하여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 실사 지침'의 주요 내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ESG 공급망 실사가 법제화 되는 경우 국내 반도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많은 수출기업들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2. 각국의 인권 실사 의무화 동향

1) EU,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에 관한 지침안 발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2022. 2. 23. '기업 지속가능 실사 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안(이하 "지침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적용 대상은 유럽 기업 및 매출액이 유럽 역내에서 발생하는 해외 기업이며, 해외 기업의 경우 공장 및 시설 등이 EU 역내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지침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기업들은 자사뿐 아니라 자회사, '가치사슬(value chain)'에 속하는 기업들의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적용대상 기업(Article 2)>

	EU 회원국	해외 기업
그룹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 명 이상 • 전세계 연간 순매출액이 1.5 억 유로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내 연간 순매출액이 1.5 억 유로 이상
그룹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0 명 이상 • 전세계 연간 순매출액이 4 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 등 중·고위험섹터(섬유, 농수산물업, 광업 등)에서의 매출이 최소 50%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내 연간 순매출액이 4 천만 유로 이상 • 고위험섹터에서 전세계 매출 50% 이상 발생

지침안의 구체적인 실사내용은 ① 인권 및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실사의무를 기업정책에 반영(Article 5) ②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실질적·잠재적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 및 평가(Article 6) ③ 실질적·잠재적 부정적인 영향의 예방 및 제거(Article 7 및 8) ④ 피해구제절차의 마련(Article 9) ⑤ 실사정책 및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Article 10) ⑥ 실사의무 이행 내용 공시(Article 11) 등입니다.

2) 미국, 인권 문제 포함 공급망 정책 연구 개시 요청

바이든 행정부는 2021. 2. 24. 관할 부처가 핵심제조업에 대해 인권, 건강, 강제노동, 기후변화 등의 문제를 포함한 공급망 리스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미국 공급망에 관한 행정명령 14017 호(Executive Order 14017, "America's Supply Chains")'를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반도체,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는 고용량 배터리,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는 희토류 등 핵심광물,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제약 분야에 관한 공급망 리스크를 검토하고 권고사항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에서 공급망 리스크로 확인된 부분은 배터리와 핵심광물입니다. 배터리의 경우 지정학적 요인으로써 전세계 코발트 채굴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공급망 국가인 중국과 콩고민주공화국에 집단학살, 강제노동을 포함한 인권 침해 및 부패 문제가 있어 미국과의 교역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광물의 경우, 분쟁광물, 강제노동, 조직범죄 등의 관리 연속성(chain of custody) 리스크에 노출되었다고 파악하였습니다.

3. ICT 업계의 대응

삼성전자의 경우 협력사 평가제도·상생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모든 협력회사에 대해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검증 기준에 따라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협력사의 근로환경을 관리하고 있으며, 협력회사가 RMAP(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 인증을 받은 제련소와 거래하도록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국의 공급망 평가기관인 '노더체인(KnowTheChain)'의 2020 년 보고서에서 삼성전자는 ICT 분야에서 HP 와 함께 69 점으로 총 49 개사 중 공동 2 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2013 년 기술·인권센터를 설립하여 인권 문제를 조정하며, 인권 관련 새로운 위험과 기회를 파악하여 전사적 인권문제의 조화로운 접근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영향평가(HRIA)를 실시하여 영향력이 높은 중요 위험을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지속적인 인권실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 국내 ICT 기업의 대응 방향

EU 의 지침안은 EU 의회 및 이사회와 1 년여간 협의를 거쳐 승인되며, EU 회원국은 지침의 효력 발생 이후 2 년 이내에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시행해야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일부 회원국은 이미 자체적으로 지침안과 유사한 공급망 실사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였기 때문에 유럽으로 수출하는 국내 ICT 기업들은 지침안의 내용과 실사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내 인권 보호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ICT 업계도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공급망 내 인권 이슈와 공급망 실사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ICT 하드웨어(전기, 전자, 반도체)섹터 환경 이슈 -

(신승국, 이광욱, 이근우, 조준오, 김연각, 김현지 / 2022. 6. 13)

- 친환경 기술 개발, 폐기물 관리, 기후변화 대응 동향 -

ICT 하드웨어 산업에서는 제품 생산 공정에서 유발되는 각종 환경 부하가 주요 이슈로 관리됩니다. 국내외 기업은 온난화 지수가 높은 기존 공정 가스를 대체/감축하거나 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다국적 기업 및 국가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한 뒤 공급업체들에 탄소감축과 관련한 기후변화 대응 확대의 구체적 이행을 요구되고 있는 바, 산업계의 공동 이니셔티브 활동 및 대응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배경 및 중요성

산업통산자원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8 년 기준 전기전자 업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9,700 만 톤으로, 전체 산업 부분의 3.7%, 국가 전체 배출량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업종에서 사용하는 F-gas(HFCs, PFCs, SF6 등)는 지구온난화지수가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의 최대 23,900 배에 달할 정도로 강력한 지구온난화 가스로, 전기, 전자 업종의 스코프 1(Scope 1) 탄소배출량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EU 는 지난해 12 월 전기, 전자 업종을 포함한 5 개 산업에 대해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 및 부과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EU 는 2025 년 F-gas 가 포함된 과불화화합물(PFAS)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바, 한국을 비롯한 반도체 수출국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스코프 2 (Scope 2)와 관련, 블룸버그가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낮은 재생에너지 사용률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평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2. 전기, 전자 및 반도체 산업 분야 친환경 기술 개발(공정가스)

가. 친환경 공정가스 개발 (F-gas 사용 대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 전자 및 반도체 산업 분야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로드맵으로 (i) 고효율 배출제어 기술, (ii) 반도체·디스플레이 친환경 공정가스 개발, (iii) 친환경가스 GWP(Global Warming Potential) 인증 및 공정평가 기술을 설정하고,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세부기획 중에 있습니다. 전지, 전자, 반도체 산업 분야의 F-gas 는 지구온난화지수가 이산화탄소의 최대 23,900 배에 달하여 국내총배출량(3.8%)에 비해 온난화기여도(24%)가 높은 편이므로, 친환경공정가스 개발을 통해 공정 온실가스를 혁신적으로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하여, 삼성전자는 도체 주요 공정 중에서 4 대 공정(Etch, Diff, CVD, Metal)에 적용되는 과불화탄소(PFCs)의 대체가스를 개발해 적용하고, 2018 년 부터 일부 제품의 공정에서 PFCs 가스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구분	이산화탄소	HFCs, PFCs, SF6
배출원	에너지사용, 산업 전반	전기, 전자 및 반도체 산업
지구온난화지수(GWP)	1	1,300 ~ 23,900
온난화기여도(%)	55	24
국내총배출량(%)	88.6	3.8

다만, 개발은 제작 공정이 정밀한 전기, 전자 및 반도체 산업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F-gas 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공정적합도 확인, 적용 등에 다소의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공정가스 사용 감축 및 처리

전기, 전자 및 반도체 산업 분야 중 생산공정에서 다량의 F-gas 를 사용하는 반도체업계는 WSC(World Semiconductor Council)를 통해 과불화탄소(PFCs)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WSC 는 분해설비 도입(point of use Abatement), 플라즈마 장치 설치(Remote Plasma Cleans)를 주요 감축 수단으로 제시한바, 삼성전자는 그에 대응하여 옥상 통합처리시설(RCS, Regenerative Catalytic System)을 통해 연간 210 만 톤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국외 전기, 전자 및 반도체 산업 선두주자인 인텔, TSMC 등도 공정가스 사용 감축 및 처리에서 다양한 접근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진바, 국내 전기, 전자 및 반도체 산업의 공정가스 사용 감축 및 처리는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전기, 전자 및 반도체 산업 분야 폐기물 관리와 기후변화대응

가. 폐기물 관리

자원순환 측면의 탄소저감 노력 또한 강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원순환형 제품 개발 및 회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삼성 SDI 는 배터리 핵심소재 자원회수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LG 에너지솔루션, SK 이노베이션은 폐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자원순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기, 전자 및 반도체 산업에서 선두 그룹에 속한 국내 기업들이 후발 주자들과의 경쟁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처리 외에도 자원 순환을 고려한 탄소중립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폐기물 관리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제시가 중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전기, 전자 및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전력다사용 업종으로, 특히 반도체산업의 Wafer 생산 - 제조 - 조립 공정은 시작 후 설비가 연속적으로 가동되고, 진공/고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설비가동에 따른 전력소모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산업의 국내 전력사용량은 전체 국가 전기 사용의 2.8%에 달하는바, 저전력 설비도입과 운전조건 최적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한 스코프 2(Scope 2) 탄소배출량 감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외의 경우, 애플의 주요 공급업체인 TSMC 는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2021 년 25%에서 2030 년까지 40%로 높ی겠다고 발표하면서 반도체 기업으로는 최초로 지난해 RE100 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용은 TSMC 탄소 감축 수단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기술 발전으로 고성능의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양의 전기를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TSMC 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4. 국내외 이니셔티브 동향

작년 3 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학·연·관 협의체인 '전기전자 탄소중립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탄소중립 주요과제와 중장기 연구개발(R&D)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 LG 전자, 삼성전기, LG 이노텍, LS 전선, 인텍전기전자,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등 전자·전기·전지업계 대표 기업 8 개는 '2050 전자·전기·전지 탄소중립' 공동선언문에 서명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계의 노력과 공감대를 주요 수요 기업, 협력사 등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입니다.

대만에서도 TSMC 와 현지 IT 기업 7 곳과 함께 대만기후연맹을 만들어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에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TSMC 와 디스플레이 업체 아우오, 전력변환장치 업체 델타일렉트로닉스, 전자제품 업체 에이수스, 노트북 제조업체 에이서, LED 업체 라이온테크, 위탁생산업체 페가트론, 대만마이크로소프트가 참여사로, 대만기후연맹은 먼저 각 기업 탄소배출 데이터의 정확도와 투명도를 높이고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와 기간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 제조, 스마트 건축물 등 과학기술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저탄소 제조 규모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 2 월 대만정부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았으며 오는 7 월 첫 공식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앞으로 10 여 곳의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가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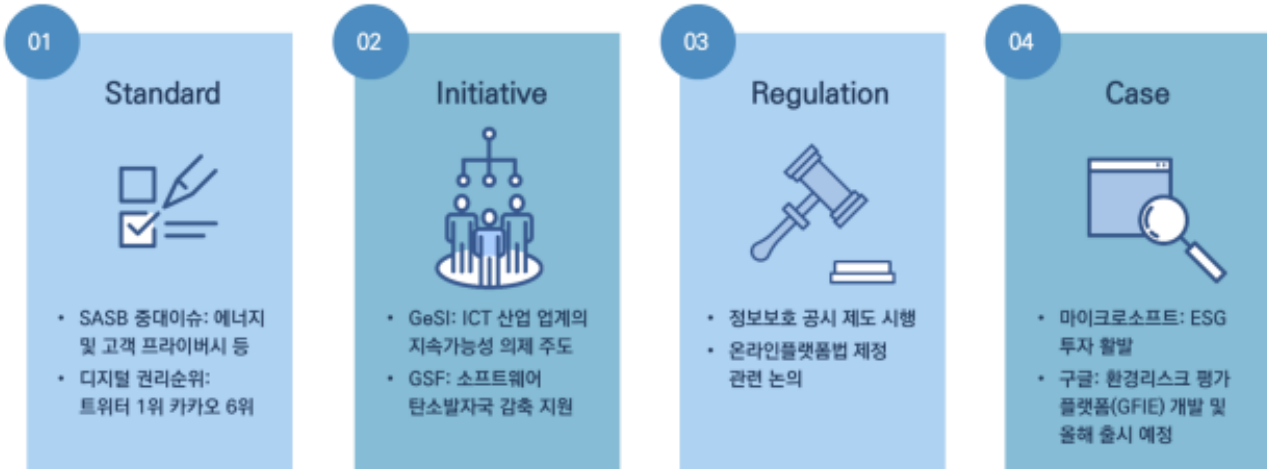
- IT 서비스 및 통신(ICT 서비스) -

(신승국, 이광욱, 이근우, 조준오, 양희, 김현지 / 2022. 5. 2)

- 데이터센터에서의 에너지 사용과 고객정보보호가 주요 이슈로 강화되는 중 -

ICT 서비스 산업에서 주요하게 관리되어야 할 이슈는 탄소 배출 및 에너지 관리, 데이터 보안, 고객 정보보호, 공정거래 등 입니다. 글로벌 선도 기업은 저탄소 경제 실현을 위한 투자와 서비스 개발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공정거래법, 정보보호법, 표시광고법 등 법률이 제개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온라인플랫폼 제정 관련 논의가 재검토될 예정임에 따라 향후 논의 진행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1. ESG 스탠다드

1) SASB 기준 주요 이슈

기술 및 통신업에서 주요하게 관리되어야 할 ESG 이슈는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소비 관리, IoT 서비스 확대 등으로 인한 고객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안, 경쟁 행위, 시스템적 리스크 관리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산업에서는 임직원 참여 및 다양성 & 포용을, 통신업에서는 자원 조달 & 효율성을 중요한 이슈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 디지털 권리 순위

디지털 권리 순위(Ranking Digital Rights, RDR)는 미국 싱크탱크인 뉴아메리카의 독립적 연구 프로그램으로 매년 전 세계 주요 디지털 플랫폼 및 통신기업 26 곳의 디지털 권리 기업책임지수(Ranking Digital Rights Corporate Accountability Index)를 평가합니다. 기업의 표현 및 프라이버시 자유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활동이 평가되며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방향 모색이 이루어집니다. 2022 년 글로벌 빅테크 14 개 기업을 평가한 결과 트위터가 1 위, 국내 기업에서는 카카오가 6 위, 삼성이 11 위에 올랐습니다.

2. ESG 이니셔티브

1) GeSI

GeSI(Global Enabling Sustainability Initiative)는 2001 년에 시작된 글로벌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로 ICT 산업에서 업계의 기업 책임 노력을 알리고 지속 가능성 의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ICT 와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고 저탄소 경제를 실현을 위해 효과적인 산업 활동과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GeSI 는 공급망, 기후 변화, 전자폐기물, 표준화 및 공공 정책을 중점으로 활동하며 엑센츄어, APDC, AT&T, Bell, 화웨이, IBM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 GSF

GSF(Green Software Foundation)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엑센츄어가 GitHub 및 Thoughtworks 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과 함께 소프트웨어의 탄소발자국을 감축하고 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작한 이니셔티브입니다. GSF 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파리기후협약을 준수하고, 나아가 정보통신기술 섹터의 '2030 년까지 탄소배출량의 45%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지속, 개선에 대해 논의하는 그린글로벌서밋(Green Global Summit)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3. 국내 법률 동향

1) 정보보호 공시 제도 시행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과 기업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정보보호 투자, 인력, 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2021 년 12 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 이동통신사 및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매년 6 월말까지 정보보호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10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개정본을 마련하였습니다.

2)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관련

현재 플랫폼 기업은 소비자와의 거래 관계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플랫폼 입점업체와의 거래 관계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주로 적용 받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만을 대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종사자 권리 침해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 법안 발의, 기존 법률 개정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공정거래위원회 주관) 등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5 월 10 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 자율규제 중심의 정책을 제안하고 있지만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둘러싼 입법 작업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4. 해외 기업 사례

1) 마이크로소프트의 ESG 투자

IBD(Investor's Business Daily)는 2021 년 ESG 경영 100 대 우수 기업 1 위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선정하며 최근 3 년간 ESG 성장률을 25%로 분석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탄소 제거 기술 개발 및 투자를 위해 10 억 달러(약 1 조 원) 규모 기후혁신펀드(Climate Innovation Fund) 조성하고,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 구축을 위하여 Closed Loop Partners' 펀드에 3000 만 달러(약 355 억 원)을 투자하는 등 적극적으로 ESG 투자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2) 구글의 환경 리스크 평가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

구글은 패션산업의 환경 리스크를 평가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글로벌 파이버 임팩트 익스플로러(Global Fibre Impact Explorer, GFIE)'를 개발하였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개발되어 대기오염, 생물다양성, 온실가스, 물 등의 환경 영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원자재 및 공급망 데이터를 기반으로 천연 및 합성 재료 등 20 가지 이상 섬유류의 환경 리스크를 평가합니다. 플랫폼은 세계자연기금(WWF), 패션기업 스텔라 매카트니, 섬유거래소와 협력하여 개발되었으며 올해 공식 서비스 출시 예정입니다.

- ICT 섹터 사회 이슈 -

(신승국, 이광욱, 이근우, 유현상, 양희, 김현지 / 2022. 5. 16)

-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동향 -

ICT 서비스 산업에서 사회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디지털 시장 내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규제입니다. 빅테크 기업 등 소수의 대규모 온라인플랫폼들은 코로나 19의 대확산과 함께 디지털 경제로의 소비 이동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데이터의 점유, 검색 알고리즘의 통제, 서비스 결합 등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면서 규제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정책의 방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1. 해외규제동향

입법을 통한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규제 방법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규제 입법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은 경쟁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입법에 중점을 두고 있고, EU는 독점규제 및 콘텐츠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쟁촉진 및 독점규제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일정 행위를 새롭게 남용행위로 규제하거나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 시 기준에 포함하는 방식
콘텐츠관리 및 투명성 의무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에 대하여 일반 온라인플랫폼보다 강화된 '콘텐츠 관리' 및 투명성 의무 등을 부과하는 방식

1) 미국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이후 온라인플랫폼의 독점규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의회법사위원회 독점규제소위원회는 2020년 '디지털시장에서의 경쟁조사'라는 보고서에서 입법을 통해 구조적 분할, 사업분야 제한 등에 의한 이해충돌 감소, 지배적 플랫폼의 차별금지, 상호운영을 통한 혁신 촉진 등을

제언하였습니다.

또한 연방 하원의회는 2021 년 6 월 '대상 플랫폼(covered platform)'의 일정행위를 금지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들을 발의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법안으로 플랫폼서비스 운영과 상품·서비스 제공을 분리하여 플랫폼운영자가 상품·서비스의 판매·제공을 위하여 대상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비즈니스 이용자에게 상품·서비스의 구매·이용을 대상 플랫폼 이용조건으로 제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안인 '**플랫폼 독점 종식법(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과 빅테크의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하거나 데이터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인수합병을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으로 추정해 빅테크 스스로 경쟁제한성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플랫폼 경쟁과 기회법(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이 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선택과 혁신법(American Choice and Innovation Online Act)**'은 자사우대, 데이터 독점,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가격책정 개입 등의 불공정행위를 사후규제하는 법으로, 미국상원에서 2022 년 1 월 초당적 투표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2) EU

EU 의 플랫폼에 대한 규율은 이원적인 체계로, 빅테크와 일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율 강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사전규제인 P2B 규칙만 적용하고, 빅테크에는 디지털 시장법(DMA)을 추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P2B 규칙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P2B(Platform-to-Business)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상세하고 광범위한 계약서 필수사항 적시를 통해 거래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플랫폼 서비스 제한·중지·해지 시 사전통지를 의무화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며, 신속하고 유연한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디지털시장법(DMA)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이 비즈니스이용자와 최종이용자 사이의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하면서 누리는 '견고하고 지속적인 지위'로 인한 디지털분야 내 불공정 관행과 경쟁 제한을 방지하려는 법안입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경우 사이드로딩(sideloading) 허용, 인앱결제 강제 금지, 자사 선호(self-preferencing) 금지,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한편 콘텐츠 관리 및 투명성 의무와 관련하여 EU 는 2020 년 12 월 디지털서비스법(안)(DSA)을 제안하였습니다. DSA 는 중개(단순전달·캐싱·호스팅 등)서비스와 온라인플랫폼(소셜 미디어나 마켓플레이스 등)의 책임·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불법콘텐츠 고지 시 조치 등 콘텐츠 관리와 관련한 온라인플랫폼의 의무를 지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국내규제동향

지난 정부에서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권한을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갈등을 빚었으나 2021 년 11 월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온라인플랫폼 관련 '투 트랙 입법'에 합의하여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방통위는 전해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각각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제정안이 2022 년 1 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하면서 통과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온라인플랫폼 규제의 정책기조가 바뀌면서 온라인플랫폼 관련법의 입법 동향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110 대 국정과제에서 입점업체와 소비자의 불공정피해 방지를 위해 자율규제 방안 및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플랫폼 분야의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논의되었던 온라인플랫폼 관련법의 제정은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향후 전망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독점 현상이 심화되고 경쟁이 감소하였고 이에 최근 각국은 입법을 통하여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적절한 규제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미국마저도 바이든 행정부 이후 정책방향을 선회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된 바 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논의와는 무관하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최소규제원칙에 따라 새로운 정책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ICT 기업들은 전세계적인 온라인플랫폼 규제의 동향을 살피면서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선제적인 자율규제 방안 마련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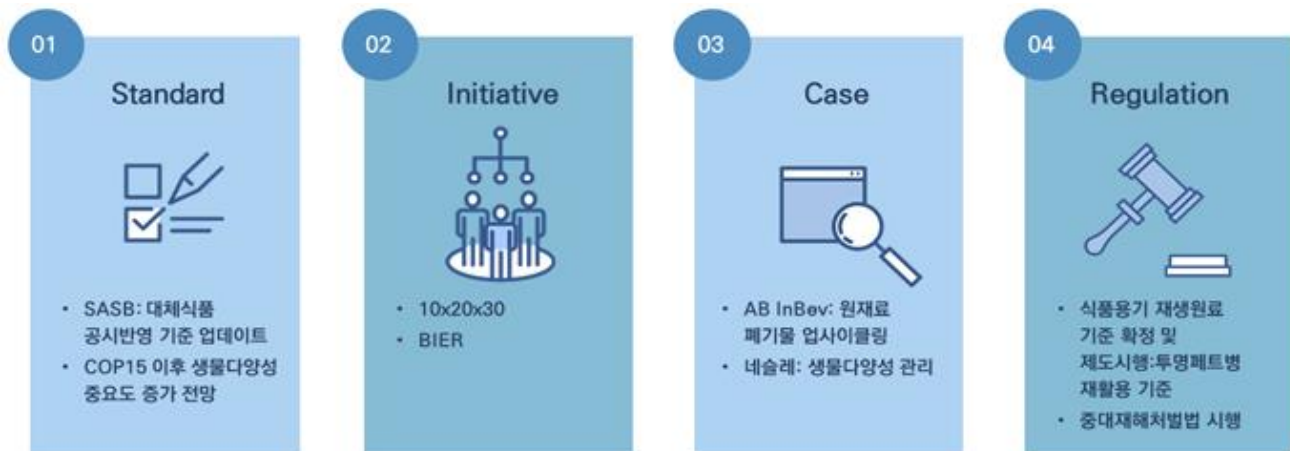
- 식품 및 음료(F&B) -

(신승국, 이광욱, 이근우, 양희, 김현지 / 2022. 4. 4)

- 식음료업의 ESG 관리 이슈는 확대되는 중: 2022 년의 Agenda 는 생물다양성 -

식음료 산업은 필수소비재 산업군에 속하며 제품 라이프 사이클(Lifecycle)에서의 탄소배출, 수자원 관리, 자원순환 등의 환경 이슈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의 안전, 품질, 판매과정에서의 올바른 정보제공 등의 사회 이슈가 주요하게 관리됩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 수자원 고갈 및 생물다양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물과 농업생산물을 주 원재료로 활용하는 식품, 음료업의 관련 이슈에 대한 관리 및 공시 압박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식음료 산업 ESG Standard 동향

1) 주요 이슈

ESG 공시에 주로 참고되는 지속가능성 회계표준위원회(SASB) 기준은 소비자에 대한 제품 품질 및 안전에 대한 영향, 제품 생산 단계의 온실가스, 에너지, 수자원 영향 및 제품 전과정 관리 등의 항목을 식음료업의 ESG 주요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2) SASB, 대체식품에 대한 공시 기준 반영

지속가능성 회계표준위원회(SASB)는 식품 제조 및 유통 기업들이 대체육, 대체유 등과 같은 대체 식품에 대한 경영전략과 지속가능성 및 기업 가치를 공시하도록 새로운 표준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공시 기준 업데이트를 통해 식품 소매업체들은 앞으로 대체 식품을 개발하거나 자사 제품에 대한 여러 사회 및 환경 이슈를 공시하고 환경 영향력이 적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 예정

제 15 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UNCBD COP15)의 2 부가 중국 쿤밍에서 2022 년 4 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2 부 회의에서는 <포스트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협의와 도출이 진행될 것으로,

프레임워크 초안은 "농업, 양식업 및 임업 분야의 전 영역이 지속 가능하게 관리됨"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COP15 프레임워크 초안이 2022 년에 채택되고 국가 규정으로 비준될 경우 식품 산업계는 생물다양성 관리에 대한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식음료 산업 ESG 이니셔티브

1) 10 x 20 x 30

'10x20x30 이니셔티브는 10 개 이상의 전 세계 최대 식품 유통 업체가 각각 최소 20 개 이상의 공급업체와 함께 참여하여, 2030 년까지 식품 손실 및 음식물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는 이니셔티브입니다. 참여 기업에는 월마트, 테스코 등의 유통업체와 200 여개 이상의 공급업체가 포함됩니다.

2) 음료산업 환경 라운드테이블

음료산업 환경 라운드테이블(Beverage Industry Environmental Roundtable, BIER)은 2006 년 설립된 음료업계의 이니셔티브입니다. 해당 이니셔티브는 물,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 자원순환, 지속가능한 농업 등과 연계된 환경 차원의 행동을 추구합니다. 현재 AB 인베브, 미국음료협회(American Beverage Association), 바카디, 빔 산토리, 코카콜라, 하이네켄 등의 12 개의 글로벌 음료업계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 해외 기업 사례

1) AB 인베브의 원재료 폐기물 업사이클링

맥주 및 기타 음료 제조업체인 AB 인베브는 맥주를 만들고 남은 보리 등의 폐곡물 등을 업사이클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B 인베브는 보리를 재료로 단백질과 섬유소 등 지속가능한 재료로 변환해 다양한 식품 및 음료를 만드는 에버그레인(EverGrain)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습니다.

2) 네슬레의 생물다양성 관리

식품업체 네슬레의 커피 브랜드 네스프레소는 국제자연보존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자사의 생물 다양성 관리 성과에 대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슬레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자연환경 보존'의 두가지 분야를 핵심과제로 삼고 이에 대한 5 년 · 10 년 목표를 수립하는 등 생물다양성을 경영에 통합하여 핵심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4. 식음료 산업 관련 국내 법규 동향

1) 투명 페트병 재활용 사업자 준수 기준 확정 및 제도 시행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식음료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용기로 만드는 과정에서 선별사업자와 재활용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 품질기준 등을 담은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을 확정하여 2022 년 2 월 24 일 고시하고, 이날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그간 국내에서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경우,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정제해서 중합한 것이거나 신규 원재료로부터 발생한 자투리 등 공정 부산물로 그 범위가 제한되었으나 이번 제도 개편 시행으로 해외처럼 물리적인 재활용도 가능해졌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제조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존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민사적으로 규제되었으나,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식품 원료·제조 업계는 중대시민재해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식품업체가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식품원료 또는 완제품의 제조·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최근 공포 법안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1.] [환경부령 제 977 호, 2022. 2. 25., 일부개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 1.] [총리령 제 1724 호, 2021. 8. 24., 일부개정]

- 식품 및 음료(F&B) 산업 사회 이슈 -

(신승국, 이광욱, 이근우, 조준오, 양희, 김현지 / 2022. 4. 18)

- 공급망 관리 및 소비자 건강 이슈 동향과 전망 -

식품 및 음료업에서는 공급망에서의 인권침해, 소비자 건강이 주요한 사회 이슈로 관리됩니다. 기업들은 사업장 및 공급망 전체에서 인권보호 및 소비자 건강 관련 성분 규제 대응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공급망 실사 의무에 관한 '기업 지속가능 실사 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안을 발표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소비자 건강을 위해 식품에서 트랜스지방을 제거하기 위한 가이드를 발표하였는바, 국내 식음료 산업계는 사회 이슈에 관한 글로벌 추세를 정확히 인지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1. 공급망에서의 인권 침해

1) 배경 및 중요성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적으로 1 억 6000 만명의 아동이 노동에 노출되어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급망까지 아동노동을 해결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유엔은 2025 년 아동노동 철폐, 2030 년 강제노동,

인신매매, 현대노예제 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1 년 주요 7 개국(G7) 정상회담 결과물인 공동 성명의 내용 중에는 'G7 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취약계층과 소수 민족의 강제 노동을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2. 2. 23. 기업에 '공급망 전체'의 환경·인권 등 현황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를 의무화하는 '기업 지속가능 실사 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내의 경우 법무부가 지난 12 월 23 일 '유엔(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OECD 기업책임경영 매뉴얼' 등의 내용을 토대로 기업과 인권에 대한 안내를 담은 '**2021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를 발간했습니다.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하여 마련한 법률인 '인권정책기본법'의 주요내용 중에 '인권경영'의 확산을 위해 기업의 인권준중책임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10 대 인권과제 중 하나로 '기업의 인권경영 정착'을 선정하였습니다

2) 관련 국내외 기업 동향

글로벌 식음료 기업인 네슬레(Nestlé)는 농가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급망 아동노동 문제를 근절하는 등 코코아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혁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유니레버는 비즈니스 및 인권에 관한 12 가지 원칙 중 공급망 내 '강제 노동'을 특히 주요 이슈로 다루었습니다. 국내의 경우 CJ 제일제당은 유엔 아동노동 근절 노력에 동참하여 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본격화하여 해외 사업장과 공급망에서 발생 가능한 아동노동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수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ESG 공급망 관리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흐름에 맞추어 국내 기업들은 공급망 관리에 관한 전략 수립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소비자 건강

1) 소비자 건강을 고려한 성분 규제 강화

세계보건기구(WHO)는 2018 년 5 월, 2023 년까지 식품에서 트랜스지방을 제거하기 위한 가이드를 발표하였으며 독일의 경우 유럽연합의 트랜스지방 규제를 따르는 동시에 식품 내 나트륨 함량 역시 100g 당 2g 으로 제한하는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또한 2021 년 10 월, 나트륨 감축을 위한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2) 소비자 건강 관련 동향

세계 최대 채권 운용 회사인 PIMCO 를 비롯해 UBS 자산운용, 노무라의 펀드 계열사가 포함된 53 곳의 투자자 그룹은 2021 년 '도쿄 영양성장정상회의(Nutrition for Growth Summit)' 성명서를 통해 "저품질 식단은 사망과 질병의 주요 원인이며 개인과 사회적, 경제적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며 정책 입안자들에게 적절한 규제를 통해 건강하게 포장된 식품을 지원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네덜란드 자산운용사 로케코 등 7 개 기관투자자들이 연합한 행동주의 캠페인그룹 셰어액션(ShareAction)은 영국 최대 슈퍼마켓인 테스코에 대해 '소비자 건강'이슈로 주주제안을 하였습니다.

3.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및 전망

국내의 경우 '인권정책기본법'에서 기업활동을 통해 국내외에서 제 3 자의 인권침해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선언적인 규정만 두고 있으나 전세계적으로는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EU 의 '기업 지속가능 실사 지침' 등 인권경영에 관련한 법제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건강과 관련하여 각국의 성분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소비자 건강을 주요 이슈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내 식음료 업계도 인권경영의 법제화 추이 및 소비자 건강 관련 규제의 강화에 발맞추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럽으로 수출하거나 유럽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은 '기업 지속가능 실사 지침'의 취지 및 공급망 실사 의무 등을 중심으로 인권 및 소비자 건강 관련 국내외 요구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식품 및 음료(F&B) 산업 환경 이슈 -

(신승국, 이근우, 조준오, 김연각, 안나래, 양희 / 2022. 4. 11)

- 식품 포장재 탄소중립 이슈 동향과 전망 -

식품 및 음료업에서는 식품 포장재 폐기물 저감과 자원순환, 제품 생산 및 유통 전과정(Life Cycle)에서의 탄소중립이 주요한 환경 이슈로 관리됩니다. 기업은 이슈들의 대응을 위하여 오염 감축 의지를 선언하고 친환경 제품 개발과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등의 노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환경총회(UNEA)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 마련이 가시화되고 있어 국내 식품 산업계의 적극적인 환경이슈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자원순환 관리를 위한 식품포장재

1) 배경 및 중요성

그린피스의 2021 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78%는 식품 포장재에서 발생한 것이라 합니다. 실제 환경부는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포장제품의 재포장을 금지하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마련, 2020. 7.부터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포장재질, 포장방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종류		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15% 이하	2 차 이내
	음료	10% 이하	
	주류	10% 이하	
	제과류	20% 이하(데커레이션 케이크는 35% 이하)	
	건강기능식품	15% 이하	

*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발체

자원순환 관리를 위한 포장재에 대한 검토는 포장된 식품과 함께 라이프사이클에 걸쳐 환경적 영향 뿐 아니라 고객 안전, 식품 폐기물 감소 등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 탄소중립의 3Rs (한국산업식품공학회)

- Reduce: 투입자원, 크기, 포장재 줄이기
- Replace: 친환경 재료, 고효율 시스템 대체
- Recycle: 재활용 가능 설계, 재활용 시스템 구축

2) 식품 포장재 관련 국내외 기업 동향

세계적 식음료기업 펩시코(PepsiCo)와 코카콜라(Coca-Cola), P&G(Proctor & Gamble) 및 유니레버(Unilever), 그리고 국내업체로는 CJ 제일제당, 매일유업, (주)클리오는 2022. 3. 개최된 제 5 차 유엔환경총회(UNEA)에 앞서 플라스틱 오염 퇴치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글로벌기업들은 재활용 가능한 종이 세제병(유니레버), 양주 종이병(디아지오) 등을 선보이고, 국내 기업 CJ 제일제당, 롯데제과, 풀무원, 동원그룹은 친환경 포장재 개발 및 제품을 출시중에 있습니다. 유럽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지침에 따라 음료포장재 생산업체들이 2030년까지 플라스틱 소비를 대폭 감축하고 100% 재활용 및 재생가능한 재료로 포장재를 생산할 예정인바, 변화하는 정책에 적응하기 위한 국내 기업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탄소중립

1) 배경 및 중요성

온실가스의 3분의 1 가량은 전세계 농업과 식품 생산, 유통, 소비 등 식품업계에서 배출되므로, 식품의 생산뿐 아니라 유통, 소판매 등 제품에 대한 전주기(Life Cycle)를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평가 및 감축정책 마련이 적극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 자산규모가 47 조달러(한화 5 경 2499 조원)에 달하는 500 명의 투자자로 구성돼 있는 투자자그룹 클라이밋액션 100+는 식음료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부분이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므로, 공급망까지 포함하는 온실가스 간접배출량인 Scope3 를 고려한 장기적 탄소중립 전략을 마련해야 함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2. 3. 25.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식품 기업 동향

현재 맥도날드, 마스 등 글로벌 식품기업들은 과학기반기후목표 이니셔티브(SBTi), 클라이밋액션 100+ 등 탄소중립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기업 중 풀무원은 생산제품 중 국산콩두부 10 종에 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탄소발자국 인증을 받음으로써 탄소중립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3.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및 전망

식품산업은 중소기업(에너지사용량 기준 2 만 toe 이하)의 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아 다양한 에너지 사용 구간별 지원 대책이 필요하고, 따라서 식품산업계 탄소발생 저감 전략은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 지원과 유익책 및 일관된 정책 추진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유엔환경총회(UNEA)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 마련이 가시화된 이상 구체화된 탄소중립 기준 준수를 위한 국내 식품산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식품산업의 탄소배출량이 물류, 협력사 등 외부배출(Scope 3)에서 다수 발생하고 국내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등 관련 규정은 Scope 3 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식품산업 및 포장재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논의의 진행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

법무법인(유) 지평

임성택, 민창욱

JIPYONG 법무법인 지평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

"ESG 관련 해외 주요 뉴스를
최신순으로 엮은 리포트입니다."

- 2022 년 10 월 4 주 -

기관투자자들이 ESG 투자에 반발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하고 나섰다는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기후 관련 금융정보공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관련 새로운 소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 자문역을 추천할 때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와 관련한 소식도 전해 드립니다.

01. 기관 투자자들, ESG 를 정치 이슈로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에 저항

미국 기관 투자자들과 행동주의 자산 운용사들은 의회와 의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환경(E), 사회(S) 및 거버넌스(G) 관련 투자를 정치적 의제에 견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 미국 중간 선거 시즌이 다가오며 투자자들은 ESG 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있음. 현재 텍사스주, 오클라호마주 및 루이지애나주에서 ESG 를 억제하기 위한 법안과 규제가 통과되고 있으며, 일부 법안의 경우 특정 금융 기관이 기후변화나 인적 자본 관리 등 ESG 요소를 포함한 투자 정책을 철회하도록 하고 있음.
- ESG 를 비판하는 측은 ESG 에 대한 고려가 정치적이며 중대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현재까지 최소 17 개 주에서 ESG 에 대해 고려하는 투자 정책을 금지하는 규칙을 제안했음. 또한 미국 연방 차원에서도 공화당은 다가오는 중간 선거에서 상원과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게 될 경우 이와 유사한 ESG 제한 조치를 내놓고자 하고 있음.
- 주요 금융 기관들은 최소 일부 ESG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대세를 차지하고 있고 투자에 대한 책임감 있는 접근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또한 위 금융 기관들은 ESG 이슈가 이들이 투자하는 다양한 산업의 수천 개 회사에게 중대한 이슈라고 말했음.
- 자산운용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2026 년까지 ESG 관련 운용 자산이 33 조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는 2021 년 18 조 4,000 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크게 성장한 수치임.

02. 미국 재무부가 기후 리스크 모델링에 대한 보험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함

미국 재무부 산하 연방 보험국(Federal Insurance Office)은 금융 시스템의 기후 관련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 인수 데이터(underwriting data)를 수집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 미국 재무부 재닛 옐런(Janet L. Yllen) 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연방 보험국이 오늘 발표한 조치는 증가하는 기후변화 관련 비용과 관련하여 미국인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조치입니다.”라고 밝혔음.
- 연방 보험국이 수집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기후변화 영향에 가장 취약한 10 개 주의 시장 점유율의 80%를 차지하는 모든 보험사와 작년 자산보험 및 상해보험 인수 계약을 1 억 달러 이상 체결한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함.
- 연방 보험국의 데이터 수집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 년 5 월에 발표한 기후변화 관련 금융 리스크에 대한 행정 명령과 관련이 있음.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보험국에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와 관련하여 보험 업계의 취약성을 확인할 것을 직접 지시했음.

03. 기업들은 기후 관련 금융정보공시 태스크포스의 정보 공시 방안을 반영한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시를 지지하나, 모든 항목을 지지하는 것은 아님

기후 관련 금융정보공시 태스크포스(TCFD)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금융 리스크 정보 공시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바, 기업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TCFD 는 1,400 개 이상의 기업들이 공개한 정보를 검토한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해당 보고서에서 TCFD 는 2021 년 회계연도 공시에서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기후변화 리스크 관련 권고 공시 항목 중 중 4.2 개에 대해 공시하였으며, 이는 2017 년 회계연도 기준 1.4 개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숫자라고 밝혔음.
- TCFD 는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가 만든 자발적 공시 관련 제도로, 전 세계적으로 약 4,000 개 기업이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와 지표에 대한 기후 리스크 정보를 공시하기 위해 TCFD 를 이용하고 있음. TCFD 는 투자자, 대출기관, 보험 언더라이터 등의 주체들이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기업들의 중대한 리스크에 대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함.
- TCFD 의 권고 공시 항목 11 개 중, TCFD 를 반영한 정보를 공개한 기업의 비율은 2017 년에서 2021 년 사이에 26% 증가했음. 10 개 기업 중 6 개 기업이 최근 보고서에서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에 대해 공시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2017 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숫자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TCFD 는 좀 더 진전을 이를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조사 대상 기업 중 80%가 11 개 권고 공시 항목 중 최소 1 개를 공시했다고 밝혔으나, 11 개 항목 모두 공시한 기업은 4%에 그쳤음. 다만, 약 43%의 기업들이 최소 5 개 이상의 기후변화 관련 권고 공시 항목을 공시했다고 밝혔음.
- 공시 수준은 지역에 따라 달랐으나, 세계 많은 지역에서 2019 년 이래 기후 관련 리스크에 대한 공시가 크게 증가했음. 2021 년 유럽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11 개의 권고 공시 항목 중 2/3 에 달하는 항목에 대해 공시했음. 반면 북미 지역에서는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TCFD 권고 공시 항목 중 29% 정도를 공시했음.

04.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투자 자문역이 고객에게 다른 자문역을 추천할 때 다양성이 고려 요소가 된다고 밝혔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자 자문역이 이들의 신인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 고객에게 다른 투자 자문역을

추천할 때 다양성, 평등 및 포용을 고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투자 자문역들은 신인의무를 가지고 있음. 신인의무란, 이들이 자문을 제공할 때 자신의 고객의 최선의 이익이 된다는 "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무를 말함.
- SEC 는 "그에 따라 투자 자문역은 고객을 위한 다른 투자 자문역을 추천하거나 선임할 때, 그러한 추천이나 선임을 하게 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이는 다양성, 평등, 포용을 포함합니다. 단,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고객의 목표, 관계의 범위, 그리고 해당 투자 자문역이 공개한 정보 등과 부합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음.
- SEC 는 "또한, 투자 자문역의 신인의무는 (투자 자문역이 다른 투자 자문역을 추천할 때) 자산 운용 규모가 최소 규모이거나, 경력이 별로 없는 등의 특징을 가진 투자 자문역을 추천하거나 선임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덧붙였음.
- SEC 의 위와 같은 게시물은 SEC 의 다양성과 포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권고를 하는 기관인 SEC 의 자산관리자문위원회(Asset Management Advisory Committee)의 2021 년 보고서에 대한 응답의 일환으로 발표되었음.

05.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목표들이 약속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

탄소 배출 넷제로를 위한 약속을 내놓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기업들이 이러한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진전을 이루는 속도는 그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 공화당 소속 패트릭 투미 의원은 기업들에 서신을 통해 ESG 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비(非)재산적 성격의 방법론에 대한 문서 사본을 요청했음. 투미 의원은 또한 잠재적인 컴플라이언스 관련 부담, 제 3 자 데이터의 신뢰성, ESG 점수에 있어 정치적 이슈의 역할, 그리고 잠재적 이해 충돌 관련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음.
- 클라이밋 액션 100+이 전 세계 최대 기업 중 159 대 기업을 조사한 후 발표한 바에 따르면 4 개 기업 중 3 개 기업이 2050 년까지 탄소 배출 넷제로를 위한 목표를 세웠음. 위 기업 중 90% 이상이 일정 수준의 기후변화 감시 기구를 설치했으며, 자발적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공시 원칙을 위한 TCFD 의 권고를 따르고 있음.
 - 그러나, 기업들은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유의미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뒤쳐지고 있다고 클라이밋 액션 100+이 지적했음.
- 위 조사 기업 중 절반 가량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탈탄소 계획을 세웠으며, 그와 유사한 비율의 기업들이 Scope 3 배출(공급사 탄소 배출)을 포함한 모든 중대한 배출을 줄이겠다는 넷제로 계획을 세웠음.
- 한편 Scope 3 배출을 포함한 기업의 탄소 배출원과 관련한 이들의 전략의 주요 요소들을 계량화한 기업은 19%에 불과했음.
- 또한 기업들은 아직 이들의 넷제로 약속을 완전하게 반영한 자본 지출 계획, 로비 및 정책 관여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음. 20%, 그 초과분은 22%의 세율을 적용하여일반기업보다 세부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 2022 년 10 월 2 주 -

미국 은행 규제당국 사이에서 기후변화 관련 금융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 시나리오 분석 방법이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을 다룹니다.

또한 중대성 평가, 미국 레스토랑 체인 기업 더 칠리스(The Chili's)에서의 동물권 관련 주주투표, 그리고 전(前) 미국 재무부 장관 사라 블룸 래스킨(Sarah Bloom Raskin)이 공화당 우위 주에서 ESG 를 막기 위한 법을 제정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소식도 들려 드립니다.

01. 미국 은행 규제당국이 기후 시나리오에 주목하여 공화당의 반발을 사고 있음

미국 연방 규제당국은 기후 리스크에 대한 금융 기관의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나리오 분석을 새로운 도구로서 이용하고자 하고 있으며, 패트릭 투미(Patrick J. Toomey) 공화당 상원의원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 미국 연방 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와 연방준비위원회(Federal Reserve, 이하 '연준')는 시나리오 분석을 지지하고 나섰음. 시나리오 분석이란, 기업과 시장 전반에 걸쳐 가설적 상황에서 경제적 결과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함.
- FDIC 의 마틴 그루엔버그(Martin J. Gruenberg) 의장대행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연설 도중 FDIC 가 위 시나리오 분석을 지지한다고 밝혔음.
- 그루엔버그 의장대행은 "기후변화 관련 시나리오 분석은 기관들이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지식과 역량을 쌓기 위해 설계되고 이용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음.
- 한편 연준은 내년 미국 6 대 은행이 기후 분석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며, 미국 금융기관이 기후 리스크 해결에 있어 기념비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했음.
-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패트릭 투미 상원의원은 연준의 위 시범 프로그램에 대해 은행이 에너지 기업과 기타 탄소집약적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양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비판했음. 투미 상원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위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목적은 새로운 규제 요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음.
- 시나리오 분석의 채택은 미국 금융안정감독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FSOC)가 보고서를 통해 권고한 사항이기도 함. FSOC 는 기후 리스크를 "미국 금융 안정에 대한 새로운 위협"으로 규정하고 위원회 소속 위원들인 각 은행 규제 당국들이 위 권고를 받아들일 것을 권장했음.

02. 중대성 평가는 기업들이 ESG 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와줌

미국 로펌인 레이텀앤왓킨스(Latham & Watkins LLP)는 기업의 중대성 리스크에 대한 자발적 평가는 기업이 ESG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레이텀앤왓킨스는 주주와 규제당국이 ESG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이고, "그린워싱(greenwashing)"이나 허위진술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지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중대성 평가는 필수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음.
- 중대성 평가를 자주 시행한다면, 기업 경영진들은 어떤 이슈에 집중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며, 투자자, 규제당국, NGO 등에 기업이 리스크와 기회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음.
- 기업들은 이해관계자의 중요성과 사업의 중요성을 비교하여 각종 이슈에 대한 "중대성 매트릭스(materiality matrix)"에 대한 자발적 평가를 시행하거나 보고서 형식으로 로드맵을 공개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중대성 매트릭스를 이용한다면 탄소 배출이 기업보다 이해관계자들이 더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는 주제이지만 기업윤리는 외부 이해관계자들보다 기업 임원들에게 좀 더 중대성을 가지는 ESG 이슈라는 점을 알아낼 수 있음.
- 레이텀앤왓킨스는 “최우선순위에 집중함으로써, 기업이 효율적인 ESG 전략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라면서, “ESG 전략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ESG 관련 공시를 행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중대성 평가는 ESG 접근법 중 최우선순위를 정의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음.

03. 미국 상공회의소, 기후 관련 공시가 "중대한" 항목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도록 제한하는 법안 지지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가 상원의 기후 공시 제한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가 기업의 공시 요건을 온실가스 배출 등 중대하지 않은 항목으로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 미국 상공회의소는 SEC 가 오직 중대한 정보에 대해서만 기업 공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2022 년 의무 중대성 요건 법(Mandatory Materiality Requirement Act of 2022)(S 5005)”을 지지한다고 밝혔음.
- 미국 상공회의소의 닐 브래들리(Neil Bradley)는 “지난 수십년 간 미국에서 중대성이라는 기준은 투자자들에게 유익한 기준이자 기업 공시의 기반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음.
- SEC 는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 관련 정보를 의무 공시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각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도 공시할 것을 요구하는 기후 리스크 공시 규칙안을 제안했는데, 미국 상공회의소는 지난 3 월 위 규칙안에 반대하며 위와 같은 공시가 중대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음.
- 위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마이크 라운즈(Mike Rounds) 상원의원은 “미국 기업이 기후변화 정책을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정부의 혹독한 처우로 인해 기업과 경제의 성장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SEC 가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하며, SEC 가 그 대신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유지하며 자본 형성을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했음.
- 이와 달리, 100 명 이상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SEC 의 기후 공시 규칙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음.

04.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레스토랑 제안 기업 칠리스에 동물권 관련 주주제안을 주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결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미국 레스토랑 체인 칠리스(the Chili's)와 리틀 이탈리아(Little Italy)를 소유하고 있는 브링커 인터내셔널(Brinker International)에 제출된 동물권 관련 주주제안을 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주주제안은 브링커가 공급사들이 동물권 행동지침을 위반하지 않는지에 관하여 분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미국 휴메인 소사이어티(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가 제출한 위 주주제안은 브링커에 동물권 행동지침 위반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안임.
- 주주제안이 제출되었을 때, 기업이 요청하면 SEC 는 특정 제안을 정기주총 안건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림. 주주총회 투표는 대리권 행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은 정기주총에서 이러한 대리투표 방식을 통해 주주투표를 진행함.

- 브링커는 SEC 에 위 주주제안 안건이 통상 사업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음. SEC 에 따르면 어느 주주제안이 기업의 통상 사업에 관한 것일 경우, 주총 투표 안건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임. 그러나 SEC 는 이러한 브링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위 주주제안은 주총에서 투표에 부쳐지게 되었음.

05. 데이터에 따르면 2022 년 미국 주총 시즌 ESG 관련 주주제안이 늘어났음

2022 년 미국 주주총회 시즌에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ESG 주주제안이 다른 어느 때보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 데이터는 미국 비영리 싱크탱크인 컨퍼런스 보드(The Conference Board)와 ESG 데이터 분석 기업인 ESGAUGE 의 발표에 따른 것입니다:

- 특히 러셀 3000 대 기업에서 기후 변화 관련 공시와 인종 평등 관련 감사와 관련된 주주제안이 기록적인 숫자의 지지를 얻어 성공적으로 통과되었음.
- 1 월에서 7 월 사이 기업에 제출된 기후변화 관련 주주제안은 101 건으로, 작년 동 기간의 제출 건수(60 건)와 비교해 늘어났음. 또한 이는 2020 년(50 건), 2019 년(70 건)에 비해서도 증가한 수치임.
- 위 101 건의 주주제안 중, 11 건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과반수 주주의 찬성표를 얻었음. 2021 년 정기 주총에서 통과된 기후변화 관련 주주제안은 8 건, 2020 년의 경우 3 건, 그리고 2019 년의 경우에는 0 건이었음.
- 한편 ESG 투자자들이 제출한 인종 평등과 시민권 관련 감사 요구 주주제안은 2022 년 43 건을 기록했는데, 이 중 31 건은 주총에서 투표에 부쳐졌음.
- 올해 인종평등 관련 주주제안 중 8 건이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되었음. 2021 년의 경우 이러한 주주제안 중 주총에서 통과된 주주제안은 없었음.

06. 기업 이사회에서 정보 보안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으나, 여전히 부족한 수준임

기업들이 정보 보안 관련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재직 중인 보안 담당 임원 중 82%가 위 문제와 관련하여 이사회와 정기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 정보 보안 담당 임원의 90%가 기업들이 언제나 사이버 리스크의 중대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응답했음.
- 응답자 중 87%가 기업 보안 관련 사건의 원인을 인식하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보안 관련 에러 중 34%가 악의 없는 사용자에게 의한 에러라고 함.
-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 보안 관련 임원들은 예산 중 큰 부분을 정보 보안에 배정할 계획이 있다고 대답했음. 해당 예산은 평균적으로 연간 6,500 만 달러임.

기타뉴스

- 전(前) 미국 재무부 부장관 사라 블룸 래스킨(Sarah Bloom Raskin)은 텍사스, 웨스트 버지니아, 오클라호마 등 일부 미국 주에서 금융 기업들이 석유 및 가스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보이콧”한다는 이유로 금융 기업들을 처벌하는 주 법을 제정하며, 이로 인해 금융 기업이 에너지 기업에 리스크가 높은 대출을 시행하게 되어, 위 법이 글로벌 금융 안정성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음.

- 2022 년 10 월 1 주 -

기업 인력의 다양성을 증대하고 고소득 직종에 대한 접근성을 좀 더 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미국 공화당은 총기 판매를 분류하는 신규 판매자 코드 도입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각 주 규제당국은 주총 시즌에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을 만들었습니다.

01. 미국 하원, 중소기업 채용 절차의 다양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임

미국 중소기업 다양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 하원과 기업 임원 간의 회의에서, 정부, 의회, 지역 이사회가 중소기업이 다양한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견습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 각 기업 임원들은 경제 격차와 공정한 성장에 대한 미국 하원 특별위원회(House Select Committee on Economic Disparity and Fairness in Growth)에 참석하여 기업들이 직원들을 고용하고 유지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에 대해 논했음. 위 공청회는 미국 내 기업들이 고용에서 평등을 증대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열렸음.
- 패널들은 제조업, 청정에너지, 인프라 등과 같은 분야에서 미국 내 노동력을 구축하고, 근로자가 학사 학위 없이도 기업 내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논하기 위해 이번 주 목요일 2 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음
- 견습 프로그램과 기타 기술 교육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음. 기업 임원들은 인재 풀을 확장하는 방안이 기업뿐만 아니라, 직원과 잠재적 고용 대상자에 투자할 자원이 적은 미국 내 소규모 사업장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 패널 의장인 짐 하임스(Jim Himes) 하원의원은 위원회가 직원 기술 향상을 위한 민간 부문 제도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하임스 하원의원은 위원회가 또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이미 성공적이었던 전문성 개발 모델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임.
-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범죄 이력 또는 교육 이력에 대한 배경 조사를 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사람을 채용하는 데 초점을 맞춘 채용 정책인 "공개 채용" 방식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것으로 보임.
- 기업이 ESG 이슈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근로자와 투자자의 관심이 증대되며, 최근 몇 년간 기업의 다양성, 평등, 포용 프로그램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02. 미국 공화당, 총기 판매 분류를 위해 신규 도입된 판매자 코드에 반발

미국에서 신규 도입된 판매자 코드를 통해 총기 판매를 분류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를 표시하도록 하는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해당 정책이 민주당이 장악한 연방 기관들이 사회적 의제를 촉진하겠다며 불필요한 일을 키우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 공화당 의원들은 은행들에 판매자 코드를 도입하라는 소위 "정치적 압력"에 대해 저항할 것을 요구했음.
- 상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 알렉스 무니(Alex X. Mooney)의원은 새로 도입된 판매자 코드가 총기 등록제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으로 보여 두렵다고 발언했음.

- 지난 달 국제 표준화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신용카드 회사가 고객 거래를 분류하는 데 사용하는 4 자리 코드와 관련하여 스위스에 본사를 둔 아말가메이티드 은행(Amalgamated Bank)의 신규 판매자 코드 신청을 승인했음. 아말가메이티드 은행은 자발적이고 합의에 기반한, 그리고 시장 관련성이 높은 국제 표준을 만들었다고 밝혔음. 신규 코드가 승인되기 전, 미국에서는 여러 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일리노이주 하이랜드 파크에서 열린 7 월 4 일 퍼레이드에서 7 명이 사망한 사건이며, 다른 하나는 텍사스주에 있는 유밸디의 한 학교에서 19 명의 아이들과 2 명의 교사가 살해된 총기 난사 사건임.
- 민주당 의원들은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자 등 거대 금융 기관에 신규 판매자 코드를 승인할 것을 요구했음. 이들은 미국이 총기 위기에 직면한 지금, 신용카드사들과 기타 금융 기관이 총기와 화기류에 대한 신규 코드를 통해 의심스러운 활동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음.
- 아말가메이티드 은행은 성명서를 통해 위 신규 코드를 통해 의심스러운 활동과 불법적인 총기 판매에 대해 보고할 의무를 준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음.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티아 제임스(Letitia James) 등 다른 사람들은 위 코드 도입을 "총기 폭력에 대처하고 비극적인 사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거대한 승리"라고 칭했음.
- 미국 금융 서비스 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아말가메이티드 은행에 서신을 보내 국제 표준화 기구가 "극좌적인 정치적 압력에 굴복했다."고 말했음.

03. 국제 비영리 단체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는 환경 정보 공개에 플라스틱을 포함함

환경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글로벌 정보 공개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이하 CDP)는 주요 기업에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오염에 대한 추가 데이터를 요청하여 글로벌 정보 공개 시스템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 CDP 는 2023 년부터 주요 기업들에게 위 요청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음. 올해 초 CDP 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10 개 중 9 개 기업이 플라스틱은 환경 관련 이슈라고 답했으나, 응답자 중 1/3 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거나 그로 인한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고 응답했음.
- 위 보고서에 따르면 위 조사에서 응답한 자본시장과 공급망 구성원 중 81%는 CDP 가 플라스틱에 관하여 요청한 정보가 재무적 결정 또는 조달 관련 결정을 내리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응답했음.
- 플라스틱 오염은 소비재, 화석 연료, 소매업, 식품 및 음료 산업과 같은 특정한 분야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 ESG 관련 주주제안 중 플라스틱 관련 주주제안은 많지 않지만, 관심을 끌고 있음.
- 지난주 화요일 제너럴밀스(General Mills)의 연례 주주총회에서, 제너럴밀스가 플라스틱 포장을 줄임으로써 지속가능성 관련 노력의 규모, 속도, 그리고 엄격한 적용을 증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방법에 대해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에 대해 주주 55%가 찬성표를 던졌음.

04. 미국 각 주 규제당국은 기업이 주주투표를 요구할 때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원함

미국 기업들이 주주의 권리를 축소하려는 추세에 따라, 주 규제당국은 기업이 정책 변경을 위해 주주승인을 구할 때 추가 공시를 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 북미증권관리자협회(North American Securities Administrators Association, 이하 NASAA)는 주 당국에 등록된 증권 발행 기업들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관련 자료를 규제당국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고려하고 있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기업이 주주에게 특정 방식으로 투표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함.
- 각 주 규제당국으로 이루어진 NASAA 는 U-1 서식을 변경하여, 관련 공시자료를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에 제출한 날로부터 2 일 이내에 의결권 대리행사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변경안을 제안했음. U-1 서식이란, 증권 등록을 위한 통일된 신청 서식(Uniform Application to Register Securities) 지칭하며, 다수의 미국 주에서 증권 판매 제의를 등록하기 위해 사용됨.
- NASAA 는 10 월 22 일까지 공공 의견을 수렴함.
- NASAA 는 증권 발행사가 투자자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주주승인을 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음.
- 증권발행사가 주주들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이들은 해당 요청서의 사본을 SEC 에 제공해야 하나, 주 규제당국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음. 의결권 대리행사란 대부분의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회사 주주총회에 참여하지 않고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말함.

05. 공화당 패트릭 투미 상원의원, ESG 평가기관에 추가 정보 제공 요구

상원 은행 위원회 공화당 소속 패트릭 투미(Patrick J. Toomey) 의원은 12 개 신용평가 및 데이터 분석 기업이 각 기업의 ESG 평가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조사하기 위해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 공화당 소속 패트릭 투미 의원은 기업들에 서신을 통해 ESG 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비(非)재산적 성격의 방법론에 대한 문서 사본을 요청했음. 투미 의원은 또한 잠재적인 컴플라이언스 관련 부담, 제 3 자 데이터의 신뢰성, ESG 점수에 있어 정치적 이슈의 역할, 그리고 잠재적 이해 충돌 관련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음.
- 9 월 20 일자 서신에서 투미 의원은 "ESG 평가는 연방 증권법에 따라 기업들이 행해야 하는 광범위한 공시자료들 이상의 정보에 대해 고려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각 공시 영역은 법적으로 중대한 기후변화 관련 자료들을 포함하여, 여러 상황이 있는 경우에도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ESG 평가사들은 회사의 ESG 등급을 결정할 때 연방 증권 법 상 중대하지 않거나 재정적으로 관련이 없는 정보를 고려합니다."라고 말했음.
- 위 서신은 MSCI, ISS, 블룸버그, 모닝스타 자회사인 서스테이널리틱스, 무디스 인베스터즈 서비스, 비영리기관 CDP, S&P 글로벌 등에 보내졌음.
- 위 서신은 공화당 의원들이 ESG 에 반대하기 위해 취하는 여러 조치의 일환임. 투미 상원의원을 포함한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ESG 에 대한 고려는 정치적인 이유에 근거하여 나왔으며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위 평가사들의 ESG 등급이 기업이나 지방자치당국의 신용 등급과는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주 차원에서 그리고 미국 연방 차원에서 ESG 등급 평가가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일이며 유해하다고 주장해 왔음.

- 2022 년 9 월 3 주 -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에게 어떤 공세를 퍼부을 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또한, 미국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이 최고 기후 리스크 책임자를 임명했다는 소식, ESG 와 관련하여 투자회사가 주의할 점, 그리고 미국 하원 감독위원회(U.S. House Oversight Committee)가 ESG 에 반대하는 주 정부 법안을 살펴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소식을 다룹니다.

01.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공화당 의원들, 증권거래위원회의 기후변화 관련 규칙 및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게리 겐슬러 위원장 압박 예정

패트릭 투미(Patrick J. Toomey)의원을 비롯한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증권거래위원회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ESG 관련 사안 처리와 암호화폐에 대한 이들의 불만 사항을 언급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 공화당 위원회 보좌관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투미 의원을 비롯한 미국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지나치게 정치화된 정책 어젠다로 인해 SEC 가 투자자 보호, 공정하고 질서정연하며 효율적인 시장 유지, 자본 형성의 촉진이라는 핵심 임무 이행이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자 준비 중임
- 위 보좌관은, 공화당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SEC 의 기후변화 관련 금융 리스크 공시 규칙안 등 ESG 관련 사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SEC 가 발표한 위 규칙안은 미국 민주당과 ESG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았음. 아마존, 유나이티드 항공을 비롯하여 위 규칙안의 적용 대상인 미국 기업들 중 다수가 위 규칙안에 따른 직접 탄소 배출에 대한 공시 규정에 동의했음. 다만, 일부는 공급망 탄소 배출 공시와 같은 일부 측면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음.
- 미국 공화당은 최근 몇 달 동안 SEC 가 기후변화 공시 규칙을 이행할 법정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펼쳐 왔고,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과 위 규칙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위 주장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음.

02. 500 명 이상의 ESG 투자자들, 각국 정부에 강력한 기후변화 관련 정책 요구

총 운용 자산 규모가 39 조 달러에 달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각국 정부들에 기후 관련 정책 입안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성명서는 각국 정부들에 청정 에너지와 기타 탈탄소를 위한 수단에 대한 민자 조달 활성화를 장려하는 탄탄한 기후 정책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해당 성명서에 따르면 위 기관 투자자들은 각국 정책 및 규제가 2030 년까지 지구 기온 상승 폭을 1.5 도 이하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던 파리기후협약의 목표와 일치하도록 할 것을 요청했음.
- 특히, 투자자들은 각국 정부에 탄소가격제, 화석 연료에 대한 지원금 단계적 감축, 그리고 에너지 전환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과 공동체들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계획 등 다양한 국내 정책을 이행할 것을 압박했음.
- 또한 투자자들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기후 금융의 크기를 키우고, 기후 관련 금융정보공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의 정책 프레임워크와 일치하는** 공시 규칙 등을 통해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기후 관련 리스크를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금융 시스템 전반에 기후 관련 공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음.

- 위 성명서에 서명한 532 개 기관 투자자들은 알리안츠(Allianz), BNP 파리바(BNP Paribas), HSBC, 트릴리움에셋매니지먼트(Trillium Asset Management) 등이었음.

03. 미국 재무부 차관보 넬리 량, 금융시스템은 기후 리스크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

미국 재무부 국내금융 담당 차관보 넬리 량(Nellie Liang)은 금융 시스템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기후 변화의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한 유인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9 월 9 일 금융 리서치에 대한 재무부 리서치 컨퍼런스에서 넬리 량 차관보는 규제기관과 기준 설정 기관들이 기후-금융 리스크에 회복력이 있는 금융 시스템을 만들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재무부는 이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음.
- 미국 금융안정감독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는 작년 보고서를 발표하여 데이터의 질 개선과 기후 리스크 요소 관련 공시 관련 30 개 권고안을 내놓았음. 위 보고서는 투자자들이 더 많은 정보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것을 위 권고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음.
-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리서치국(Office of Financial Research, OFR)의 직원들은 기후 데이터 허브를 만들고 기후 리스크 추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정교한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분석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음.
- 금융리서치국의 리서치는 정책 입안자들이 기후-금융 리스크를 둘러싼 유인책을 이해하는 것을 돕고 있음. 위 컨퍼런스에서 다룬 주제들은 은행들의 기후 관련 약속들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 발표, 관련 세법 조항 및 공시 규칙 등이었음.

04. 미국 통화감독청, 최고 기후 리스크 책임자 임명

미국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이 유(니나) 첸 박사를 최고 기후 리스크 책임자(Chief Climate Risk Officer)로 임명했습니다. 첸 박사는 뉴욕주를 위해 기후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보험 기준 설정 기관에서 직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 미국 통화감독청의 발표에 따르면, 첸 박사는 은행 규제를 담당하는 OCC 의 기후 리스크 관련 정책을 이끌 예정임. 감독, 정책, 이해관계자 소통 등의 측면을 담당할 예정이며, 이는 현 미국 통화감독청의 청장대행 마이클 쉬(Michael J. Hsu)에 직접 보고될 예정임.
- 첸 박사가 이끄는 통화감독청의 기후 정책은 통화감독청이 규제하는 은행들의 기후 리스크 관리 법체계의 개발 및 이행에 초점을 맞출 예정임. 통화감독청이 규제하는 은행들은 미국 국내 은행, 연방 허가를 받은 저축 조합, 그리고 미국에서 영업하는 해외 은행들임.
- 첸 박사는 기후 부서 총괄로서 뉴욕주 금융서비스부서에서 재직했음. 당시 첸 박사는 뉴욕주 감독 업무에 기후-금융 리스크를 포함하도록 했음.
- 첸 박사는 또한 리스크 관리 업계의 기준 설정 기관인 국제보험감독자기구(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IAIS)가 설립한 기후 리스크 운영위원회의 부의장직을 수행했음. 그 이전에는 첸 박사는 네이처 컨저번시(Nature Conservancy)의 환경 보존 투자 이사였음.

05. 미국 로펌 브라운스타인, 기업들이 ESG 규칙의 '미로'에 조심해야 한다고 제언

미국 로펌 브라운스타인(Brownstein Hyatt Farber Schreck LLP)은 무수한 ESG 투자 관련 주 법안과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포트폴리오 전략을 결정하는 데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 지난 달 클라이언트 노트를 통해, 미국 로펌 브라운스타인은, 주 정책 입안자들과 고위 공무원들이 ESG 를 지지하거나 억제하려는 규칙을 제정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ESG 관련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음.
- 텍사스주, 웨스트 버지니아주 등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들의 경우 주 연기금이 화석 연료를 보이콧하는 금융 기관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 등 ESG 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법규를 제정해왔음.
- 한편, 캘리포니아주와 버몬트주 등의 정책입안자들은 주 연기금의 화석 연료 투자 비중을 줄이기 위한 법안을 입안하고 있으며, 코네티컷주는 주 연기금이 총기 제조 업체들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음.
- 브라운스타인 소속 변호사들인 제이슨 다운스(Jason Downs), 캐리 존슨(Carrie Johnson), 레베카 터커(Rebecca Tucker)는, "기업의 경영진이 어떤 정치색을 가지고 있든, ESG 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든, 기업은 실무와 정책에 있어 주 차원의 규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음.
- 위 클라이언트 노트는, "'미로(labyrinth)'같은 ESG 와 관련한 주 차원의 법안들과 폭넓은 규제기관들을 고려할 때, 기업들은 사업을 영위하는 주의 주지사, 법무장관, 입법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할 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지적하며 "또한 기업들은 투자 전략을 정하기 전 ESG 실무와 관련한 소송 리스크를 평가하고 준비함으로써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음.

기타뉴스

유럽 자산관리사들, 향후 수개월 내에 수백개의 ESG 펀드를 재분류해야 함

- 모닝스타 등 연구자들의 검토에 따르면, EU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 제 9 조 펀드로 등록된 펀드 중 소수의 펀드만이 위 규칙에 따른 지속가능 투자 수준에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관련 산업을 자문하는 변호사들은 펀드 매니저들에 공식 ESG 지정을 변경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조언하고 있음.

- 2022 년 9 월 1 주 -

일본에서 연성법 형태로 제정될 예정인 「책임 있는 공급망 내 인권 존중을 위한 지침안」을 소개합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2035 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했으며, 프랑스의 경우 8 월 22 일부터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산업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을 징수하는 법이 시행되었다는 소식도 전해 드립니다.

01. (일본) 지난 8 월 초, 일본 경제산업청(METI)이 「책임 있는 공급망 내 인권 존중을 위한 지침안」을 발표함. 8 월 29 일까지 약 3 주간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추후 입법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나 현재까지는 9 월 내 연성법 형태의 기업 실사 지침으로만 최종 공개할 예정임.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일본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이번 지침을 수립하였고, 궁극적으로는 구속력 있는 법제화를 목표로 삼고 있음

- 지난 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강제노동을 기반으로 생산된 면화 사용으로 미국, 프랑스 등으로부터 압류, 제재를 받은 유니클로 사례 이후 일본 정부는 약 3,000 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인권실사 조사에 착수했음. 조사 결과 일본 상장기업 절반이 인권실사를 하지 않았으며 그 중 30%는 실사의 방법을 모른다고 응답했음.
- 공급망 내 인권 리스크에 이미 대응하고 있는 미국, 유럽 기업들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경제산업성에서 지난 8 월 기업 공급망 인권실사 지침안을 공개함. 이는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인권 전문가와 4 차례의 논의를 통해 마련한 것임.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추후에도 일본 기업의 미국, 유럽 정부의 인권실사 규제 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경우, 해당 지침을 법제화할 것도 고려 중이라고 밝힘.

02. (미국) 지난 8 월 24 일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2035 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함. 또한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수소차의 신차 판매 비중을 현재 16% 수준에서 2026 년에는 35%, 2030 년에는 68%로 각각 끌어올린다는 중간 목표를 설정함

- 이번 조치를 통해 2035 년부터는 내연기관이 달린 차량은 일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만 판매를 허용할 방침임. 단, 이러한 정책은 신차 판매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2035 년 이후에도 내연기관 차를 보유하거나 중고차로 판매가 가능함.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 자동차 시장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음.
- 지난 6 월 유럽연합 또한 2035 년부터 휘발유나 경유 등 화석연료로 구동되는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중지하는 데 합의함. 유럽의회는 지난 6 월 8 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5 년까지 내연기관 신차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100% 감축해야 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성능 표준 개정안'을 승인함.

03. (프랑스) 프랑스 정부는 지난 8 월 22 일부터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산업 광고를 금지하고, 내년 6 월부터는 천연가스 광고도 금지할 계획임

- 이를 어기는 업체는 벌금 최소 2 만 유로(약 2600 만 원)부터 최대 10 만 유로(약 1 억 3000 만 원)를 부과해야 하며, 재범 시 2 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함. 다만 금융 투자와 통신 관련 협찬 및 재생에너지 또는 바이오가스 함량이 50% 이상인 연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기준에 부합하는 연료 등에 대해서는 광고가 허용됨.
- 그린피스 및 환경단체 20 곳은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화석연료 ▲휘발유 자동차 ▲비행기 ▲비현실적인 탄소 감축 방법 등을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석유회사의 광고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2021 년 10 월에 시위를 벌인 바 있음. 독일 암스테르담시의 경우 2021 년부터 화석연료뿐만 아니라 항공산업, 차량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제품을 일정 공공시설에서 광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시행함.

- 2022 년 8 월 2 주 -

이사회 다양성 공시 규칙이 제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 인종 다양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에 대해 다룹니다.

또한,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기업 및 동업자 단체에 대한 공격, 플로리다주와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ESG 투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 왜 주주들이 노동조합을 지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행동주의 투자사 Trillium 의 의견 등에 대한 소식을 살펴봅니다.

01. 미국 정계가 기업 이사회 다양성 공시 규칙에 대해 논의하자 기업 이사회는 다양성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의회와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들의 이사, 임원, 및 직원 구성의 다양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업들은 인종 및 민족 다양성을 충족하는 후보들을 추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 사상 최초로 S&P 500 지수에 오른 모든 기업들의 이사회가 인종 또는 민족 다양성을 충족하는 이사를 최소 1 인 포함하는 상황이 되었음.
- 러셀 3000 지수의 기업들도 인종 다양성 개선에 큰 진척을 보였음. 러셀 3000 기업 중 약 90%는 올해 소수자에 해당하는 이사 최소 1 인을 두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수치(73%)나 전전년도 수치(70%)에 비해 증가한 것임.
- ISS 거버넌스 솔루션의 파실 마이클(Fassil Michael)은 2020 년 미네애폴리스주 경찰이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사건과 그로 인해 촉발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으로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도 인종 평등과 다양성 · 포용 관련 유의미한 조치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고 언급함.
- 기업 이사회 여성 비율도 개선되고 있음. S&P 500 대 기업의 이사회 구성원 1/3 이 여성임.
- 미 의회 의원들과 규제기관들은 미국 상장기업의 이사회, 경영진, 직원들의 다양성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음.
- 미 하원 2023 년 국방비 승인 법안(HR7900)에는 기업들이 이사회 구성원과 임원의 다양성 지표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해당 법안에 따르면 미국 상장기업들은 이사회 구성원, 후보, 임원의 인종, 민족,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참전 용사 여부에 대해 공개해야 함. 미 의회는 아직 최종 합의안에 위 공개조항을 포함할지에 대해 정하지 않았음.
- 위 공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이 고려하고 있는 바임. SEC 어젠다에는 이사회 다양성과 인적자원관리가 서로 다른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음.
- 블랙록(BlackRock), 밴가드(Vanguard) 등 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 올해 기업들이 이사회 다양성을 개선하도록 압력 수위를 높이기 위해 주주 대리투표 정책을 변경했음.
- 블랙록은 미국 기업이 이사회 구성원의 30%가 다양성을 대변하고 최소 2 인의 이사가 여성이며 최소 1 인이 과소대표된 소수자가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원하고 있음.
- 올해 일부 기업 주주총회에서 블랙록은 이사회 다양성을 이유로 최소 1 인의 이사 후보에 대해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음. 올해 블랙록은 미국 기업 중 14%에서 해당 기업에 이사회 다양성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지거나 투표를 보류했음.

02. 미국 상공회의소가 증권거래위원회의 트럼프 행정부 당시 규칙 폐지 결정에 소를 제기함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등은 미국 증권거래소(SEC)가 트럼프 행정부 당시 제정했던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규제를 뒤집은 것에 대해 SEC 를 고소했습니다:

- 미국 상공회의소,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usiness Roundtable), 테네시 상공회의소(Tennessee Chamber of Commerce)는 SEC 의 2020 년 의결권 자문사 관련 규칙이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했으며 의결권 자문사들이 새로운 투명성 · 책임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 수천개의 기업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들은 이들이 투자하는 기업의 주주총회 의안에 대해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지에 대해 조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의결권 자문사들은 고객사(일반적으로 기관 투자자)에 기업 주주투표에서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 지난달 SEC 는 규칙 변경 투표를 진행하여, SEC 규칙 상 의결권 자문사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자문 내용이 해당 의안을 다루는 기업들에게 동시에 공개되도록 규정했던 조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음.
- SEC 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지난 7 월 3 일 이번 SEC 의 규칙 변경으로 의결권 자문사들의 자문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와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음.
 - SEC 는 위 소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을 거절했음.

03.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기업과 동업자조합이 증권거래위원회의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 규칙에 대해 반발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음

미국 상원 기후변화 태스크포스(Senate Climate Change Task Force)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후 금융(Climate Finance)을 옹호하며, 미국 상장기업들이 SEC 의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 규칙을 지지할 것을 압박하고 이러한 규칙 제정에 반발하기 위해 동업자조합의 뒤에 숨는 행동을 하는 것을 그만두고 지적했습니다:

-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화석연료 기업들과 해당 기업들의 최대 규모 동업자 조합들인 미국 상공회의소와 미국 석유협회(American Petroleum Institute)가 SEC 의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 규칙에 대해 비판하고 다른 기후변화 관련 이니셔티브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맹공격했음.
- 기후 금융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ESG 투자 단체들은 위 상원의원들의 비판에 동의했음.
- ESG 관련 비영리기관 세레스(Ceres)의 스티븐 로드스타인(Steven Rothstein)은, 세레스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100 대 기업 중 약 50 개에 달하는 기업들이 미 의회에서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는 위 기업들이 자신을 대리한 로비활동을 위해 동업자조합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말했음.
- 지난 3 월 SEC 는 기후변화 관련 규칙을 제안했음. 해당 규칙의 최종본이 나온다면, 미국 상장회사들은 온실가스의 직접배출(Scope 1)과 간접배출(Scope 2)에 대해 공시해야 함.

04. 미국 플로리다주와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ESG 투자를 어긋하기 위한 정책을 제정함

미국 플로리다주 주지사 론 드산티스(Gov. Ron DeSantis)와 웨스트 버지니아주 재무장관 라일리 무어(Treasurer Riley Moore)는 이들 주에서 ESG 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플로리다 주 불공정 무역관행 법을 변경하여 ESG 지표에 기반한 거대 금융 기관들의 “차별적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했음. 또한 드산티스 주지사는 플로리다 퇴직 시스템 신탁 펀드를 운용하는 플로리다주 연기금 운용회(Florida State Board of Administration)의 신인의무에 대한 조항을 개정하여 연기금 운용회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ESG 요소를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투자수익만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음.
- 2024 년 대선후보 출마를 노리고 있는 드산티스 주지사는 주 연금 펀드에서 ESG 지표가 널리 퍼진 상황을 억제하기 위해 다른 주와 협업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한편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는 라일리 무어 재무장관이 블랙록, 골드만삭스, JP 모건, 모건스탠리, 웰스파고와의 은행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위 기업들과 더 이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올해 초에 주 재무장관이 “에너지 기업에 대해 보이콧을 하고 있는” 금융 기업들과의 거래를 거부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통과시켰음. 위 5 개 기업이 에너지 기업에 대한 보이콧을 한 적은 없지만, 위 기업들 중 다수는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 노출을 줄이기 위한 투자 정책을 채택하거나, 이들에게 대출을 받는 고객사의 탄소배출 감축을 돕는 정책을 실행했음.

05. 미국공인회계사협회가 공급망 온실가스 배출 공시 규칙에 반대함

미국공인회계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ICPA)는 미국 상장기업들이 이들과 거래하는 공급사 등 제 3 자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공시를 면제받기를 원하다고 밝혔습니다:

- AICPA 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에 보낸 서신에서, Scope 3 배출(공급망 온실가스 배출 정보) 공개는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말하며, 이러한 배출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는 요건을 면제하는 정책을 요구했음.
- 위 서신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시 기준은 UN 기준 및 전 세계 정부들의 노력에 따른 결과인 다른 잘 알려진 기준과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음.
- AICPA 는 이러한 기준은 단기, 중기, 장기 리스크의 차이에 대해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중대성(significance)”이라는 단어가 공시가 필요할 때 공시 기준에 대해 논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위 단어의 의미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음.

06. 미국의 ESG 자산운용회사인 트릴리움(Trillium)은 주주들은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노동 조합을 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ESG 기업인 트릴리움에셋매니지먼트(Trillum Asset Management)는 최근 정책 보고서에서 주주들이 직원들의 조합을 설립할 권리를 지지한다면, 이는 주주에게도 혜택으로 돌아오며 주주들의 장기 투자 계획과 지속가능한 투자 가치와도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 위 보고서에 따르면, 주주들은 노동조합을 포용하며 기업 임원들이 노동조합을 제거하고자 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에 대해 우려할 때 더 이익을 얻을 수 있음. 연구 결과 조합과 단체협약이 있는 기업들은 생산성이 높았고, 직장에서의 직원들의 건강, 안전, 및 만족도가 개선되었으며, 이직률이 줄었다고 함.
- 또한 트릴리움에 따르면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조합 설립 노력에 맞서거나 이를 무산시키고자 할 때 평판 리스크와 법적 리스크를 직면했음. ESG 투자자들에게 노동조합을 지지하는 것은 인종 평등과 성평등을 지지하는 것임.

기타뉴스

- 싱가포르 중앙은행인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이 ESG 펀드 공시 및 보고 지침을 새로 발표했다. ESG 펀드에 투자 전략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위 지침은 내년 1 월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임. 해당 지침에 따라 MAS 가 요구하는 정보는 ESG 펀드 투자전략, 펀드가 투자처와 리스크에 대해 판단할 때 사용되는 기준과 지표, 그리고 펀드의 전략과 관련한 한계 등이 있음. MAS 는

이러한 새로운 지침이 그린워싱 리스크를 줄이고 개인투자자들이 투자처로 삼는 ESG 펀드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 2022 년 7 월 4 주 -

2022 년 미국 주주총회 시즌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여러 조치들이 주주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미국 하원 규칙위원회에서 기업들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 공개를 막아주던 편승조항(rider; *역자 주: 법안의 내용과 무관한 사항에 대한 편승적인 수정을 뜻함)을 폐지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은 증권거래위원회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블랙록(BlackRock)은 넷제로(Net-zero)로의 이행이 평탄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경제 변동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01. 2022 년 미국 주주총회 시즌에서 투자자들은 기후변화와 다양성에 관해 결집력을 보여주었음

올해 주주총회 시즌에서 주주행동주의자들은 공공 정책 관련 결의에 높은 성공률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이루어진 일부 변경 조치들과 기업이 ESG 이슈를 해결하라는 투자자들의 압박에 따른 결과입니다:

- 캘리포니아 소재 로펌인 깁슨던 앤 크러처(Gibson, Dunn & Crutcher LLP)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주주총회에서 최다 과반수 찬성표를 받은 안건은 환경과 사회 관련 주주결의(45%)로, 처음으로 거버넌스 관련 결의(38%)를 앞섰음
- 비록 미국 공화당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직접 관여하고자 하는 이슈의 폭을 넓히고 있어 ESG 스튜어드십에 대한 관심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 올해 투자자들은 미국 기업의 정기주주총회에서 ESG 결의안 총 282 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는데 이는 2021 년에 비해 60% 증가한 수치임. 이 중 ESG 결의안 34 건은 주주들의 과반수 찬성표를 받았음.
- 이러한 성공은 부분적으로 최근 SEC 의 일련의 조치들에 힘입은 결과임. 작년 SEC 는 기업들이 환경, 노동중재 등 공공 정책 관련 이슈에 대해 주주투표를 개최하도록 요구하는 경향이 트럼프 행정부 당시보다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음. SEC 는 또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17 년부터 2019 년까지 SEC 가 발표했던 관련 조항 해석 공보 3 개를 폐지했음. 지난주 SEC 는 주주제안 배제 기준의 변경안을 발표했는데, 동 변경안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이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투표 안건에서 배제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 늘어나게 됨.

02. 미국 하원 규칙위원회가 기업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 공개를 막아주던 편승조항을 폐지했음

미국 하원 규칙위원회(House Rules Committee)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업에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칙안을 제안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편승조항(rider; *역자 주: 법안의 내용과 무관한 사항에 대한 편승적인 수정을 뜻함)을 폐지했습니다:

- 미국 하원 규칙위원회는 3 개의 "검은 돈"과 관련한 편승조항을 폐지했다고 밝혔음.
- 2015 년 이래 미국의 연간 지출 법안은 SEC 가 기업들에 정치 후원금, 비과세 단체 후원금, 사업자 단체 회비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막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음.

- 기업의 정치자금 지출 공개 이슈는 투자자들의 주요한 쟁점이었음. 올해 주주총회 시즌 말까지 기업 주주총회에서 투표에 부쳐질 예정인 500 개 이상의 주주제안 중 기업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주주결의안이 차지하는 비율은 19%에 달함.
- 주주행동주의자들과 미국 민주당 의원들,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은 기업들의 정치자금 지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 한편, 공화당 의원들은 이러한 요건을 만드는 것은 SEC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함.

03. 미국 국방비 지출 법안에 기업 이사회 다양성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됨

미국 하원의 2023 년 국방비 승인 법안 최종안에 기업들이 이사회 구성원과 임원의 다양성 지표에 대해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 위 법안(HR 7900)에는 미국 상장 기업들이 이사회 구성원, 후보, 기업 임원들의 인종, 민족, 성정체성, 성적 지향, 참전 용사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변경조항이 포함되었음.
- 해당 조항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산하 소수자 및 여성 포용 사무국(Office of Minority and Women Inclusion)이 최적의 다양성 공시 실무에 대해 발표하고 기업 내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보고를 수행하는 자문그룹을 신설할 것을 지시함.
- 지지난 주 미국 하원은 국방비 승인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수개월 내 상원이 연례 국방 정책에 대한 법안을 작성할 예정임.
- 주주들과 ESG 지지자들은 SEC에 인적자본관리에 대한 규칙을 만들 것을 요구해 왔으며, 위와 같은 다양성 공개 규칙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투명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함.
-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즈(State Street Global Advisors)는 올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정책을 변경하여, 기업들에 이사회 다양성 개선을 요구하는 압박 수위를 올리기로 했음. 한편, 직장 내 다양성과 기업 이사회 다양성 관련 결의안안은 2022 년 말까지 기업 주주총회에서 투표에 부쳐질 500 개 이상의 주주제안 중 15%를 차지함.

04.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증권거래위원회가 기후변화 관련 규칙에 접근하는 방식을 강하게 비판함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업의 기후변화 리스크 공개 규칙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계획을 비판하며, SEC의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SEC는 결국 그 성격상 정치적인 수밖에 없는 규칙을 통제하지 못한 채 집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거버르 그루알(Gurbir Grewal) SEC 집행국장은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SEC의 기후변화 리스크 공개 규칙안을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음.
- 위 규칙안으로 인해 SEC는 공화당 의원들의 비판과 민주당의 지지를 받고 있음. 민주당은 투자자들이 기후변화 리스크와 청정에너지 경제로 이행하는 데에 관한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위 규칙에 따라 공개된 자료들이 필요하다고 말함.
- SEC의 기후변화 리스크 공개 규칙안은 미국 상장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과 공급사들의 온실가스 배출 등의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칙임. 또한 지난 5 일 SEC는 ESG 요소를 고려한다고 주장하는 뮤추얼펀드와 상장지수펀드들이 이들이 고려하는 ESG 요소들에 대한 정보와 투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들이 사용하는 전략 및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했음.

- 그루알 SEC 집행국장은 SEC 집행국이 기업들이 ESG 정책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사례 등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등 SEC 가 과거에 취했던 것과 동일한 방침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공화당 소속 앤 와그너(Ann Wagner)의원은 SEC 가 기업이 소위 'Scope 3' 배출(기업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에 관해 허위진술을 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질문했음. 그루알 집행국장은 위 사안에 대해 결정하기 위해 기관 내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존할 것이라고 밝혔음. 또한 와그너 의원은 SEC 가 ESG 이슈에 대해 제대로 정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음.
- 민주당 소속 후안 바르가스(Juan C. Vargas) 의원은, 캘리포니아와 미국 전역에서 상장기업들에 ESG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음.
- 그루알 SEC 집행국장은 위 기후변화 관련 규칙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만큼 위 규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도, 잘못된 행위를 하는 기업들에 책임을 지우기 위해 증권법의 사기방지 관련 조항들을 참고하고 있다고 밝혔음.

05. 금융안정위원회, 기후 관련 리스크 분석에서 진전을 이룩했다고 선언

국제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는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리스크를 다루는 데 있어 지난 1년간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제 기준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금융안정위원회는 각국 금융당국과 국제 기준수립기관과 협력하여 기후 관련 데이터의 이용가능성과 국가간 비교가능성을 개선했다고 보고했음.
- 위 업무에는 금융리스크에 대한 공동 지표를 수립하고 일관된 형식으로 데이터에 대한 공개적 접근을 허용하는 데이터 저장소를 만드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음.
- 금융안정위원회는 전세계 금융당국들이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개발 등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에 대한 감독을 전반적인 금융 감독 정책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음.

06. 블랙록, 넷제로로의 이행이 '평탄치 않은' 상황으로, 변동성이 높은 경제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함

블랙록(BlackRock)은 글로벌 경제가 수십년간 이어져온 안정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동성의 시기에 진입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넷제로로의 '평탄치 않은' 이행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 블랙록의 싱크탱크인 BII(BlackRock Investment Institute)은 에너지 이행이 인플레이션과 정치적 문제로 변동성이 심해지는 미래 시장의 모습을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에너지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국내 석탄 연료를 사용하자는 요구와 탈탄소·신재생 에너지 활용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현재 에너지 지형은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음.
- 블랙록은 넷제로로의 이행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지속가능성 관련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관점을 견지한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저탄소/무탄소 기술이 발전할 것이며 기후변화의 비용이 더 명확해지고, 사회는 청정에너지 사용에 좀 더 포용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 블랙록은 금융기관, 포트폴리오 운용사, 자산운용사가 녹색 기업들과 "신용할 수 있는 에너지 이행 계획이 있거나 에너지 이행에 필요한 재료, 설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탄소집약적 기업들에 투자함으로써 넷제로(Net-

zero) 이행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음. 예를 들어,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소의 대두로 인해 배터리를 만드는 광물에 대한 수요가 급등하고 있음.

- 또한, 블랙록은 시장이 에너지 이행에 대해 아직 완전히 가격을 매기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음.

07. 샘스클럽 CEO 는 기업 CEO 들이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어려운' 요구에 직면했다고 말했음

샘스클럽의 사장 겸 CEO 인 캐서린 맥레이(Kathryn McLay)는, 기업 리더들이 어떤 정치적 이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지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고객과 멀어지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음:

- 캐서린 맥레이 샘스클럽 CEO 는 아스펜 연구소(Aspen Institute)의 ESG 회의에 참석하여 기업 임원들은 소비자들이 어떤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지에 대해 명심하고 논쟁적 주제에 대한 정치적 입장 표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샘스클럽은 월마트가 소유한 회원제 기반 소매창고 체인임.
- 맥레이 CEO 는 정치와 민주주의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위험부담이 높아져가고 있다고 지적했음.
- 또한 맥레이 CEO 는 민감한 주제들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말했음. 맥레이 CEO 는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폐지(미국 낙태권 관련 연방 대법원 판결 폐지) 이후 샘스클럽 경영진들이 직원들을 어떻게 지원할 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음.

기타뉴스

- 글로벌 금융 부문이 기후변화와 환경 리스크를 다루라는 압력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Mizuho Financial Group)이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 위해 두 개의 부서를 신설했다고 밝혔음. 미즈호는 위 부서들이 미즈호 은행의 기존 지속가능성 관련 계획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살피고 고객이 ESG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돕기 위해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음.

- 2022 년 7 월 3 주 -

미국 기업 주주총회에서 투표에 부쳐진 ESG 이슈가 사상 최대치에 도달함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제안에 따르면 향후 미국 기업들은 주주총회 투표에서 주주제안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이번 주는 공급사의 ESG 데이터에 대한 법적 의미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한편, 미국 하원의원이 미국 은행인 웰스파고(Wells Fargo)의 인종차별적 대출 관행에 대해 연방 규제기관의 조사를 요구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01. ESG 관련 투표가 사상 최대치에 도달함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투자자들이 ESG 관련 주주제안을 하는 데 있어 장벽을 없앨 방안을 모색함

2022 년 미국 주주총회 시즌에 투표에 부쳐진 ESG 이슈가 사상 최대치에 도달함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자들이 기업 주주총회에 ESG 관련 이슈에 대해 동일한 제안을 다시 제출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규칙 변경안을 발표했습니다:

- SEC 는 14a-8 규칙을 변경하는 규칙 변경안을 통과시켰음. 14a-8 규칙이란 주주들이 제출한 주주제안 중 기업들이 "이미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거나, 해당 기업에 제출된 다른 제안과 "실질적으로 중첩적인" 안건을 주주총회 투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인데, SEC 는 위 변경안을 통해 해당 규칙을 변경하여 기업들이 주주제안을 배제하기 어렵게 만들고자 함.
- 예를 들어, 어느 주주제안이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안건이 주주투표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해당 안건의 "필수적인 요소들"이 이미 이행되고 있어야 함. 또한, 기업들이 어느 주주제안이 "중첩적"이기 때문에 주주투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은 다른 결의를 통해 동일한 이슈를 해결하고 있으며 "동일한 수단으로 동일한 목적을 성취하고자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 이번 규칙 변경안은 ESG 와 관련하여 SEC 의 가장 최신 조치로, 주주행동주의자들은 최근 SEC 의 일련의 조치에 힘입어 기업들에 ESG 관련 사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를 충족하라는 압력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임.
- 올해 현재까지 투자자들은 기업의 정기주주총회에서 282 개 결의안에 투표했음. 이는 작년에 비해 60% 증가한 수치임.
- 기업 주주총회 결의의 증가세는 작년에 SEC 가 발표한 지침과도 관련이 있음. SEC 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17 년부터 2019 년까지 SEC 가 발표했던 관련 조항 해석 공보 3 개를 폐지하며, SEC 가 과거보다 기업들에 환경, 직원 중재 등 공공 정책 관련 이슈에 대해 투자자들의 투표를 개최하라는 요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음.

02.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의결권 자문사에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했던 트럼프 행정부 당시 규칙 폐지

의결권 자문사란, 투자 펀드에 해당 펀드가 투자하는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어떻게 투표해야 하는지에 대해 권고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뜻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의결권 자문사들이 투자 펀드에 자문을 제공할 때 그 복사본을 대상기업에 제공하도록 하는 규칙을 만들었는데, 최근 SEC 가 위 규칙을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 많은 투자 회사들과 자산운용사들은 기업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할 지 결정하기 위해 의결권 자문사를 고용함. 현재 의결권 자문 사업의 양대산맥은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글래스루이스(Glass Lewis)임. 재계에서는 위 의결권 자문사들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견지해왔음.
-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의결권 자문사들이 투자 펀드에 자문을 제공할 때 그 복사본을 대상기업에 제공하도록 하는 규칙을 만들었는데, SEC 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제정한 위 규칙이 발효하기 전 이를 폐지했음. SEC 의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은 기관투자자들과 의결권 자문사의 고객사들이 SEC 에 위 규칙이 의결권 자문사의 독립성을 해치고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고 밝혔음.
- SEC 는 의결권 자문을 주주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유지했음. SEC 규칙은 요청이 정확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미국 전국제조업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는 SEC 의 위 규칙 폐지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음. 또한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의 Executive Vice President 역시 소 제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음.

03. 미국 로펌 레이텀앤왓킨스, 기업에 공급사 ESG 데이터 요구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권고

미국 로펌 레이텀앤왓킨스(Latham & Watkins LLP)는 전 세계 기업들이 공급사들의 ESG 요소들과 리스크를 평가 및 분석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레이텀앤왓킨스의 ESG 그룹은 고객용 뉴스레터를 통해 올해 기업들은 미국, 영국, 유럽연합, 아시아 등지에서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ESG 이슈에 대해 더 책임감을 가지도록 요구하는 다수의 규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음.
-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그린워싱 관련 주장, 온실가스 배출 공시, 강제노역 및 인권 관련 혐의에 대한 실사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어, 기업들에 자사 공급망을 조사할 책임이 부과됨.
- 기업들이 다양한 규제에 적응할 때, 기업들은 공급사와 제 3 자로부터 관련 정보를 모으고, 중대한 정보를 적절하게 공개하고, 공급사들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검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기업들은 관련법상 어떤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선제적으로 이해하고, ESG 이슈와 리스크에 대해 시작부터 공급사에 관여하고,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나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 등 국제 기관에서 이미 수립된 보고 지침을 활용해야 함.
- 레이텀앤왓킨스는 또한 기업들에 실사 및 내부 조사에서 ESG 요소를 포함시키고, 준법과 감시체제 유지를 위해 강력한 기업 ESG 거버넌스 정책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음.

04. 스위스, 금융 상품에 대한 기후 리스크 점수표 시행

스위스가 금융 기관들이 자사 투자 상품과 포트폴리오의 기후 리스크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투자자들에게 점수표를 공개하여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을 돕도록 하는 제도를 공개했습니다:

- 스위스 정부의 연방 평의회(Federal Council)은, 스위스 기후 점수(Swiss Climate Scores)라고 불리는 위 제도가 투자 상품이 파리기후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발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음.
- 위 평가제도는 투자 포트폴리오나 투자 상품의 탄소 발자국과 탄소 집약도, 지구온난화 가능성, 석탄연료에 대한 노출도, 넷제로에 대한 입증된 약속, 경영진의 투자 전략, 기후 스튜어드십의 신뢰도에 대해 평가함. 위 제도는 탄소중립을 위한 글래스고 금융연합(Glasgow Financial Alliance for Net-Zero)과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국제 공시 프레임워크에 기반했음.
- 스위스 기후 점수에 대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금융 기관들은 즉시 스위스 기후 점수를 도입할 수 있음. 스위스 기후 점수는 자발적 이니셔티브이기 때문에, 스위스 정부는 은행, 자산운용사, 투자기업들이 상품에 점수를 올바르게 적용했는지에 대해 입증할 계획이 없음. (관련 문서)
- 스위스 정부는 2023 년 말까지 위 점수 기준과 참여한 금융시장 구성원의 비율 등 위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에 대해 분석할 계획임.

05. 미국 스티브 데인스 상원의원, 퇴직연금에서 ESG 요소를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스티브 데인스 상원의원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사용자가 투자 결정에 있어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기타 ESG 관련 고려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는 권한을 축소하고, 트럼프 정부 당시의 노동부의 규칙을 복구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위 법안(S 4484)은, 미국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관리인이 오직 금전적인 요소에 기반하여 투자처를 선택하고 유지할 신인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함.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은 광범위한 퇴직연금과 의료보험을 규율하는 법임.
- 공화당 소속 스티브 데인스 상원의원은 7 월 11 일 성명서를 통해, 위 법안은 ERISA 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변경을 성문화하는 효과를 자아낼 것이라고 밝혔음.
- 바이든 행정부 산하의 노동부와 투자 자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ERISA 에 대한 변경이 ESG 투자처에 투자하도록 지시하는 데 "찬물을 끼얹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해왔음.
- 노동부는 위 변경을 되돌리고 연금플랜 자문사들이 퇴직연금과 401(k) 등 디폴트 투자 플랜의 리스크-수익 분석에 있어 기후변화와 이사회 다양성, 임원 보수, 인력관리 실무 등 기타 ESG 요소의 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안을 완성하는 단계에 있음.
-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위 법안을 통해 이번 9 월 미국에서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한다면 어떤 법안들이 통과될 지에 대해 추정할 수 있음.

06. 글래스루이스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기후변화 관련 규칙은 펀드와 자문사들이 "상당한" 업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변화 관련 규칙으로 인해 펀드와 자문사들이 이들의 ESG 전략에 대해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양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글래스루이스는 SEC 의 기후변화 공시 규칙이 현 상태로 채택되는 경우, 기업들은 필요한 준법 절차에 순응하기 위해 상당한 업무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 글래스루이스는 ESG 투자의 성장으로 인하여 규제기관의 조사가 활발해졌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그린워싱"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음. "그린워싱"이란 ESG 관련 자격에 대해 과장하여 알리는 것을 말함.
- SEC 는 ESG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뮤추얼펀드와 상장지수펀드가 투자자들에게 해당 펀드들이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는지,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어떤 기준과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칙안에 대해 표결했음.
- SEC 는 팩트시트를 통해, ESG 에 대한 정의가 펀드와 자문사들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시 규칙이 없다면 투자자들이 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음. 또한 SEC 는 지난 5 월 ESG 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리는 이름을 사용하는 투자펀드와 자문사들에게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새로운 규칙안도 발표했음.

07.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 미국 규제기관에 웰스파고의 인종문제 관련 스캔들과 기타 사안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구함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의장은 연방 은행과 주택기관들에 미국 은행 웰스파고(Wells Fargo)의 모기지 리파이낸싱 운영에 인종 격차가 있다는 주장을 살펴볼 것을 요청했습니다:

- 맥신 워터스 의장은 6 월 29 일자 서신을 통해 “2020 년 웰스파고에 리파이낸싱 신청서를 제출한 흑인 주택 보유자 중 47%만이 승인을 받은 반면, 백인 주택 보유자의 경우 72%가 승인을 받았다.”는 블룸버그 뉴스의 최근 보도와, 웰스파고가 여성과 유색인 지원자들과 “가짜” 면접을 봄으로써 웰스파고의 다양성, 평등, 포용 관련 데이터를 과장하고자 했다는 뉴욕타임즈 보도를 언급했음.
- 워터스 의장은 웰스파고가 고객 승인 없이 유령계좌를 개설한 사건과 관련하여 과거 미국 의회 및 규제기관과 충돌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웰스파고는 “습관적으로 소비자 우롱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관련 기관들에 웰스파고를 엄벌에 처할 것을 요청했음. 워터스 의장은, 웰스파고가 미국 공평주거권리법(Fair Housing Act)과 신용기회평등법(Equal Credit Opportunity) 상의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을 수 있다고 말했음.
- 웰스파고의 대변인은 웰스파고가 워터스 의장의 서신에 실망했다고 밝히며, 해당 서신이 “수 년 전 사임한 웰스파고 경영진의 산하에서 발생했던 과거의 문제를 다시 지적하고, 사실과는 다른 최근 뉴스 보도의 입증된 바 없는 혐의를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음. 웰스파고 측은 “새로운 경영진이 온 지금 웰스파고는 수 년 전과 완전히 다른 은행”이라고 말하며, 웰스파고가 유색인 커뮤니티와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음.
- 웰스파고는 자산규모 1 조 9,400 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은행임. 최근 몇 년간 웰스파고는 일련의 법/규제 관련 어려움을 겪었음. 2016 년 웰스파고는 고객 명의로 수백만 개의 유령계좌를 개설했고, 위 사건으로 인해 차례대로 2 명의 CEO 가 사임했음. 위 사건은 웰스파고가 직원들에게 고객들의 필요와 상관없이 많은 양의 상품을 판매하도록 압박하여 발생한 것으로, 2020 년 웰스파고는 동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30 억 달러 규모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와 합의했음.

글로벌 ESG 공시 동향 -美 SEC 기후공시안의 주요내용

법무법인(유한) 광장

이경훈, 설동근, 민세동, 김수연

2022. 8. 10

Lee & KO
법무법인(유) 광장

글로벌 ESG 공시 동향 -美 SEC 기후공시안의 주요내용

“향후 SEC 가 일부 공시항목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SEC 규칙안은 그간 기업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라고 요구했던 원칙적 규제방식을 버리고 구체적인 기후공시 항목을 제시하는 규범적 접근방식을 택하며 기후위기가 기업이 당면한(할) 실질적이고 중대한 위험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ESG 공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만큼 2~3 년 내 국내기업은 CFO 책임 하에 기업의 기후 위험·기회 관리 역량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공시 규제를 적용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기업들은 사전에 SEC 가 제안한 기후공시 규칙안을 참조하여 TCFD 에 따라 기업의 기후대응 체계와 목표를 점검하고, 자회사나 주요 협력사의 기후 리스크까지 고려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 · · 美 SEC 기후공시안의 주요내용

I. 들어가며

최근 ESG 공시와 관련해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EU 는 2021 년 4 월 기존 NFRD(비재무정보 공시지침, Non – 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을 개정한 CSRD(기업지속가능성정보 공시지침,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을 발표하며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ESG 공시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¹, 2021 년 11 월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 재단도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를 설립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단일한 ESG 공시기준 마련에 분주하다.² 이러한 상황에서 2022 년 3 월 미국 SEC 는 지속가능성 이슈 중 최우선 과제로 거론되는 기후(Climate)와 관련한 공시 규칙안을 발표했다. 올해 안으로 기후공시 규칙 제정을 목표로 하는 만큼 SEC 규칙안은 EU 의 CSRD 이나 ISSB 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에 비해 상세하고 시행 예상일도 빨라 국내기업이 기후공시를 준비하고 대응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본 보고서는 미국 SEC 의 기후공시 규칙안 (Regulation S-K, Regulation S-X)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현행 국내 환경공시 체계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국내 환경 공시 전개 방향을 예상해보고자 한다.

II. 美 SEC 의 기후공시안

2022 년 3 월 21 일 미국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3 : 1 의 찬성으로 등록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s, Forms S-1, S-3, F-1, F-3) 및 정기 공시(periodic reports, Forms 10-K, 10-Q, 20-F) 항목 등에 기후 관련 리스크 항목을 포함시키는 공시 규칙 개정안(Regulation S-K,

¹ 김수연, EU 의 ESG 규제 주요 내용: Taxonomy, NFRD, CSRD 를 중심으로, BFL 제 109 호(2021. 9.),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² IFRS, ISSB delivers proposals that create comprehensive global baseine of sustainability disclosures(2022. 3. 31.).

Regulation S-X)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현행 국내 환경공시 체계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국내 환경 공시 전개 방향을 예상해보고자 한다.

II. 美 SEC 의 기후공시안

2022 년 3 월 21 일 미국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3 : 1 의 찬성으로 등록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s, Forms S-1, S-3, F-1, F-3) 및 정기 공시(periodic reports, Forms 10-K, 10-Q, 20-F) 항목 등에 기후 관련 리스크 항목을 포함시키는 공시 규칙 개정안(Regulation S-K, Regulation S-X)을 제안했다.³ 상당 기간 논의되었던 이번 공시 개정안은 기존 중요성을 바탕으로 원칙적 접근을 했던 체계를 탈피,⁴ 상장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롯해 기후위기로 인한 사업상 중요 영향 등을 포함한 정보, 재무제표 주석상 기후 관련 재무제표 매트릭스 및 관련 검증(attestation)에 대해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SEC 의장 게리 겐슬러는 “이번 공시 개정안이 기후위기로 초래될 수 있는 기업들의 재무적 위험에 대해 투자자에게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에 반대하는 SEC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는 “우리는 아직까지 증권·환경 위원회가 아니다(We are Not the Securities and Environment Commission - At Least Not Yet)⁵”라는 입장문을 통해 강한 거부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다. SEC 는 6 월 17 일까지 공시규칙 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22 년 말까지 규칙 개정안 확정을 목표로 현재 논의 중에 있다. 기후위기가 업종 구분 없이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라는 전제 하에서 마련된 SEC 기후공시 규칙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내용

1) 비재무정보 공시(Regulation S-K, Non-Financial Statement Disclosures)

³ SEC Press Release(2022. 3. 21.), SEC Proposes Rules to Enhance and Standardize Climate-Related Disclosures for Investors. SEC 는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의무를 규율하는 1933 년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 및 유통시장 단계에서의 공시의무를 규정하는 1934 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상의 공시사항을 통합하여 재무제표 관련 사항은 Regulation S-X, 비재무정보 관련 사항은 Regulation S-K 를 통해 규율하고 있다.

⁴ 기존 SEC 는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공시 목적이 환경 보호가 아닌 투자자 보호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기후 공시와 관련해 1934 년 증권거래법 규칙 12b-20 조에 따라 중요성(Materiality)을 기준으로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즉 SEC 는 기업이 부담하는 중요 환경 책임에 대해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상 사업설명(item 101), 경영진단·분석(MD&A, item 303), 리스크 요소(item 503(c)) 등 항목에 기재하도록 하고, 해당 중요한 (환경) 정보에 대한 허위 기재시 반사기 조항(1934 년 증권거래법 10(b), Rule 10b-5) 등이 적용된다. 한편 SEC 는 중요한 환경정보 개념이 모호하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2010 년 기후변화 관련 공시 해석 가이드라인(Commission Guidance Regarding Disclosure Related to Climate Change, release Nos. 33-9106; 34-61469; FR-82), 2021 년 기후변화 공시 관련 표본 서신(Sample Letter to Companies Regarding Climate Change Disclosures)을 통해 환경 규제 준수 비용, 기후 관련 소송, 탄소배출권 관련 사항 등을 제시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율적 판단을 전제로 한 안내에 불과하다. Hana V. Vizcarra, “Climate-Related Disclosure in the Oil & Gas Industry: Will State Attorneys General Investigations Impede the Drive for More Expansive Disclosures?”, Vermont Law Review Vol.43 Rev.733(2018), p.747~749; Roshaan Wasim, “Corporate (non) disclosure of climate change information”, COLUMBIA LAW REVIEW Vol.119 Rev.1311(2019), p.1322~1325.

⁵ SEC Statement(2022. 3. 21.), We are Not the Securities and Environment Commission - At Least Not Yet.

SEC 는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⁶와 GHG 프로토콜⁷에 따라 Regulation S-K 의 하위 파트인 1500 이하 항목을 신설해 기후공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제안된 SEC 기후공시 규칙은 등록신고서와 정기 공시에 적용된다.⁸

① 1501 항목: 기후 관련 지배구조

1501 항목은 기업으로 하여금 기후 관련 리스크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뿐만 아니라 해당 리스크를 관리·평가하는 임원진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본 규칙안에 따르면 먼저 이사회 감독과 관련해 기업은 기후 관련 위험 감독 책임을 이사회 이사 혹은 이사회내 위원회에 할당하고, 이사회 혹은 이사회내 위원회가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와 빈도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 위원회가 사업 전략, 위험 관리, 재무 감독의 일부로서 기후 관련 위험을 고려하는지 여부 및 그 방법 외에도 이사회가 기후 관련 목표를 설정하는지 여부 및 그 방법과 함께 기후 관련 중간 목표 설정을 포함해 그러한 목표진행에 대해 어떻게 감독하고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

한편 임원진의 기후 위험 감독·관리와 관련해 규칙안은 기업에게 기후 관련 위험 평가·관리 책임을 특정 임원 혹은 위원회에 할당하고, 담당 임원 내지 관리 위원회가 기후 관련 위험을 모니터링 및 보고받는 절차를 비롯해 이사회 혹은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에 대한 기후 관련 위험 보고 절차(빈도 포함)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② 1502 항목: 사업 및 일반적인 환경 관점에서 기후 관련 활동 영향

SEC 규칙안은 기업에게 사업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기후 관련 기회 혹은 위험에 대해 규명하고 해당 리스크가 단·중·장기에 걸쳐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Item 1502(a)). 기업은 투자자가 기업이 당면하게 되는 기후 관련 위험의 성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위험을 물리적 위험(Physical Risk)⁹ 혹은 전환 위험(Transition Risk)¹⁰으로 식별해야 하며, 파악된 물리적·전환 위험이 전략, 사업 모델 및 전망에 미치는 실질적·잠재적 영향을 설명해야 한다(Item 1502(b)). 이때 실질적·잠재적 영향은 기업의 사업 운영뿐만 아니라 사업활동 유형과 장소, 제품 또는 서비스, 가치사슬내 공급업체 및 기타 당사자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며, 각 영향이 미치는 예상 기간(단·중·장기)도 공시해야 한다.

기업은 이러한 영향이 사업 전략, 재무 계획 및 자본 할당에 있어 고려되는지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여기에 기후 관련 사업 전략과 관련해 탄소 상쇄 혹은 재생에너지 크레딧(RECs)이 수행하는 역할이 포함되어야 한다(Item 1502(c)). 또한 기업은 기후 관련 위험이 연결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공시하고, 이때 과거 기업의 재정 상태와 운영에 영향을

⁶ TCFD 는 G20 의 요청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공개를 위해 '15 년 설립한 글로벌 협의체, 2017 년 TCFD 권고안을 발표해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정보 공시 토대 마련.

<https://www.fsb-tcdf.org/publications/#recommendations>

⁷ GHG Protocol Corporat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https://ghgprotocol.org/corporate-standard>

⁸ EC, Proposed rule:The Enhancement and Standardization of Climate-Related Disclosures for Investors, Release Nos.33-11042; 34-94478; File No.S7-10-22

⁹ 허리케인, 홍수, 태풍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극단적 기상이변으로 인한 위험인 급성 위험(Acute Risk)과 해수면 상승이나 지속적인 고온현상 등 장기적 기상이변으로 발생하는 만성 위험(Chronic Risk)을 의미.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2017. 6.)

¹⁰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수반되는 광범위한 정책, 법률, 기술 및 시장 변화로 발생하는 위험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2017. 6.)

주었던 기후 관련 요인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Regulation S-X 규칙 14-02 상의 재무제표 항목인 기후 관련 메트릭스를 반영해야 한다(Item 1502(d)). 한편 내부탄소가격을 채택한 기업의 경우 이산화탄소 미터톤당 기준가격, 총가격(시간에 따른 변동을 반영한 총가격 추정치 포함), 내부 탄소 가격제를 선택한 논리적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Item 1502(e)). 뿐만 아니라 기업은 기후 관련 위험의 향후 잠재적 변화에 비추어 사업 전략의 탄력성을 설명하고, 시나리오 분석과 같은 분석 도구를 사용해 사업과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기후 위험 영향(예: 2°C 상승 대비 3°C 상승이 사업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Item 1502(f)).

③ 1503 항목: 기후 관련 활동에 대한 위험 관리

1503 항목은 앞서 규정된 위험 공시를 기반으로, 기업에게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식별·평가·관리하는 절차를 포함해 기후 관련 활동에 대한 위험관리 전략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다른 위험과 비교해 기후 관련 위험의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하는 방법, 기후 관련 위험 식별함에 있어 기존 또는 적용 가능성 있는 규제·정책을 고려하는 방법, 식별된 기후 관련 위험의 잠재적 규모·범위 평가를 포함해 기후 관련 위험의 중요성(materiality)을 결정하는 방법, 특정 위험에 대한 완화·수용·적응 여부 결정 방법과 함께 각각의 방법·절차가 기업 전체 위험 관리 시스템에 어떻게 통합되고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Item 1503(a)(b)). 만약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 관리 전략으로 전환 계획¹¹을 채택했다면, 물리적·전환 위험 식별·관리에 사용될 관련 메트릭스와 목표를 포함해 관련 계획을 설명하고, 매년 업데이트 해야 한다(Item 1503(c)).

④ 1504 항목: 온실가스 배출 메트릭스

SEC 규칙안은 기업으로 하여금 조직적·운영적 경계(organizational and operational boundaries)를 포함해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Scope 1¹²과 Scope 2¹³ 총배출량을 각각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규칙안은 GHG 프로토콜을 기초로 마련되었지만 투자자 혼동을 피하기 위해 '조직적·운영적 경계' 개념은 GHG 프로토콜이 아닌 기존 미국 GAAP 기준에 따라 규정하면서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모든 배출량과 피투자기업 지분에 비례한 탄소 배출량을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SEC 은 중요하거나(material) 기업이 Scope 3¹⁴까지 포함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한 경우에 한해 Scope 3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단 소규모 공시 기업(smaller reporting company)¹⁵은 제외). 규칙안은 Scope 3 배출량 공시가 기업들이 탄소 고배출 사업활동을 아웃소싱해 총 Scope 1-2 배출량을 감소시키려는 그린 워싱 (greenwashing)을 예방하고, 투자자에게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전반적인 기후 관련 위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다. 한편 규칙안은 중요성(material)에 대해 구체적인 정의를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규칙 제안서를 통해 전통적인 중요성 정의를 잠재적으로 확장시키는 서술적

¹¹ 기후 관련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전략 및 시행 계획

¹² 화석연료 연소나 가스 사용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온실가스(GHG) 배출

¹³ 구입한 전기, 열, 증기 소비로 인한 간접적인 온실가스(GHG) 배출

¹⁴ 기업의 가치 사슬에서 발생하지만 Scope 2 에 산입되지 않은 기타 간접 배출(예: 임직원 해외 출장시 비행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협력업체 배출)로 해당 기업 활동 결과로 발생하지만 기업이 소유·지배하지 않는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GHG) 배출.

¹⁵ ① 유통주식이 2.5 억 달러 미만이거나 ② 연매출이 1 억 달러 미만인면서 유통주식이 없거나 혹은 7 억 달러 미만의 유통주식을 보유한 기업, SEC 홈페이지 참조.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다. 즉 규칙 제안서는 Scope 3 배출량의 중요성 판단 기준을 SEC 규칙상 중요성 정의¹⁶ 및 대법원 판례¹⁷에 따라 합리적인 투자자가 투자 결정을 내리거나 의결권 행사할 때 고려할 것이라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설명하면서, 총 GHG 배출량 가운데 Scope 3 비중이 40% 이상인 경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기업 사례 소개를 통해 중요성이 재무적 기준에 명확하게 연동되기보다 전통적인 개념인 양적 요인에 의해 평가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SEC 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업스트림¹⁸, 다운스트림¹⁹ 활동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없이, 기업에게 Scope 3 배출량 공시시 포함된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활동 범위 및 산정에 사용되는 데이터 소스를 식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규칙안은 기업에게 GHG 프로토콜에 따라 CO2e(carbon dioxide equivalent)²⁰를 측정 단위로 하여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3)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이때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3)은 탄소 상쇄 영향을 배제한 수치로, 탄소 상쇄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후 관련 공시 항목에 기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Scope 1-2 총배출량에 대한 집약도(intensity)²¹ 및 별도 Scope 3 배출량 집약도(기업이 Scope 3 배출량을 공개하는 경우로 한정)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론도 공시해야 한다. 또한 SEC 는 제 3 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산출되는 Scope 3 배출량 공시의 한계를 고려해 기업이 합리적인 근거(reasonable basis) 혹은 선의(good faith)에 따라 공시할 경우 허위 내지 오류가 있더라도 사기 진술(fraudulent statement)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Safe Harbor(안전조항)을 마련하였다.

⑤ 1505 항목: Scope 1 및 Scope 2 배출 공시 검증

또한 규칙안은 기업에게 Scope 1-2 배출량에 대한 검증 보고서(attestation report) 제출을 강제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관련 가이던스를 제시했던 기존 TCFD, GHG 프로토콜이 검증을 의무화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 상당히 강화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SEC 는 검증 보고서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표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측정·분석·공시·검증한 경험이 풍부하면서 공시 대상 기업 및 관계사로부터 독립적인 온실가스 배출 전문 기관에 의해 작성·서명될 것을 요구한다.²²

한편 SEC 는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및 검증과 관련해 기업이 관련 체계, 절차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모에 따른 단계적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2022 년 12 월 SEC 규칙이 채택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및 검증 규정 준수 시점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SEC 기후 공시안(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및 검증 관련) 적용 일정

¹⁶ 17 CFR 240.12b-2 Material. The term "material," when used to qualify a requirement for the furnishing of information as to any subject, limits the information required to those matters to which there is a substantial likelihood that a reasonable investor would attach importance in determining whether to buy or sell the securities registered.

¹⁷ Basic Inc. v. Levinson, 485 U.S. 224, 231, 232, 240(1988), TSC Industries, Inc. v. Northway, Inc., 426 U.S. 438, 449 (1977).

¹⁸ 업스트림 활동은 원부자재 및 서비스 구매, 원부자재 운송 및 유통, 사업장 발생 폐기물 처리, 출장, 임직원 통근, 임대자산 등 원료·재료부터 완성품까지, 제조과정 전반을 의미

¹⁹ 다운스트림 활동은 제품 제조 이후 활동으로 유통·운송, 소비자 사용, 폐기 및 투자를 의미

²⁰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²¹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총 매출액 또는 총 생산량으로 나눈 값으로 경제적 가치 내지 생산 단위당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

²² 즉 회계법인에 의한 검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FY2023 (2024 년 제출공시)	FY2024 (2025 년 제출공시)	FY2025 (2026 년 제출공시)	FY2026 (2027 년 제출공시)	FY2027 (2028 년 제출공시)
Large Accelerated Filer ²³	Scope 1&2 →	+ 제한적 검증 ²⁴		++ 합리적 검증 ²⁵	
		Scope 3 →			
Accelerated Filer ²⁶		Scope 1&2 →	+ 제한적 검증		++ 합리적 검증
			Scope 3 →		
Non-Accelerated Filer		Scope 1&2 →			
			Scope 3 →		
Small Reporting Company			Scope 1&2 →		

2) 재무제표 공시(Regulation S-X, Financial Statement Disclosures)

SEC 는 기후 공시 도입을 위해 앞서 설명한 Regulation S-K 상의 1500 항목 이하 규칙과 함께 Regulation S-X 에 제 14 조 신설을 제안했다. 1933 년 증권법(Securities Act)과 1934 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에 따라 등록신고서, 정기 보고서 등에 포함되는 재무제표 항목을 규정하는 Regulation S-X 개정만큼 이번 14 조에 신설되는 사항은 독립된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ICFR(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재무보고 내부통제) 범위 내에 포함되게 된다. 해당 조항은 기업이 미국 GAAP 혹은 IFRS 어느 회계기준에 입각하든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중간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제안된 Regulation S-X 제 14 조는 TCFD 상의 개념 특히 기후 관련 위험(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을 구분하는 잠재적 부정적 효과)과

²³ 2 분기 마지막일 기준으로 유동주식(public float) 시가총액이 7 억 달러 미만인 기업. 특정년도에 Large accelerated filer 가 되면, 유동주식 시가총액이 5.6 억 달러 미만이 되기 전까지 해당 지위가 유지(5.6 억 달러 미만에서 60 백만 달러 이상이 될 경우 Accelerated File, 60 백만 달러 미만이 될 경우 Non-Accelerated Filer) SEC, Accelerated Filer and Large Accelerated Filer Definitions(2020. 4. 23.)

²⁴ Limited assurance, 분기보고서(10-Q) 등 중간재무제표 검토(review)에 준한 수준으로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정도의 인증을 의미.

²⁵ Reasonable assurance, 연차보고서(10-K) 등 연결재무제표 감사(audit)에 준한 수준의 인증으로 Limited assurance 보다 강화된, 긍정적 의사 표시 형태의 인증을 의미.

²⁶ 2 분기 마지막일 기준으로 유동주식(public float) 시가총액이 7 억 달러 미만 75 백만 달러 이상인 기업, 특정년도에 accelerated filer 가 되면, 유동주식 시가총액이 60 백만 달러 미만이 되기 전까지 해당 지위가 유지(60 백만 달러 미만일 경우 Non-Accelerated Filer), SEC, Accelerated Filer and Large Accelerated Filer Definitions(2020.4.23.)

기회(잠재적 긍정적 효과) 정의를 차용하는 등 재무제표 이외 사항에 대한 공시 항목을 규율하는 Regulation S-K 1500 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²⁷ 현행 재무제표 보고와는 달리 상황 정보²⁸, 가정 및 판단에 기반한 추정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① 재무영향 지표와 지출 지표

규칙안은 정량적 공시를 위해 지표(Metrics)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재무 영향 지표(Financial Impact Metrics)와 지출 지표(Expenditure Metrics) 각각에 대해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2> SEC 기후 공시안의 재무제표 신설 지표

재무 영향 지표	물리적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수, 가뭄, 산불, 해수면 상승, 극한 기온과 같은 심각한 날씨 및 기타 자연 조건의 해당년도 영향 ■ 열거된 항목 외에 전략, 사업 모델 및 전망에 대한 공시(Regulation S-K Item 1502(a))에서 식별되는 물리적 위험 영향을 포함
	전환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전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전환 활동의 해당년도 영향
지출 지표	완화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수, 가뭄, 산불, 해수면 상승, 극한 기온과 같은 심각한 날씨 및 기타 자연 조건으로부터 초래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해당년도 지출 ■ 지출은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과 당기 자본화된 금액을 포함
	전환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전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지출

SEC 는 기업들이 각각의 재무 영향 지표에 대해 최소한 모든 부정적 영향 총합과 모든 긍정적 영향 총합으로 구분해 제시하되,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 합이 1% 미만일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또한 지출 지표 역시 지출된 금액 총합과 자본화된 비용 총합 각각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면서도 만약 지출된 기후 관련 금액이 당해연도 총지출액의 1% 미만이거나, 자본화된 기후 관련 금액이 자본화된 총지출액의 1% 미만일 경우 공시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규칙안은 재무 지표가 재무제표와 일관되게 공시될 수 있도록 재무제표에 적용되는 동일한 회계원칙을 적용하고 동일한 기업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것을 강제하면서, 각각의 지표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상황적·맥락적 정보까지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재무적 추정·가정 영향 및 기회 영향

더 나아가 규칙안은 기업에게 기후 관련 위험이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추정(estimates)과 가정(assumptions)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질적 정보(예를 들면 손상 테스트, 상품 가격 가정 등)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²⁷ SEC, Proposed rule: The Enhancement and Standardization of Climate-Related Disclosures for Investors, Release Nos. 33-11042; 34-94478; File No.S7-10-22.

²⁸ 중요한 의견·가정, 경우에 따라 기업이 특정 지표를 계산하기 위한 마련한 정책 결정 포함. White & Case, SEC Proposes Long-Awaited Climate Change Disclosure Rules(2022. 3. 22.)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선택적 공시항목인 기회(opportunities) 정보와 관련하여 이번 기후공시안 역시 기후 관련 기회 보다는 기후 리스크에 방점을 두고 마련되었지만, 만약 기업이 기후 관련 기회를 공시할 경우 반드시 매년 일관성 있게 관련 항목과 기회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3) 위반시 제재

기업들이 이번 개정안에 따라 비재무정보 및 재무제표에 공시하도록 규정된 기후 관련 리스크 항목을 허위 기재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할 경우 기존 공시 관련 처벌규정이 적용된다. 즉 SEC 에 제출하는 자료상 거짓이 있을 경우 1933 년 증권법 제 11 조, 1934 년 증권거래법 제 18 조, 1934 년 증권거래법 제 10 조(b) 및 규칙 10b-5 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²⁹ 사안에 따라 1933 년 증권법 제 24 조, 1934 년 증권거래법 제 32 조에 따라 금고·벌금과 같은 형사처벌³⁰ 및 정지명령 등 행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2. SEC 기후공시 규칙안 관련 논쟁

2022 년 3 월 SEC 는 규칙안을 제안하면서 “투자자가 현재 및 잠재적 투자 판단시 기후 관련 위험 영향 정보에 입각해 판단할 수 있도록 기후 관련 위험 영향에 대한 일관성 있고 비교 가능하며 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SEC 가 기존 원칙중심의 규제방식을 크게 바꾸어 Scope 3 공시 및 온실가스 배출 검증, 기후 위험 관련 재무제표상의 재무 지표 등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며 공시를 강제하고 있는 만큼 BRT³¹ 등 기업단체뿐 아니라 학계, 전문가 사이에서도 찬반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기후공시 규칙안에 표명되고 있는 우려사항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³²

먼저 SEC 가 기후 관련 지표, Scope 3 배출량과 같이 상세하고 광범위한 정보 공개를 강제하는 규칙을 제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다. 의회가 1933 년 증권법 7(a)조, 1934 년 증권거래법 12(b)조를 통해 SEC 에게 “투자자 보호 또는 공익(public interest)³³을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경우에 한해” 공시를 강제하는 규칙 제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SEC 는 오직 회사의 재무적 수익 전망에 중요한 정보만 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해당 주장은 기후 관련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기후공시 규칙안의 경우 SEC 규칙이 아닌 미국 의회를 통해 명시적인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상장기업에 환경 영향 공시를 강제하는 것은 수정헌법 1 조가 금지한 강요된 발언에 해당해 위헌이라는 의견,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과 같은 경제적 분석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기후공시 규칙안이 SEC

²⁹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집단소송과 결합한 민사 손해배상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 민사책임을 통한 제재가 활성화되어 있다. 김건식/송옥렬, 『미국의 증권규제』, 홍문각, 2001

³⁰ 1933 년 증권법 제 24 조에 따르면 5 년 이하의 금고, 1 만 달러 이하의 벌금, 1934 년 증권거래법 제 32 조에 따르면 20 년 이하의 금고, 5 백 만 달러 이하(법인일 경우 25 백 만 달러)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³¹ 공개 의견 수렴 기간 BRT 가 SEC 에 보낸 의견서

³² Jacqueline M. Vallette, Kathryn M. Gray, SEC’s Climate Risk Disclosure Proposal Likely to Face Legal Challenge(2022. 5. 10.),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³³ 미국 의회는 공익상 필요성 내지 적절성 판단과 관련해 SEC 에게 투자자 보호와 더불어 효율성, 경쟁 및 자본 형성 촉진 여부를 고려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15 U.S. Code §77b(b).

권한 내에서 제정된 규칙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개진되고 있어³⁴ 앞으로 SEC 가 수정안을 내놓을지, 아니면 그대로 기후공시 규칙을 도입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Ⅲ. 국내 환경정보 공시 현황

1. 국내 현황 개관

현재 우리나라는 사업보고서 또는 거래소 자율공시를 통해 특정 환경정보에 대한 공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을 뿐,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환경공시 규제는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2019 년 금융위원회가 업무계획에서 비재무적(ESG) 정보의 공시 확대 추진을 선언하고,³⁵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역시 2019 년 주요 사업계획을 통해 상장법인의 환경·사회(E-S) 책임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를 발표한 이후,³⁶ 2021 년 1 월 한국거래소가 자발적으로 ESG 정보를 공개하려는 기업을 돕기 위해 'ESG 정보공개 가이드스'를 마련했을 뿐이다. 현재 국내 환경공시는 2021 년 1 월 금융위원회가 2025 년부터 단계적으로 환경정보를 포함해 ESG 공시를 의무화 하겠다고 선언한데 이어,^{37, 38} 2022 년 초부터 ESG 공시의 글로벌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인 IFRS(국제회계기준) 산하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제시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발맞춰 도입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³⁹

다만 우리나라는 환경부 주도로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체계가 구축되어 가고 있는데, 2021 년 4 월 환경투자 지원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 제 16 조의 8 를 개정(2021 년 10 월 시행)해 기존 녹색기업,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업체 및 공공기관 등에 요구하던 환경정보를 연결기준 자산총액 2 조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했다. 본래 「[환경기술산업법](#)」 상의 환경정보 공개는 녹색기업,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업체 등에 대한 자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환경 피해를 예방·감소시키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기에, 투자자에게 재무적 영향과 관련한 기후 리스크(혹은 기회) 정보 제공에 초점을 둔 SEC 기후공시 규칙안과 동일한

³⁴ John C.Coates, Proposal on Climate-Related Disclosures Falls Within the SEC's Authority(2022. 6. 22.),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Jill E.Fisch, The SEC's Authority to Pursue Climate-Related Disclosure(2022. 6. 20.),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³⁵ 금융위원회, 2019 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2019. 3. 7.).

³⁶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2019 년 주요사업계획(2019. 1. 24.) 2019 년 4 월 거래소가 '환경·사회(E-S) 정보 공개 확대 방안 검토' 연구용역을 제안하며 관련 제도 도입에 착수했다는 내용이 기사화되기도 했다. 거래소, '환경·사회책임 공시 의무화' 도입 착수(2019. 4. 23.), 한국경제.

³⁷ 금융위원회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2021 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을 통해 환경정보 공시 단계적 의무화 계획을 발표했다. 2025~2030 년까지 자산 2 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공시를 강제하고, 2030 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기후 리스크 공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녹색금융 추진 TF, 2021 년 녹색금융추진계획(안) 보도자료(2021. 1. 25.).

³⁸ 한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2025 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자산 2 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공시를 의무화 하고 2030 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강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2021. 1. 14.)

³⁹ 2022 년 5 월 금융위원회는 IFRS 재단 산하 ISSB 가 제시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exposure draft)에 대해 공개 의견수렴 실시하였다.

규제 선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환경부가 2021 년 제도 목적에 '금융기관에 검증된 환경정보제공을 통한 녹색투자기여'를 추가한데다⁴⁰, 2025 년 자산총액 5000 억원 이상 상장사, 2030 년 모든 상장사에 대해 환경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⁴¹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한정해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는(Mandatory Reporting of Greenhouse Gases Rule) 미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환경보호청)와 달리 환경부는 녹색경영체계 구축, 환경오염물질 관리 현황 등 폭넓은 환경정보 공개를 강제하고 있어 사업보고서 또는 거래소 공시와 같이 투자자가 투자 판단시 환경과 관련해 기업 정보를 얻는 채널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⁴²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 SEC 기후공시 규칙안과의 비교·분석을 위해 현행 사업보고서 및 거래소 자율공시를 통한 환경정보 공시와 함께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사업보고서 및 거래소 자율공시

먼저 금융위원회는 녹색기술사업 관련 기업, 관리업체 등에 한정하여 사업보고서에 특정 환경정보 공시를 강제하고 있다(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4-3 조).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관리업체⁴³의 경우 관리업체로 지정·취소된 사실 및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기재해야 하며, 일반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되었거나, 녹색기술·녹색산업 관련 인증을 받았다면 해당 사실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만약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환경 정보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보가 중요사항이라는 전제 하에 5 년 이하 징역 또는 2 억 원 이하 벌금, 과징금(직전 사업연도 주식 일일평균 거래금액의 10% 이하) 등 제재가 가능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29 조, 제 444 조](#)).⁴⁴

또한 한국거래소는 자율 공시 차원에서 기업들이 녹색경영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기업이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녹색기술·녹색사업 관련 인증 및 인증취소, 녹색전문기업 확인 및 확인취소, 관리업체 지정·취소 및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개선명령, 시정·보완명령, 과태료 부과 등 조치, 녹색기업 지정·취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관련 사항, 온실가스 배출권 취득 또는 처분 관련 사항에 대한 공시가 가능하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 28 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 8 조,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 26 조,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 13 조). 이처럼 현행 거래소 공시규정상 녹색경영정보는 공개 여부가 기업 선택에 맡겨져 있어 공시하지 않더라도 처벌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자율공시 사항이라도 일단 공시하게 되면 의무공시에 준해 관리를

⁴⁰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1 환경정보 공개보고서(2019 년 환경정보 기준); 환경정보공개시스템 제도개요

⁴¹ 내년부터 자산 2 조원 이상 상장사 '환경 정보' 공개한다(2021. 5. 24.), 머니투데이.

⁴² 국내 대표적인 ESG 평가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경우 환경정보 공개제도에서 공개되는 정보를 이용해 기업들의 E(환경)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⁴³ 최근 3 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5 만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업체이거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 만 5 천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

⁴⁴ 또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공시관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2 조](#)).

받게 되므로 ⁴⁵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관련사항 등 녹색경영정보를 거짓으로 공시할 경우 공시불이행으로 간주되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은 사건 경중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사실 공표, 벌점부과(벌점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가능), 공시위반제재금, 공시담당자 교육·교체 요구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3. 환경정보 공개제도

2011 년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환경정보 공개제도는 녹색기업 등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국민의 환경정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제 16 조의 8). 이후 녹색성장 이슈가 크게 부상하면서 2021 년 「환경기술산업법」은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 지원·활성화를 위한 녹색분류체계 수립(K-Taxonomy) 등 근거 규정 도입과 함께 환경정보 공개 대상을 기존 녹색기업,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관리업체, 배출권할당 대상업체)에서 연결기준 자산총액 2 조원 이상 기업 ⁴⁶ 까지 확대하였다.

적용대상 기업이 공개해야 하는 환경정보는 환경관리(환경보호, 자원절약,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 목표 및 주요활동 계획, 환경관리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활용 사항, 환경관리 성과, 녹색경영, 사회적 책임 및 이해관계자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항목은 환경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 기타 서비스, 기타 산업으로 구분해 공시항목(의무/자율, 19~27 개)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별표 2) 제출한 환경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서류평가 및 현장확인 등 검증과정을 거친 후 매년 12 월 말에 공개되며, 만약 환경정보 공개대상임에도 공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환경정보 수정요청에 불응할 경우 300 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환경기술산업법 제 37 조).

<표 3> 분야별 환경정보 공개 항목(제조- 기타서비스- 기타산업)

대분류	구분	공개항목	업종별		
			제조	기타 서비스	기타 산업
기업개요	사업현황	1. 업종, 생산제품, 매출액, 생산량, 종업원수, 국내외 사업장 현황, 녹색경영 담당자	-의무	-의무	-의무
	환경관련 수상 및 협약 현황	2. 녹색기업, 환경경영대상, 폐기물감축 자발적협약, 녹색구매 자발적협약 등	-자율	-자율	-자율
전략 및 녹색경영 시스템	녹색경영 전략 및 방침	3. 녹색경영 추진을 위한 비전, 전략, 방침, 목표	-자율	-자율	-자율
	녹색경영 시스템 구축	4. 녹색경영 전담조직 및 업무·역할·권한 교육훈련, 환경·안전사고 대응체계, 내부심사 실시 및 조치	-의무	-의무	-의무

⁴⁵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 실무사례(2018. 9.), KRX 한국거래소 118 면.

⁴⁶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이 연결기준으로 2 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종속법인과 그 소속사업장이 공개 대상. 단 2022 년에는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를 위해 본사만 공개.

대분류	구분	공개항목	업종별		
			제조	기타 서비스	기타 산업
자원/에너지	원부자재, 용수, 에너지 관리현황	5. 원부자재·용수·에너지 절감 투자 및 기술도입 6. 원부자재 사용량·원단위 7. 용수 사용량·원단위·재활용량 8. 에너지 사용량·원단위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자율 -(없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신재생 에너지 관리현황	9. 신재생 에너지 투자 및 기술도입	-자율	-자율	-자율
온실가스/환경오염	온실가스 관리현황	10. 온실가스 저감 투자 및 기술도입 11. 온실가스 관리수준(인벤토리, 목표-계획-실적 관리 등) 및 배출량·원단위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환경오염 물질 관리현황	12. 환경오염물질저감 투자 및 기술도입 13. 대기·수질오염·화학물질관리시설 및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 14.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원단위 15.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원단위 16. 폐기물 발생량·원단위·재활용량 17. 화학물질 배출량·원단위 18. 토양·소음진동·악취 관리 현황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자율 -자율 -(없음) -자율 -의무 -자율 -(없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자율
녹색제품/서비스	녹색제품·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	19. 녹색제품·서비스개발 투자 및 기술도입 20. 녹색제품·서비스에 대한 친환경설계(에코디자인) 현황 21. 제3자 인증 및 Type II 인증 제품 현황 (건수, 매출액 등)	-자율 -자율 -자율	-(없음) -(없음) -(없음)	-자율 -자율 -자율
	녹색구매 및 기업간 협력현황	22. 녹색구매 지침 운영 현황 23. 협력업체 환경정보관리 및 환경성평가 24. 환경기술 및 교육지원 현황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없음) -(없음)	-자율 -자율 -자율
사회/윤리적 책임	환경법규 준수 현황	25. 환경오염물질·제품·서비스와 관련된 국내·외 환경법규 위반 현황	-의무	-의무	-의무
	환경정보 공개	26. 환경(지속가능) 보고서 발간 현황 27. 이해관계자 환경정보 요청 대응현황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III. 시사점

2021 년 5 월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에 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을 선포⁴⁷ 한 후 SEC 는 수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이번 기후공시 규칙안을 발표했다. 규칙안은 미국

⁴⁷ The White House Briefing Room, Executive Order on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2021. 5. 20.). Presidential Actions.

국내 상장기업뿐 아니라 포스코, 신한금융지주, LG 디스플레이, KT 등과 같은 외국국적 상장기업(Foreign Private Issuers) 공시에도 적용되기에 일부 국내기업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비록 앞서 언급했듯이 기후공시 규칙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향후 SEC가 일부 공시항목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설득력있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SEC 규칙안은 그간 기업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라고 요구했던 원칙적 규제방식을 버리고 구체적인 기후공시 항목을 제시하는 규범적 접근방식을 택하며 기후위기가 기업이 당면한(할) 실질적이고 중대한 위험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SEC 기후공시안은 기후 리스크 관리를 이사회뿐만 아니라 임원진의 중요 책임 사안으로 규정하고, 가치사슬내 협력업체까지 포함해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이를 사업전략, 재무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강조한다. 또한 연결 종속기업까지 포함해 Scope 1-2 배출량을 공시하고 이를 검증할 것을 요구하며, Scope 3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공개를 강제하고 있다. 이처럼 SEC 규칙안은 기후 리스크를 특정 산업에 한정된 사안이 아닌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위험요인으로 파악하면서, TCFD 권고안을 기초로 제 3자 검증 등 보다 강화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환경 공시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미국 SEC와 달리 기후(Climate)라는 특정 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IFRS의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제시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발맞춰 ESG 공시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⁴⁸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사업보고서 및 거래소 자율공시를 통해 일부 제한된 환경 정보를 공시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일반투자자에게 제공되는 환경공시 체계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2021년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이 환경부의 환경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되면서, 환경정보 공개제도가 투자자(금융기관)에게 기후를 포함 환경 관련 기업 정보를 취득하는 채널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경우 녹색경영전략 및 방침, 녹색경영 시스템 구축, 자원·에너지 관리현황,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물질 관리현황, 녹색제품·서비스 및 환경법규 준수 현황 등 기존 사업보고서나 거래소 자율공시에 비해 공개되는 정보 범위가 폭넓고, 연결기준에 따라 종속법인과 그 소속사업장까지 공개하도록 요구하는데다, 환경산업기술원의 검증을 거친 정보로서 신뢰도 또한 높다. 하지만 사업장별로 정보가 공개되는데다, 업종별 지정된 자율공개 항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정보 공개 규정 위반시 제재도 일반 기업공시와 비교해 턱없이 낮다. 현재 환경정보 공개제도가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사업보고서나 거래소 공시 기능을 대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미국 SEC 기후공시 규칙안과 비교했을 때 적어도 현재까지의 환경부 정보공개는 기업 전반에 걸친 기후 리스크를 식별·평가·관리하는 정보라기보다 기업의 사업장별 환경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⁴⁸ 한국거래소는 ISSB의 ESG(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벤치마크해 제정될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KSSB)에 따른 공시와 관련해 사업보고서에 포함시켜 통합 보고할 필요는 없으며, 2025년 이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거래소, "ESG 공시 '사업보고서'에 통합할 필요 없어"(2022. 7. 8.), ESG 경제.

앞으로 환경정보 공개제도가 단일한 기업의 환경공시 제도로 구축될지 아니면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의 ESG 공시와 함께 이원화되어 운영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ESG 공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만큼 2~3 년 내 국내기업은 CFO 책임 하에 기업의 기후 위험·기회 관리 역량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공시 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기업들은 사전에 SEC 가 제안한 기후공시 규칙안을 참조하여 TCFD 에 따라 기업의 기후대응 체계와 목표를 점검하고, 자회사나 주요 협력사의 기후 리스크까지 고려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LAWnB Legal Essential Report Vol.10

LAWnB IP Exclusive Report:

2022 년 ESG 동향 및 주요 내용

투스론티터 로앤비

2022.10.31

COPYRIGHT©LAWNB, THOMSON REUTERS. ALL RIGHTS RESERVED.

2022 년 ESG 동향 및 주요 내용 LAWnB IP Exclusive Report 는 로앤비의 [로펌 리포트] 자료를 엮어 발행하였습니다. 로펌리포트는 각 로펌의 동의 하에 본문을 게재하였습니다. 본 자료의 무단전제 및 상업적 재배포를 금지합니다.